

연구용역 보고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2014. 3. 17.

제 출 문

민주정책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최종 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4. 3. 17.

연구책임자: 정 상 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정 상 호(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자: 조 근 식(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최 근 호(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제 목 차 례>

[요 약]	i
1. 정책과제	i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
2) 주요 발견	ii
(1) 기초자치단체	ii
(2)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효과	vii
(3) 사회복지 지출의 영호남 비교	xi
I. 연구 목적 및 방법	1
1. 연구 배경	1
1) 선거 및 정책 이슈로서 사회복지의 중요성 대두	1
2)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의 편차 발생	2
3)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	3
2. 선행연구 검토	5
1) 복지국가 시대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부재	5
2) 국내에서의 논쟁은 진행 중	7
3) 기존 연구의 한계	10
3. 연구방법론	10
1) 연구개요	10
2) 연구대상	14
3) 분석방법	15

II. 정당과 사회복지의 관계: 기초자치단체	17
1. 기초자치 단체장과 복지지출 비율의 상관관계	17
1) 기초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18
2) 기초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의 관계	23
(1)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분야	23
(2)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미친 분야	28
2. 지방의회와 복지지출 비율의 상관관계	30
1) 기초의회와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32
2) 의회 다수당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의 관계	35
(1)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분야	35
(2)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미친 분야	40
III. 정당과 사회복지의 관계: 광역자치단체	43
1. 광역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43
2. 광역단체장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의 관계	45
1)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분야	45
2)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50
3. 광역 지방의회와 복지지출 비율 비교분석	52
1) 광역의회 다수당과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52
2) 광역단체장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	55
IV. 정권교체와 지역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58
1. 사회복지와 정권교체의 효과	58
1) 기초자치단체의 정권교체와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59
2) 정권교체와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	61
2. 지역과 사회복지	66

1)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66
2)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영호남 비교	70

V. 정당과 사회복지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76

1. 기초자치단체 인과관계 분석 76

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76
2) 기초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78
3)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80
4) 기초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83
5) 기초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85
6) 기초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87
7) 기초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89
8) 기초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91
9) 기초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93
10) 기초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95
11)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97

2. 광역자치단체 인과관계 분석 99

1) 광역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99
2) 광역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100
3)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102
4) 광역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104
5) 광역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106
6) 광역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107
7) 광역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108
8) 광역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110

9) 광역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111
10) 광역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113
11)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114

VI. 결론: 시사점 및 함의 116

1. 정당의 정책 분화를 확인	116
2. 정권교체의 효과를 지방차원에서 확인	116
3. 노인 및 장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	117
4.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호남	117
5. 대표 정책의 발굴이 필요	118
6. 복지정당으로서의 위상 정립	119
7. 소속 단체장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	119
8. 통합 신당의 복지정책의 지침	119

VI. 보론: 우수 복지 지방정부 121

1. 개요	121
2. 영역별 지출 비율 상위 10% 자치단체 리스트	124
1) 교육지출 비율	124
2) 보건지출 비율	125
3) 사회복지지출 비율	126
4-1) 기초생활보장지원 지출 비율	128
4-2) 취약계층지원 지출 비율	129
4-3)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 비율	130
4-4) 노인·청소년 지출 비율	131
4-5) 노동 지출 비율	133
4-6) 보훈 지출 비율	134

4-7) 주택 지출 비율	135
4-8) 사회복지 일반	136
3. 민선5기 정권교체 기초자치단체 목록	138
1) 한나라당→민주당 정권교체 기초자치단체	138
2) 민주당→한나라당 정권교체 기초자치단체	139
 VII. 참고문헌	 140

<표 차례>

<표 1-1>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대한 정치요인 분석 연구 결과	7
<표 1-2> 연구관련 주요 논문 정리	9
<표 2-1> 무상급식 추진 현황(2012년 현재)	20
<표 2-2> 한 의식물이 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31
<표 2-3> 지방예산 현황: 세출 규모	35
<표 2-4>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결과	38
<표 3-1> 시도지사 선거 결과	44
<표 4-1> 역대 지방선거 결과	58
<표 5-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78
<표 5-2> 기초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80
<표 5-3>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82
<표 5-4> 기초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84
<표 5-5> 기초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86
<표 5-6> 기초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88
<표 5-7> 기초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89
<표 5-8> 기초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92
<표 5-9> 기초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94
<표 5-10> 기초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96
<표 5-11>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98
<표 5-12> 광역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0
<표 5-13> 광역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2
<표 5-14>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4
<표 5-15> 광역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5
<표 5-16> 광역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6
<표 5-17> 광역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8
<표 5-18> 광역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09

<표 5-19> 광역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11
<표 5-20> 광역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12
<표 5-21> 광역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14
<표 5-22>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115

<그림 차례>

<그림 1>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iii
<그림 2>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iv
<그림 3>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v
<그림 4>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v
<그림 5>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vi
<그림 6> 기초단체 정권교체: 교육지출 비율	vii
<그림 7>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viii
<그림 8>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ix
<그림 9>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노동지출 비율	ix
<그림 10>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주택지출 비율	x
<그림 11> 영호남 교육지출 비율	x
<그림 12> 영호남 사회복지지출 비율	xii
<그림 13> 영호남 보건지출 비율	xii
<그림 14> 영호남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xiii
<그림 15> 영호남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xv
<그림 2-1>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19
<그림 2-2>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22
<그림 2-3>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23
<그림 2-4>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24
<그림 2-5>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25
<그림 2-6>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동지출 비율	26
<그림 2-7>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훈지출 비율	27
<그림 2-8>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주택지출 비율	27
<그림 2-9>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28
<그림 2-10>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29
<그림 2-11>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30

<그림 2-12> 기초의회 다수당별 교육지출 비율	32
<그림 2-13> 기초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33
<그림 2-14> 기초의회 다수당별 보건지출 비율	34
<그림 2-15> 기초의회 다수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36
<그림 2-16> 기초의회 다수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37
<그림 2-17> 기초의회 다수당별 노동지출 비율	37
<그림 2-18> 기초의회 다수당별 보훈지출 비율	39
<그림 2-19> 기초의회 다수당별 주택지출 비율	39
<그림 2-20> 기초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40
<그림 2-21> 기초의회 다수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41
<그림 2-22> 기초의회 다수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41
<그림 3-1>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43
<그림 3-2>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44
<그림 3-3>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45
<그림 3-4>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46
<그림 3-5>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47
<그림 3-6>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노동지출 비율	48
<그림 3-7>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보훈지출 비율	49
<그림 3-8>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주택지출 비율	49
<그림 3-9>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50
<그림 3-10>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51
<그림 3-11>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52
<그림 3-12> 광역의회 다수당별 교육지출 비율	53
<그림 3-13> 광역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54
<그림 3-14> 광역의회 다수당별 보건지출 비율	55
<그림 3-15> 광역의회 다수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56
<그림 3-16> 광역의회 다수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56
<그림 3-17> 광역의회 다수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57
<그림 4-1> 기초단체 정권교체: 교육지출 비율	57

<그림 4-2> 기초단체 정권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58
<그림 4-3> 기초단체 정권교체: 보건지출 비율	59
<그림 4-4> 기초단체 정권교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60
<그림 4-5> 기초단체 정권교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60
<그림 4-6> 기초단체 정권교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61
<그림 4-7> 기초단체 정권교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62
<그림 4-8> 기초단체 정권교체: 노동지출 비율	63
<그림 4-9> 기초단체 정권교체: 주택지출 비율	63
<그림 4-10>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65
<그림 4-11>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66
<그림 4-12>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67
<그림 4-13>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67
<그림 4-14>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68
<그림 4-15> 영호남 교육지출 비율	69
<그림 4-16> 영호남 사회복지지출 비율	70
<그림 4-17> 영호남 보건지출 비율	71
<그림 4-18> 영호남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72
<그림 4-19> 영호남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72

[요 약]

1. 정책과제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이슈는 ‘복지’

-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복지 이슈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영유아 보육법 개정, 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 지방교부세의 배분 문제,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재원조달과 담당 주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산층과 서민, 대기업과 자영업자, 진보와 보수 정당 사이의 복지 논쟁이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음.
-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체 170개 어젠다 가운데 24%(40개)를 차지했음. 복지는 18%(31개)로 균형발전·도시개발 19%(32개)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 부족한 지방정부 수준의 경험적 데이터

- 기존에는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어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미약하였음.

- 민선 5기가 경과되고 자치선거가 22년을 맞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가 성숙되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개별 지방정부들은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경제와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정책 분야에서 차이를 낳고 있는 핵심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정당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연구개요

- 분석기간: 2008년~2012년 동안 5년 기간 (민선4기와 민선5기를 포괄)
- 분석대상: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 자료: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판과 정부통계연감
- ‘사회복지’ 지출의 정의: 정부의 공식 자료인 행정통계연감 중 공식 세출항목 중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 3대의 대분류를 지칭함.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예비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과학기술	사회복지	교육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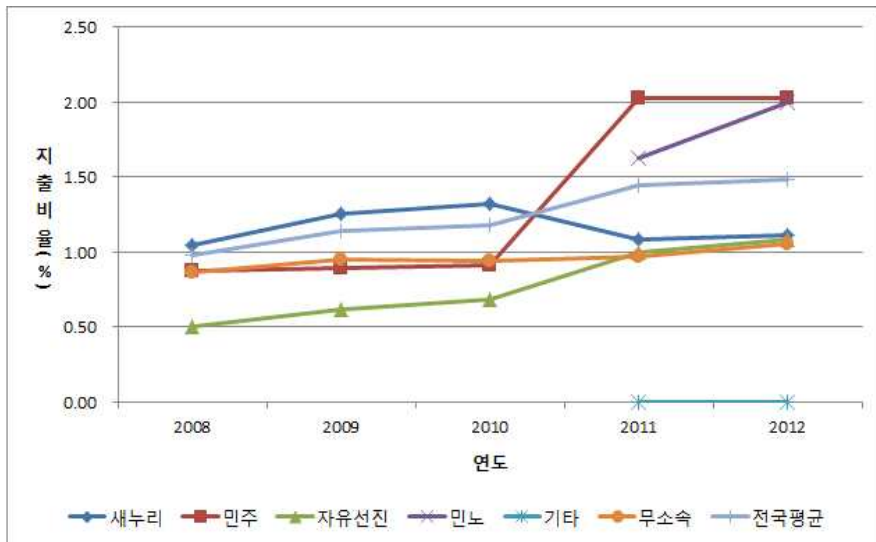
2) 주요 발견

(1) 기초자치단체¹⁾

○ 교육

- 이번 조사를 통해 두 정당의 차이가 큰 정도는 **교육 > 사회복지 > 보건**으로 드러났음.
- 민선 5기부터 민주당 기초단체장의 평균 교육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의 지출 비율을 초과하였음. **패널분석 결과, 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일 경우 새누리당 보다 0.62%의 교육지출 비율 증가가 확인됨.**
-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책 효과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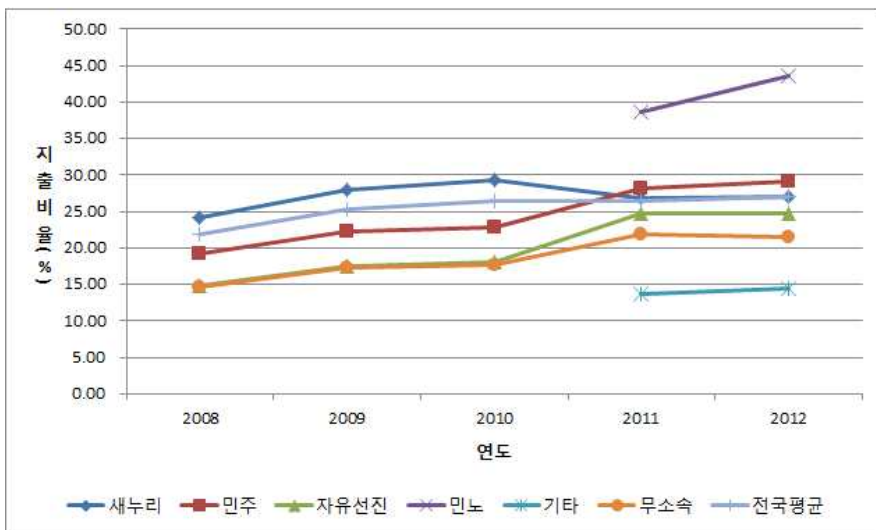


1) 이하 설명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임. 하지만 서술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됨.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민선5기에서 민주당이 역전시킨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교육지출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의 격차는 크지 않음.
- 패널분석 결과, 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일 경우 새누리당보다 1.34%의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증가가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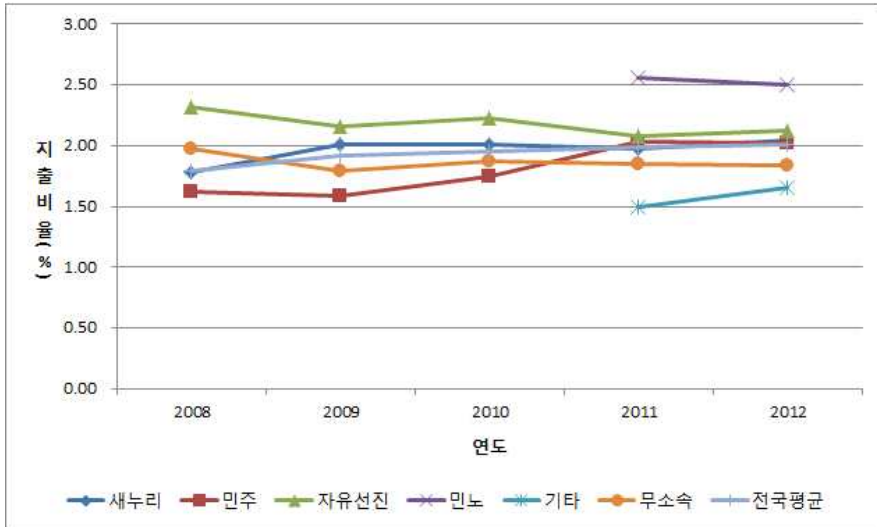
<그림 2>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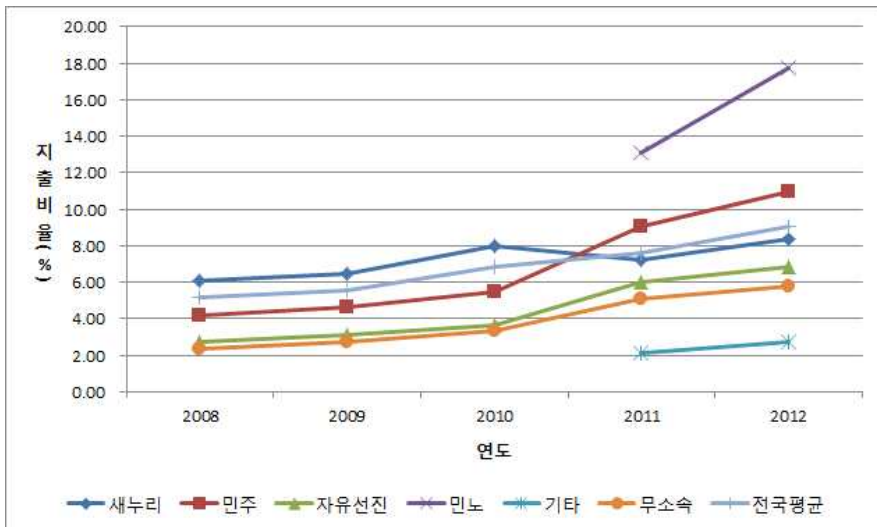
- 보건지출 비율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보다 새누리당 집권지역과 민주당 집권지역 사이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음.
- 패널분석 결과, 기초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른 보건지출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그림 3>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 보육/가족/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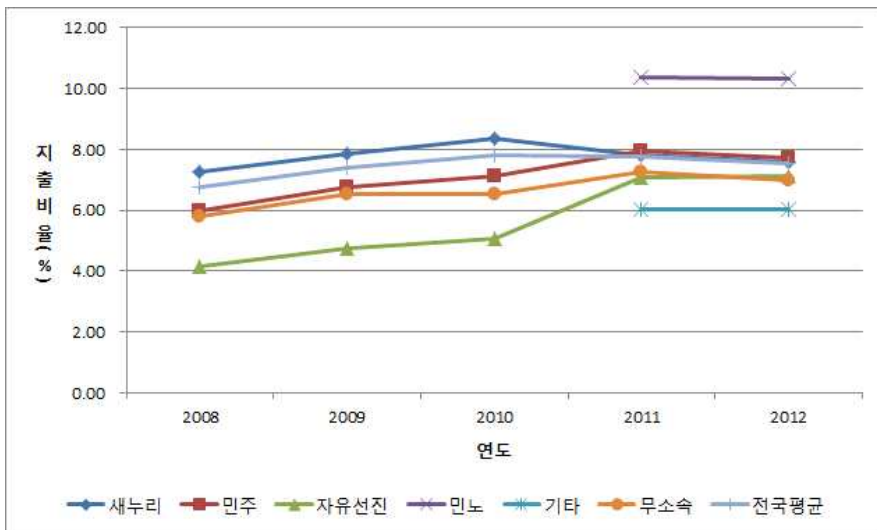
<그림 4>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비율은 민주당 집권지역의 지출비율 증가가 가장 명확하게 확인되는 분야로 밝혀짐.
- 패널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일 경우 새누리당보다 2.20%의 지출비율 증가가 확인됨.

○ 노인/ 청소년

<그림 5>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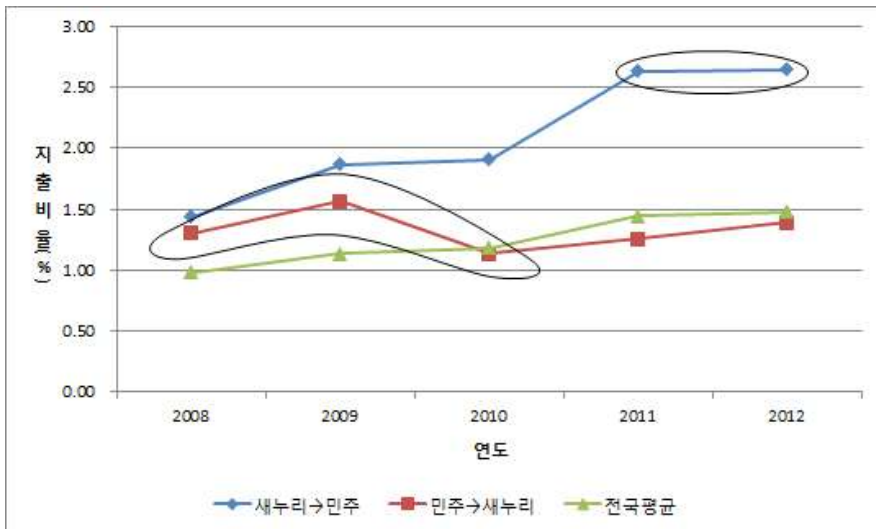
-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노인·청소년 정책임. 이 분야의 지출 비율은 분명한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다만, 민선5기부터 새누리당 집권지역과 민주당 집권지역의 지출격차가 거의 없어짐. 두 정당이 집권한 지역은 전국평균 지출비율과 유사함.
- 패널분석에서도 두 정당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비율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2)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효과²⁾

○ 정권교체와 교육

- 새누리당→민주당 지역은 정권교체 이후(2011) 교육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교육지출 증가가 전국평균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기초단체 정권교체: 교육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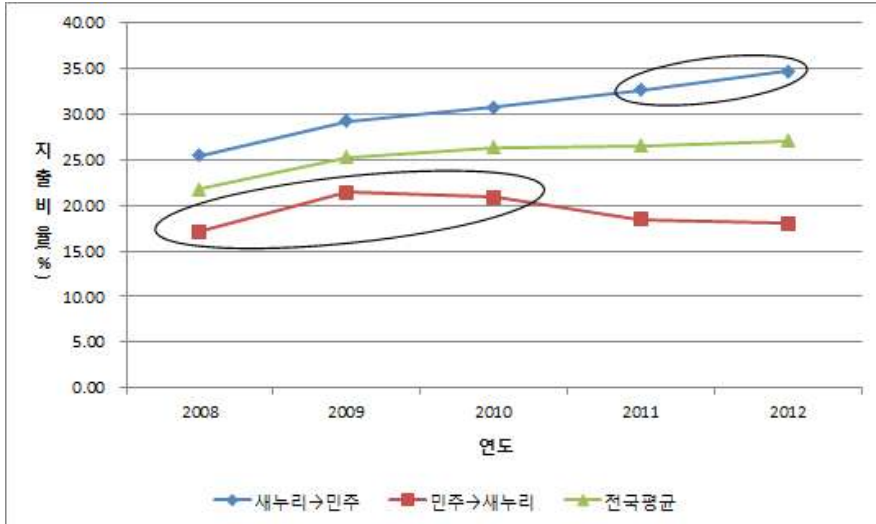
○ 정권교체와 사회복지

- 새누리당→민주당 지역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출 비율이 꾸준히

2) 정권교체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사례의 비대칭이라는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사례만을 다룰 것임. 또한, 본 연구의 서술을 인과관계가 아닌 추이 및 현황으로 이해할 것을 당부드림.

증가하고 있음. 그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을 앞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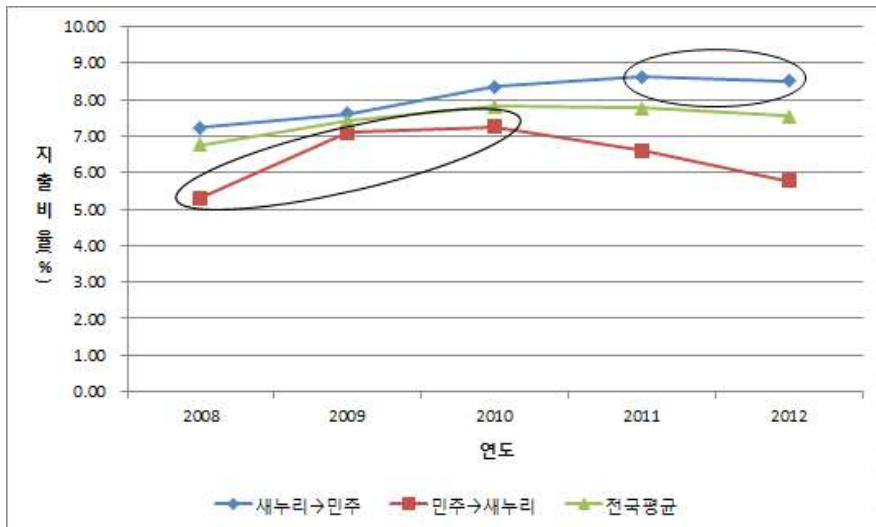
<그림 7>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 정권교체-노인/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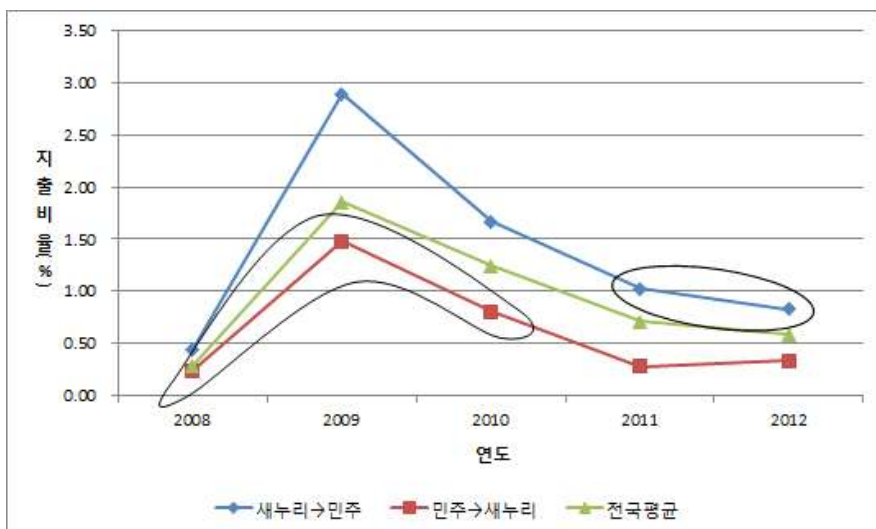
- 노인·청소년 지출비율은 다른 영역과 달리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 않음. 오히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감소하고 있음.

<그림 8>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 정권교체-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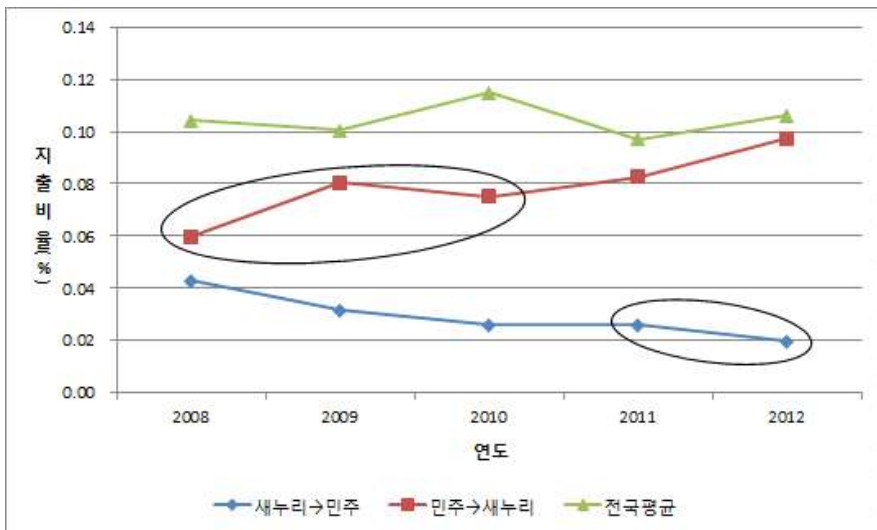
<그림 9>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노동지출 비율



- 정권교체 이후 전체적인 하락율과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는 분야임. 오히려 전국적인 평균 감소율보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한 지역에서 하락 폭이 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권교체-주택

<그림 10> 기초단체장 정권교체: 주택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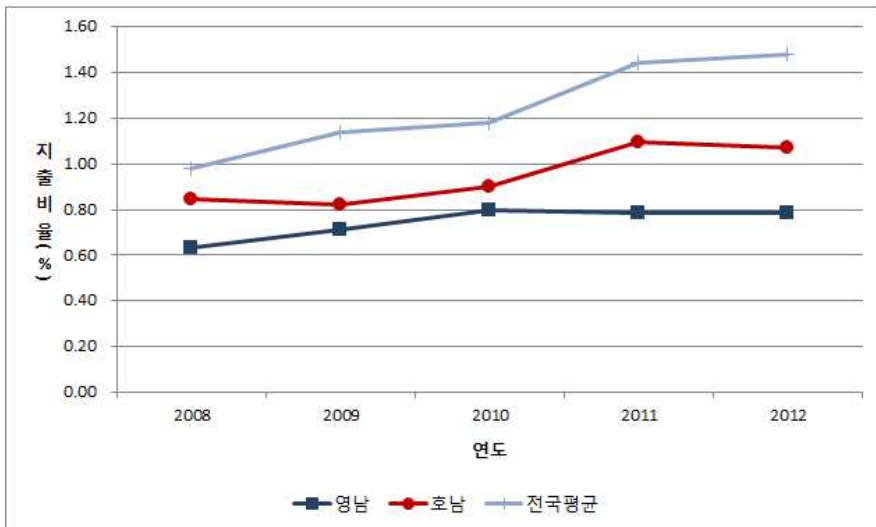
- 전국 평균은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면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새로 단체장을 맡게 된 지역에서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원인이 민주당 단체장들의 토목 및 건설에 대한 혐오(이명박 정부의 토건국가에 대한 반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의 결여 때문인지는 보다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 지출의 영호남 비교

○ 교육 지출-영남과 호남

- 영남과 호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이 밝혀짐. 정당의 경쟁적 관여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키이(Key, 1950)의 명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에 미치는 정당의 경쟁적 효과가 처음으로 밝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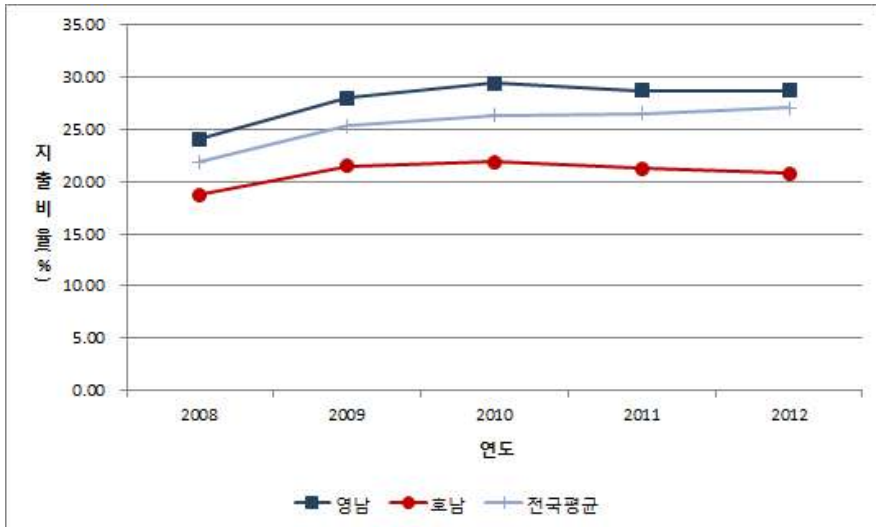
<그림 11> 영호남 교육지출 비율



○ 사회복지 지출-영남과 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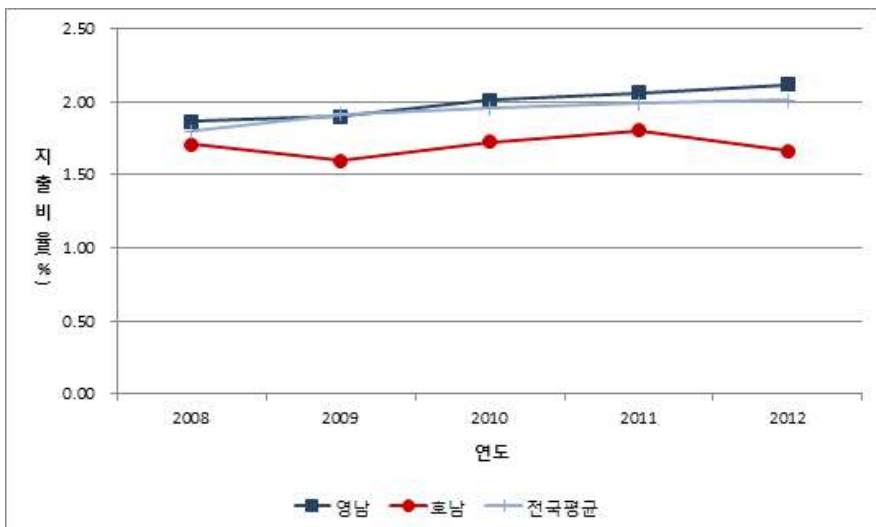
-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임. 영남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호남은 전국과의 격차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
- 권역별로 영남보다 높은 곳은 서울뿐이며, 전국 평균의 추이와 달리 영호남 모두 2010년부터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12> 영호남 사회복지지출 비율



○ 보건 지출-영남과 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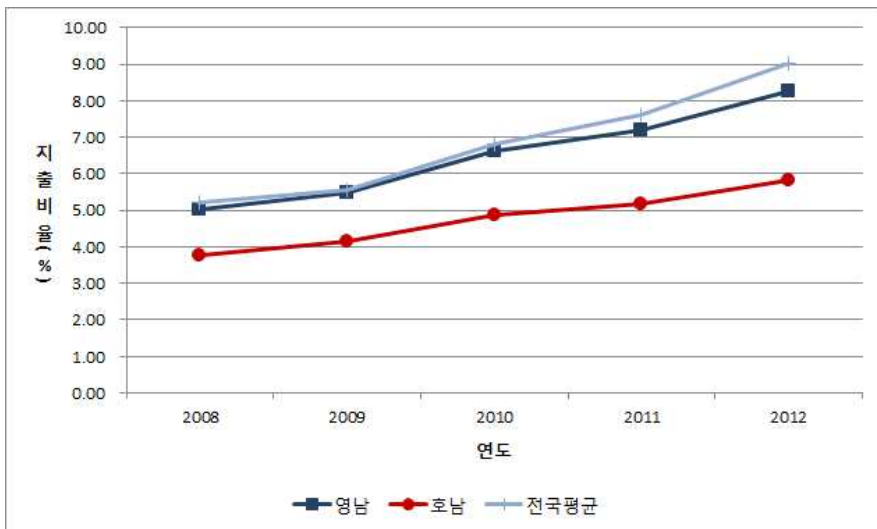
<그림 13> 영호남 보건지출 비율



- 영남은 전국 평균 수준의 지출 보다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호남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영남과 호남

<그림 14> 영호남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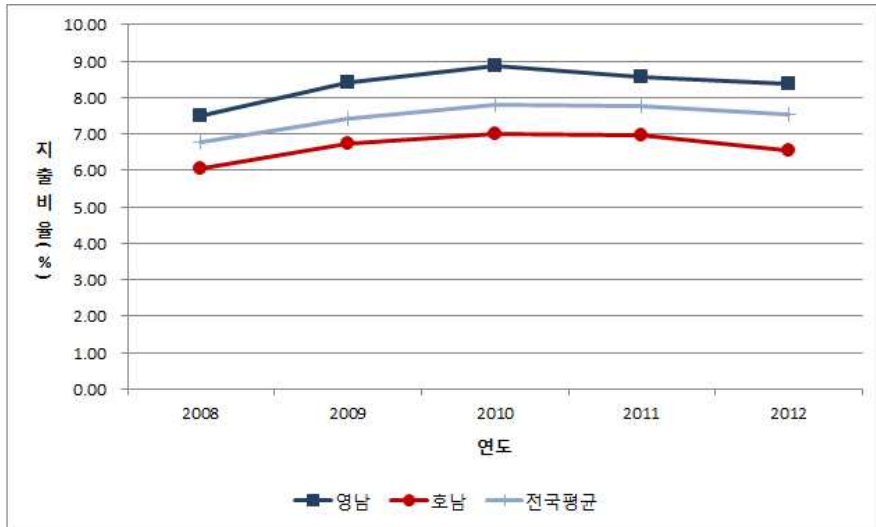


- 지출 비율의 상승폭(기울기)은 두 지역 모두 유사. 그러나 영남의 지출비율이 호남보다 높음.
- 영남보다 지출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뿐임

○ 노인·청소년 지출-영남과 호남

- 영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청소년 지출 비율을 보임.
- 반면, 호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15> 영호남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1) 선거 및 정책 이슈로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중요성 대두

- 복지정치의 전환점으로서 2010년 6.2 지방선거
 - IMF이후 주요 선거 및 정책에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정당의 정책 변화가 급물살을 이루고 있음.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복지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의식에 내재된 이중성 즉 복지책임 주체로서 국가를 설정하고 재정 증가를 주장하면서도 복지의 실천의지 즉 증세에는 완강히 반대하는 인식간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왔음(변미희 2002 75-89).
 -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유권자들의 복지 인식에 급격한 전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010년 4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개발과 지역복지를 내세운 후보자 중에서 무려 응답자의 3명중 2명이 복지(65.1%)를 선택. 또한 한국메니페스트본부가 2009년 말 18,000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에서 국민들은 성장중시(28.7%)보다 분배우선(72.3%)을 선호하였음.
 - 친환경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등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

상하였고, 당시 민주당은 3無1半(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음. 심지어 보수성향의 집권 한 조차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2014년 6.4 지방선거와 복지

-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복지 이슈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영유아 보육법 개정, 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 지방교부세의 배분 문제,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재원조달과 담당 주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산층과 서민, 대기업과 자영업자, 진보와 보수 정당 사이의 복지 논쟁이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음.
-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체 170개 어젠다 가운데 24%(40개)를 차지했음. 복지는 18%(31개)로 균형발전·도시개발 19%(32개)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2)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의 편차 발생

○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책 경쟁의 시작

- 기존에는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어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미약하였음.

- 사회복지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고, 재량권과 예산의 부족으로 모든 지방 정부가 유사한 제도적 패턴을 유지하였음.
- 민선 5기가 경과되고 자치선거가 22년을 맞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가 성숙되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개별 지방정부들은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경제와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무상급식 등 지방정부의 몇몇 정책들은 제도적으로 유사하지만 지출 수준이나 수혜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같은 사회서비스 역시 지방정부별 편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정책 분야에서 차이를 낳고 있는 핵심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

3)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

○ 정치적 요인과 사회복지 정책의 편차

-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는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 특히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중 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관계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정당 중심으로 파악하고

자 함.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의 성격이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 분석

-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라는 개념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두 개의 권력 단위가 핵심이며, 이 둘의 상호 관계 및 이 둘이 기초 및 광역수준, 그리고 중앙정부와 맺는 상호 관계를 지칭하는 것임.
- 정치적 변수에 근거한 권력구조를 독립변수로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를 분석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편차, 지방의회 경쟁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편차, 자치단체장-지방의회 관계에 따른 지방정부 권력구조 유형화, 정치적 변수 외에 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 등을 통제하여 권력구조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 규명

- 정당경쟁은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Key(1950) 가설의 핵심임. 그는 1940년대 미국 남부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당경쟁이 사회정책의 확대를 가져왔음을 연구. 정당간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는 반면, 비경쟁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빈민층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음. 왜냐하면, 정당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이 지배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정책은 서비스를 축소하고 세금 인하를 원하는 기득권층의 요구에 편승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러한 가설이 우리의 경우에도 부합하는지를, 지방선거의 경쟁 수준과 정당의 성격을 판별하여 검증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1) 복지국가 시대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부재

○ 기존 연구의 분류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은 주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음. 이들은 수요요인과 재정적 재원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제도요인, 그리고 정치요인으로 나누어 복지지출규모를 설명하고 있음(장동호 2007; 조현호·주상현 2012; 오수현·강인성 2013; 함영진 2013).
- 이중 정치요인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이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에 반해 정치요인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최근에서야 정치요인이 부상(지병문·김용철 2002; 김지윤·이병하 2013)하고 있는 실정임.

① 수요요인

-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가져오는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의미(예: 인구수, 인구밀도, 노인인구수, 5세미만인구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장애인수 등). 사회복지의 수요요인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수요 인구수에 따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경직성 복지. 사회복지비의 경직성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자

들이 지방정부의 정파적 자율성과 그에 근거한 복지균열의 효력을 의문시하는 경향이 있음.

② 재정 요인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비율과 같은 변수를 중시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전체 예산 중에 자주재원과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구성. 또한 주민이 내는 세금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많아지므로 1인당 지방세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증가.
- 그런데,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조세구조와 재정지출 구조상 지방정부가 갖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매우 제약됨.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축소된다고 여겨져 왔음.

※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87%가 국고보조사업이고 13%만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임(최성은 2013, 6).

③ 정당효과 모형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당정치와 정치적 행위가 사회정책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이라 할 수 있음(Korpi 1983; Kleinman, Eastall, & Roberts 1990, 405; 박미옥 2006, 142).
- 이 이론은 역사적으로 유럽정치에서 이념적 대중정당의 등장과 연관됨.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정당이 나타나고, 사회와 정치는 계급적 이익과 이념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위해 정당을 통해 매

개함. 이 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은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 역으로 사회적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우파 혹은 보수 정당은 복지보다 성장을 우선.

- 의회나 정부의 소속 정당이 재정분배 패턴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형. 로즈는(Rose 1984) 소속 정당이나 정당의 선호에 따라 재정 지출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루비니와 삭스처럼(Rubini and Sachs 1989) 두 변수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음.

2) 국내에서의 논쟁은 진행 중

① 기존 연구의 정리: 정당효과 부정론

- <표 1-1>에 제시한 연구들은 정치요인으로서 단체장의 당적이거나 지방의회의 정당별 의석율을 변수로 적용한 행정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들을 정리한 것임.

<표 1-1>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대한 정치요인 분석 연구 결과

정치요인	연구자	분석사례	종속변수
기초단체장 당적	함영진 (2013)	기초지방정부 228 개 (2012년)	노동관련 기초지방정 부 자체사업예산 총액
	김경준·함영 진·이기동 (2013)	기초지방정부 228개 (2012년)	행사·행정성 사업예산 을 제외한 복지비 지출
광역단체장 당적	서상범·홍석 자(2010)	광역지방정부 16개 (2005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
	조수현 (2009)	광역지방정부 16개(2003~2007)	사회보장비 지출비율
	진재문 (2006)	광역지방정부 16개(1995-2003)	사회보장비 지출비율
지방의회 정 당별 의석율	장동호 (2007)	기초지방정부 226개(1995~2004)	사회보장비 지출비율

-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의 당적이나 지방의회의 정당별 의석율이 사회복지 지출과 통계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진재문은 “지방자치 10년간의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은 지방정부나 지방정치인들의 복지 정책 선택이 가치는 타당성을 약화”(2006, 27)시킨다고 주장. 장동호(2007, 343)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치체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의 확대에서 우파와 구분되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좌파소속 지방의회의원의 모호한 정체성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주장.
- 그 외 다른 학자들 역시 정당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토대로 단체장 및 기초의회의 정파성 및 정책 지향의 차이가 복지정책결정의 중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이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다양한 복지수요 요인에 의거한 지역정책이 추진되었다고 주장.

② 정당 효과 긍정론

- 지병문과 김용철은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선거 당시 경쟁이 심했던 단체장의 경우 지방정부가 사회개발비에 지출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입증(지병문·김용철 2002).
- 김지윤·이병하(2013)의 최근 연구는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회에 정당성(partisanship)이 형성되며, 이러한 정파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경험적으로 검증.
- 최근의 가장 주목할 연구는 김범수·노정호(2013)의 연구임. 그들은 민주당(진보 정당 - 분배 우선)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가 한 (보수 정당 - 성장 우선)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보다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과, 지방의회에 한 의석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해명.

<표 1-2> 연구관련 주요 논문 정리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결론	
김미숙 정익중 김정숙 (2012)	재정자립도, 지역유형, 주민등록인구수, 단체장의 소속정당,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영유아인구 비율, 1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 등록 장애인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보육예산 및 비중, 아동예산 및 비중, 청소년예산 및 비중
	-재정자립도와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정(+)의 영향	
	-복지수혜대상자별 인구비율은 유의미한 영향 없음.	
	-세입부문에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분권교부세가 정(+)의 영	

김승연 홍경준 (2011)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비중, 기초자치단체 정당구조, 인근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비 수준	사회보장비 비중
장동호 (2011)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채무, 문화기반시설수, 영유아 보육시설수, 노인인구 비율, 수급자 비율, 교육수준, 외국인 비율	일반행정비 제외한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서상범 홍석자 (2010)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 선거투표율, 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전년도 복지비지출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록장애인 비율, 소년소녀가장 비율, 노인인구 비율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액, 사회복지비지출 비율
김미혜 박은주 김민경 (2009)	재정자립도, 지역구분(지방정부 유형), 전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경제개발예산 비중의 증감분, 기초수급자 비율	사회보장예산 비중 증감분
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 시군더미(기초자치단체 유형), 기초자치단체장 경쟁지수, 지방의회의원 경쟁지수, 지방의회 여성의원비율, 선거더미, 노인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비 수혜자수 -재정자립도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부(-)의 영향 -인구비율 요인들은 정(+)의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	1인당 사회복지지출
김윤수 류호영 (2012)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지수요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장애인수 -세입구조측면에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3) 기존 연구의 한계

- 그런데, 앞의 연구들은 2012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위치한 69개의 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계열 분석기간을 2008년~2011년으로 한정.

- 또한, 이 연구가 기초지방의회 정당공천제의 효과에 주목하여 정치요인으로서 기초지방의회의 의석분포에 초점을 두었으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가장 큰 정치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정부 단체장의 당적 즉 단체장의 당파성을 다루지 않은 한계(김지윤·이병하 2013)들을 안고 있음.

3. 연구방법론

1) 연구개요

○ 연구시기

- 분석기간: 2008년~2012년 동안 5년 기간 (민선4기와 민선5기를 포괄)
- 분석대상: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 자료: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판과 정부통계연감

○ ‘사회복지’ 지출의 정의

- 정부의 공식 자료인 행정통계연감 중 공식 세출항목 중 사회복지 / 교육/ 보건 등 3대의 대분류를 지칭함.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예비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과학기술	사회복지	교육	보건	

-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복지 항목을 기초생활보장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하였음.

사회복지			교육	보건
총지출	<div> <div>사회복지 지출</div> <div>보건 지출</div> <div>교육 지출</div> </div>	<div> <div>기초생활보장 지출</div> <div>취약계층지원 지출</div> <div>보육, 가족 및 여성 지출</div> <div>노인, 청소년 지출</div> <div>노동 지출</div> <div>보훈 지출</div> <div>주택 지출</div> <div>사회복지일반 지출</div> </div>	<div> <div>-유아/초등교육/고등교육/</div> <div>-평생/직업교육</div> </div>	<div> <div>-보건/의료</div> <div>-식품/의약/안전</div> </div>

- 사회복지지출 세부항목 중 사회복지일반의 하위 항목들은 기초자치단체마다 상이함. 사회복지일반 지출 하위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광진구의 사회복지일반 사례를 제시

사회 복지 일반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복지기반 구축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희망나누기 이웃사랑 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복지기동반 및 OK 주민서비스
			취약계층 사례관리 강화
			서울형 그물망(멘토링) 복지 사업추진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
			공인근무(사회복무) 등 운영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례관리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희망온돌 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 활성화
		긴급 복지 지원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보조 사업

- 현재 지방정부 세출항목은 14개 대분류와 52개 소분류로 구분됨.

세출항목	1.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2.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3.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4.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재및관광일반
	5.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7.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8.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9.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10. 수송및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1.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12.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13. 예비비	예비비
	14. 기타	기타

2) 연구대상

○ 권력구조의 대상

-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소속정당은 유효정당 중심으로 5개 분류
 - ※ 이는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기타정당, 무소속으로 분류하였음.
- 새누리당 계열은 현 새누리당 외에 기존의 한나라당과 친박계열이 포함되었음. 통합민주당은 현 새누리당 외에 기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포함되었음. 자유선진당은 현 자유선진당 외에 자민련, 국민중심당, 국민중심연합이 포함되었음.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은 해당 정당만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의 정당들은 기타정당으로 분류하였음.
- 지방의회의 정당경쟁의 판별은 지방의회 다수당 측정, 단점정부 혹은 분점정부 지방정부를 확인.
- 지방의회 다수당은 과반수 정당이 아니라 의회 내 의석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구분하였음.
- 지방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비율) 변화를 분석
- 정권교체는 민선5기 지방선거 기준임.
 - ※ 민주당 → 새누리당 정권교체 시 사회복지지출 (비율) 변화
 - ※ 새누리당 → 민주당 정권교체 시 사회복지지출 (비율) 변화
-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 새누리당으로 정권교체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55개이며 새누리당 →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개임

3) 분석방법

○ 기술통계 분석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회복지지출 추세를 분석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지출 추세 차이를 분석
- 지방의회 다수당별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지출 추세 차이를 분석
- 분석은 지방정부 세출의 상위 항목 중 교육지출, 사회복지지출, 보건지출을 분석
-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하위 항목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출, 취약계층지원 지출,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 노인·청소년 지출, 노동 지출, 보훈 지출, 주택 지출, 사회복지일반 지출을 분석

○ 추론통계를 통한 인과관계 분석

- Newey-West 추정법을 사용하여 정당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 Newey-West 추정법은 횡단면적 교란요인과 시계열적 교란요인을 통제하는 패널분석 기법의 하나임
-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5년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나,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면적 교란요인과 시계열적 교란요인에 대한 통제는 필수
- 또한 Newey-West 추정법은 이분산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교정하면서, 회귀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수를 추정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용이성이 보장됨.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 적합한 방식
- 이러한 추정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치변수, 즉 자치단체장의 소

숙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정당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함
- 재정적 요인으로는 1인당 총세입과 재정자주도가 포함됨
- 수요 요인으로는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생산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장애인 인구 비율이 포함됨
- 이를 통해, 재정적 요인과 수요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당별 사회복지지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함
- 주요 정치변수인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의회 다수당, 그리고 정당별 단점정부 구성의 변수는 더미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정치변수에서 준거집단(base group)은 새누리당으로 설정하였음

II. 정당과 사회복지의 관계: 기초자치단체

1. 기초자치 단체장과 복지지출 비율의 상관관계

○ 강시장형 의회(strong mayor-council)

-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권력구조의 특성은 강력한 강시장형 의회임. 강시장형 의회에서 시장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광범한 임명권이 부여되며, 자신의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예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행정적 권한의 거의 전부를 영위하고, 부서장들을 임명·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반면 약시장형 의회에서 시장은 선출된 의원들 사이에서 선출됨. 시장의 임명권은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시의회가 입법적 권한과 행정적 권한 모두를 소유함(제임스 번즈 2001, 289).
- 한국의 강시장형 의회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시장은 정책추진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지방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권을 통해 관료집단을 종속시켜 놓았고 결국 지방정치의 위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이러한 권력의 배열 탓에 단체장의 권한 남용의 개연성과 견제에 대한 압박이 늘 내재화되어 있음으로써 양 기관이 협력관계보다는 상호 갈등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박종민 1999, 137). 이러한 입장에 선 연구자들은 근본적으로는 기관대립주의를 유럽식의 통합형 정부형태로 전환(이승용 2008)하거나 의결권·감사권·조사권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우 2005: 김순은 1995)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탓에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능력 등 리더십 요인을 제시하여 왔음.

1) 기초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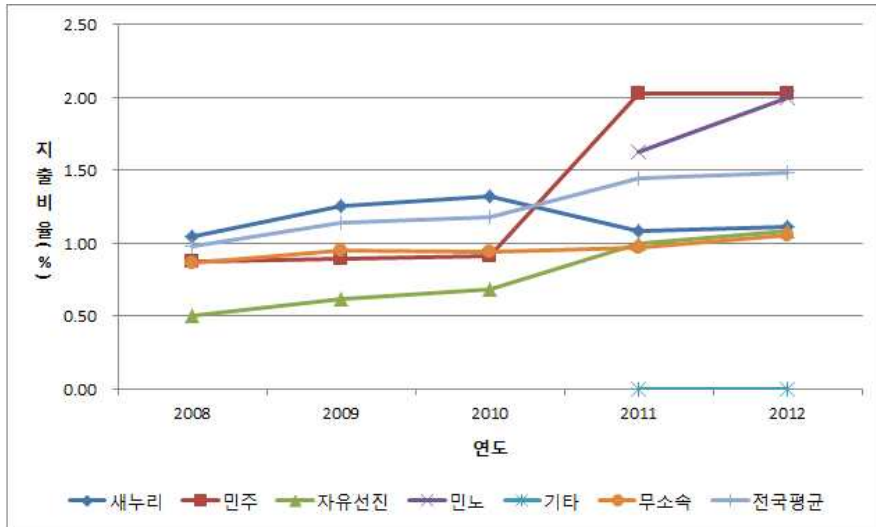
○ 개요

- 이번 조사를 통해 두 정당의 차이가 큰 정도는 교육 > 사회복지 > 보건으로 드러났음.
- 민선 5기부터 민주당 기초단체장의 평균 교육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의 지출 비율을 초과하였음.
-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친환경 무상 급식>의 정책 효과일 것으로 추정됨.

○ 기초단체장-교육

- 민선 5기부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평균 교육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의 지출 비율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짐. 민선 5기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기초단체장이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지출 비율의 증가폭이 상당히 큼. 반면, 이전까지의 교육지출 비율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새누리당 집권지역의 교육지출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그림 2-1>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표 2-1> 무상급식 추진 현황(2012년 현재)

기초 단체장의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기타
전면 급식 89	경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과천, 남양주, 이천, 연천 경북: 군위 경남: 창녕, 하동, 고성, 밀양, 산청, 거창 인천: 옹진군 경북: 고령 충북: 단양, 음성, 제천 충남: 서산, 계룡, 청양, 천안 등 22곳	인천: 서구, 경기: 안양, 안산, 의왕, 구리, 군포, 김포, 성남, 의정부, 부천, 고양, 화성, 하남, 파주, 오산, 충북: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전북: 정읍, 진안, 순창, 고창,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무주, 장수, 임실, 부안, 강원: 정선, 평창, 충남: 논산, 서천, 아산 등 42곳	충남(자): 보령, 금산, 연기, 예산, 당진/인천동구(민노)/ 광주서구(무)/ 영동(무) 보은(무) 옥천(무)괴산(무)/ 충남: 공주(자)태안(무) 부여(자) 홍성(자)경남: 의령(무) 함안(무)달성(무)/ 경기: 가평(무)/ 전북: 김제(무)/ 경북: 울진군(무)/ 경남: 남해군(무) 함양군(무) 함천군(무) 동두천(무) 등 25곳
부분 급식 88	서울: 강남, 송파, 중랑, 서초, 부산: 서구, 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수영, 사상 경기: 양주, 광주,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진주, 사천, 거제, 양산/ 부산: 중구, 영도, 구 동래, 강서구/ 경북: 포항, 울릉, 영천 등 28곳	서울: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용산, 구로, 경기: 평택, 용인, 수원, 광명, 시흥/ 인천: 중구, 남구, 부평, 계양, 서구, 연수/ 강원: 원주, 횡성 / 전남: 나주, 장성, 진도, 영광/ 경남: 김해/ 전남: 목포, 담양, 구례, 고흥, 보성, 장흥, 완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등 48곳	부산: 연제(무) 동구(무) 기장(무)/ 인천: 강화(무) 전남: 순천(무) 광양(무)경남: 통영(무)/ 전남: 여수(무) 곡성(무) 화순(무) 강진(무) 신안(무) 등 12곳
미실시 45	대구: 중구, 남구, 울산: 남구, 동구, 강원: 춘천, 태백, 영월, 화천, 양구/ 경북: 예천, 의성, 상주, 청도, 성주, 청송, 영덕, 봉화 대전: 대덕/ 대구: 북구, 수성, 달서구, 동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양양, 철원 등 28곳	원주, 유성 등 2곳	대전: 중구(자) 대구: 서구(무) 울산: 중구(무) 북구(민노) 경북: 영주(무) 문경(무) 경산(무) 칠곡(무) 영양군(무)대전: 동구(자) 서구(자) 강원: 고성(무) 홍천(무) 강원: 삼척(무) 인제(무) 등 15곳

- <표 2-1>은 현재 무상급식의 전국현황임. 2012년 3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전면실시는 89곳, 부분실시는 8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79.0%에 해당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 48개 시군구는 대부분 새누리당이나 자민련이 집권하고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북에 소재한 시군구임.³⁾

- 무상급식(전면+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정당별 비율은 새누리당이 28.2%, 민주당이 50.8%, 무소속과 기타 정당이 20.9%로 민주당이 절반을 넘고 있음.
- 결국 기초단체 수준에서 두 정당의 교육비 지출 비중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효과로 추정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상당수가 무소속 단체장 지역이라는 점임. 현재 전국에는 37개(16.2%)의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인데, 이중 10곳이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에서 무소속 단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를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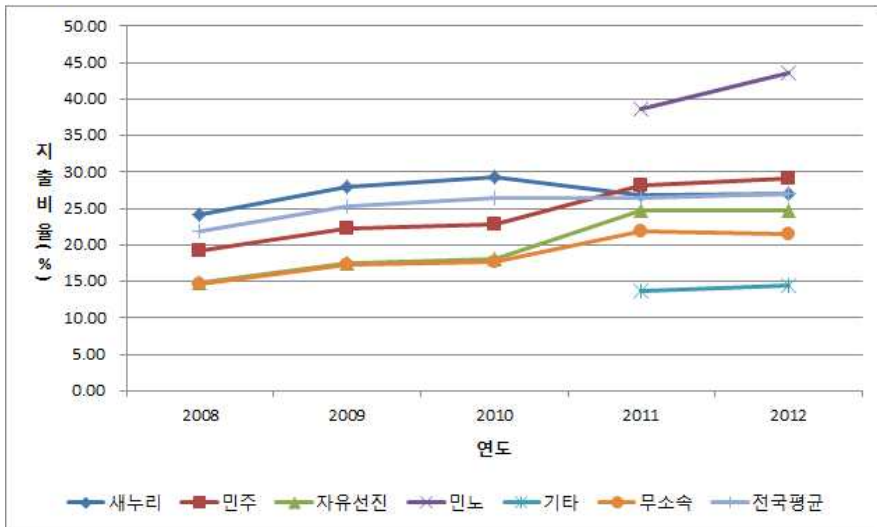
○ 기초단체장-사회복지

- 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민선5기에서 민주당이 역전시킨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교육지출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의 격차는 크지 않음.
- 그러나 민선5기 이후 새누리당 집권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3) 주의할 점은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꼭 당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당시 한 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인천 옹진군, 경기도의 이천시와 연천군, 경남의 고성군,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은 당론을 거스르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음. 반대로 민주당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지방의회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전남의 목포 등 8개 시군은 부분급식만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무상급식이 또 다른 중요한 정책결정의 주체인 교육청과 연관되어 있고 단체장의 의지, 해당 자치구의 재정능력 등 여타의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감소한 반면, 민주당 집권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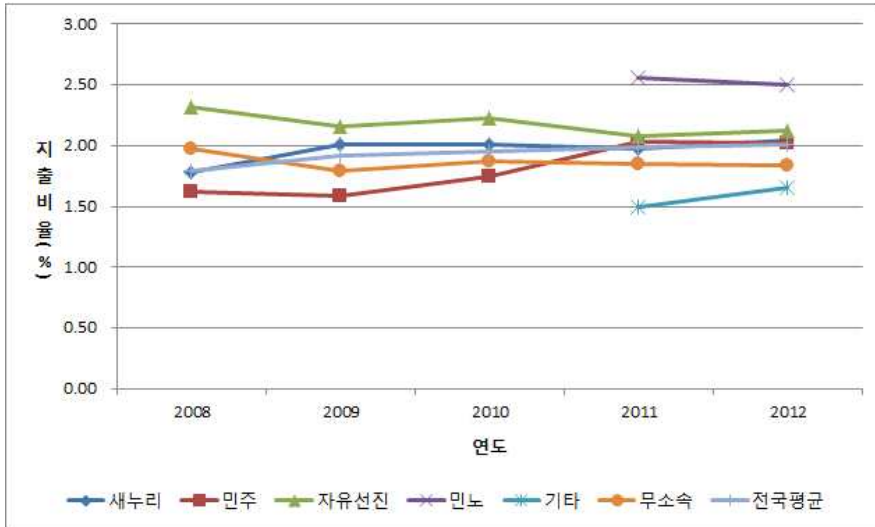
<그림 2-2>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 기초단체장-보건

- 보건지출 비율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보다 새누리당 집권지역과 민주당 집권지역 사이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음. 오히려 자유선진당 집권지역의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새누리당 집권지역은 2009년 이후 유사한 수준의 지출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집권지역은 2009년 이후 지출비율의 증가 추세가 확인됨. 다만, 2012년은 증가추세가 주춤

<그림 2-3>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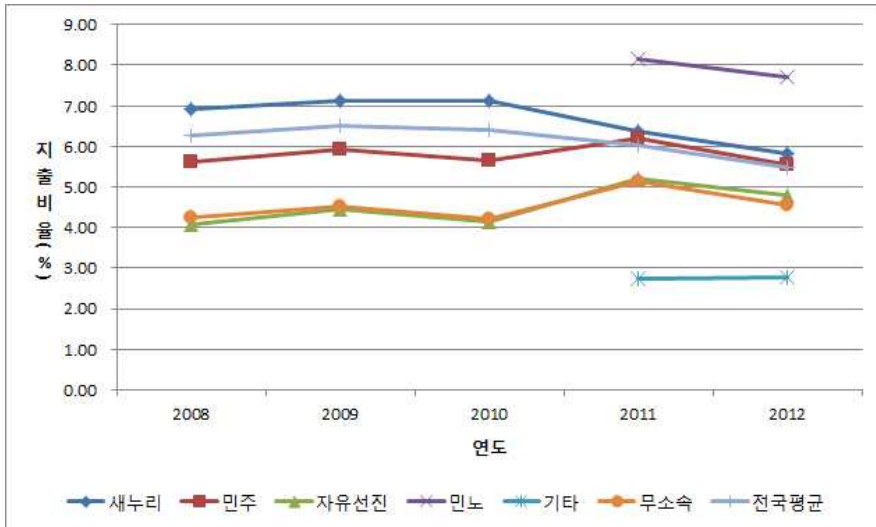
2) 기초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의 관계

(1)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분야

○ 기초단체장-기초생활보장 비율

- 기초생활보장 비율은 정당별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음. 이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에 따른 지출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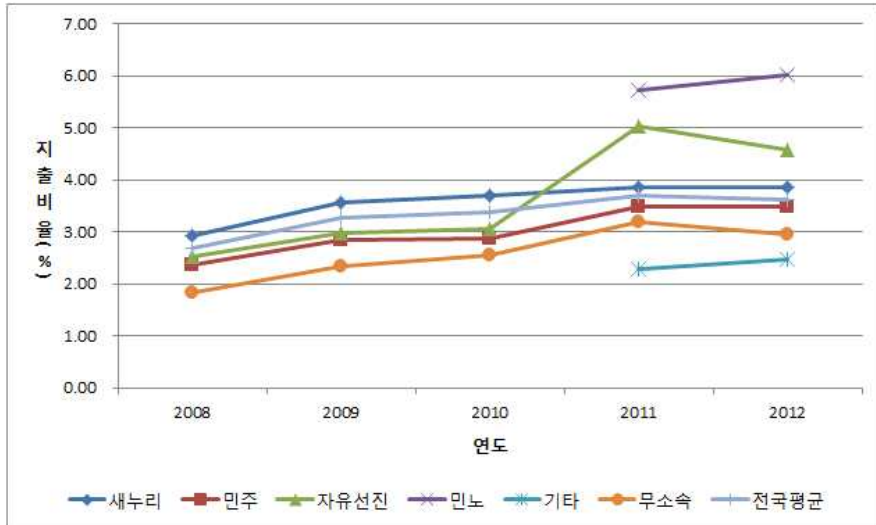
<그림 2-4>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 기초단체장-취약계층 지원 비율

- 취약계층의 지원 비율 역시 민선5기 이후 새누리당 집권지역과 민주당 집권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지출비율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새누리당 집권지역은 유사한 수준의 지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주당 집권지역은 2011년 상승하여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2010년 이후 자유선진당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이의 원인으로 취약계층 지원 비율이 높은 상위 10% 안에 자유선진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2012년을 기준으로 20위 안에 대전 서구(3위), 대덕구(7위), 동구(11위), 중구(12위)가 포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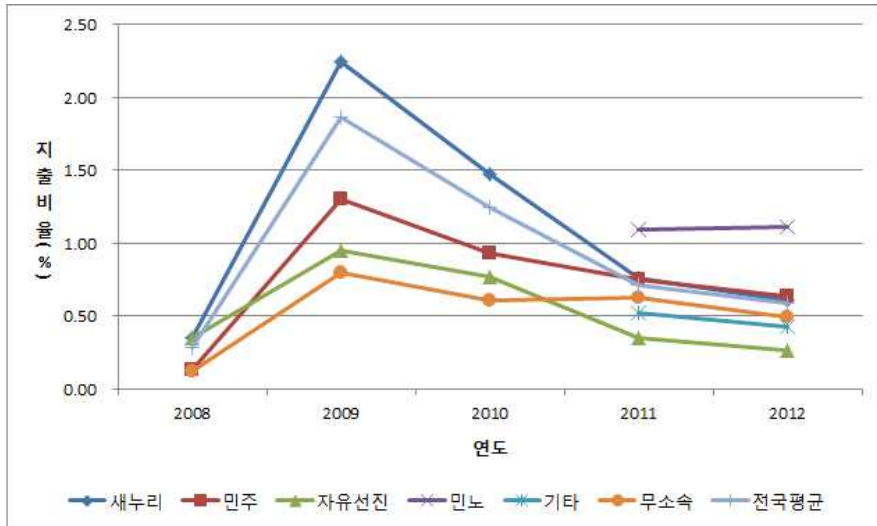
<그림 2-5>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안 중 복지사업에 책정된 비율이 동구가 63.28%, 서구 60.39%, 중구 59.3%, 대덕구 52%, 유성구 46.27% 순으로, 전체 예산의 평균 56.24%를 차지하고 있음. 대전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동구가 1만 2075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1만 931명, 중구 9309명, 대덕구 7373명, 유성구 4482명 등 순으로, 특히 동구와 유성구는 3배 상당 차이나는 수준임.
- 각 구별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시 서구 2만 5110명, 동구 2만 3144명, 중구 2만 1720명, 대덕구 1만 3974명, 유성구 1만 1570명 등 순으로, 모두 9만 5518명에 달하고 있음. 이 중 동구와 중구가 모두 4만 4864명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대전일보』 . 2013.12.26).
- 이러한 현상은 새로 개발된 신도심보다 원도심권에 해당하는 동·중구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쏠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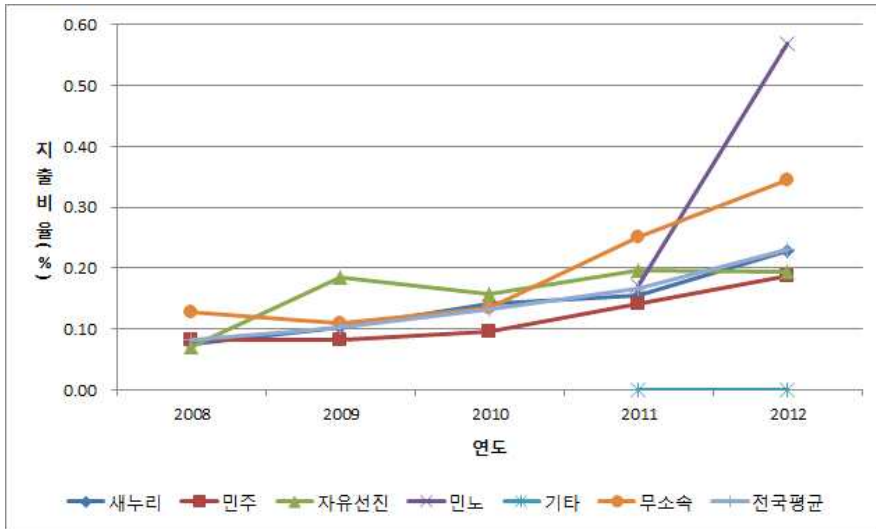
○ 기초단체장-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그림 2-6>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동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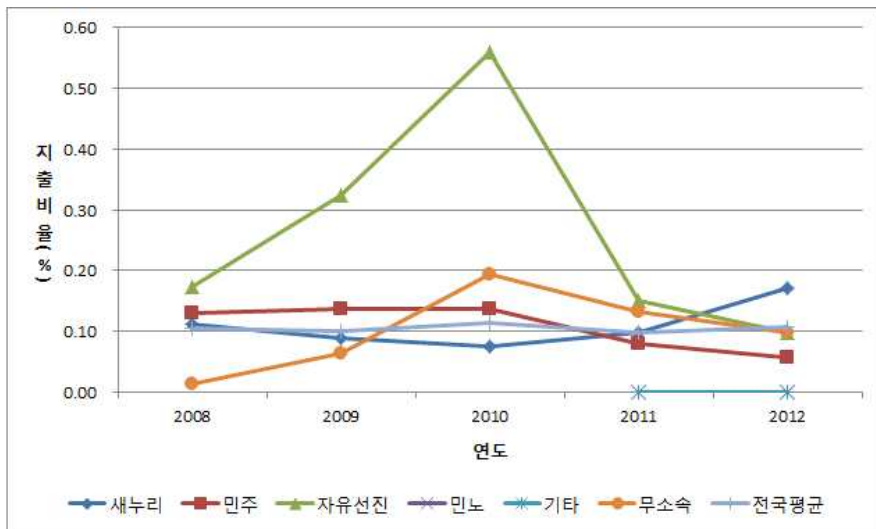


- 노동 정책의 예산 지원에 대한 단체장의 정당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음.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복지와 교육 예산과 달리 감소 추세가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례가 작고, 상위 기록에 오른 곳이 인천 동구(7위)가 유일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움.
-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역시 단체장의 정당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림 2-7>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훈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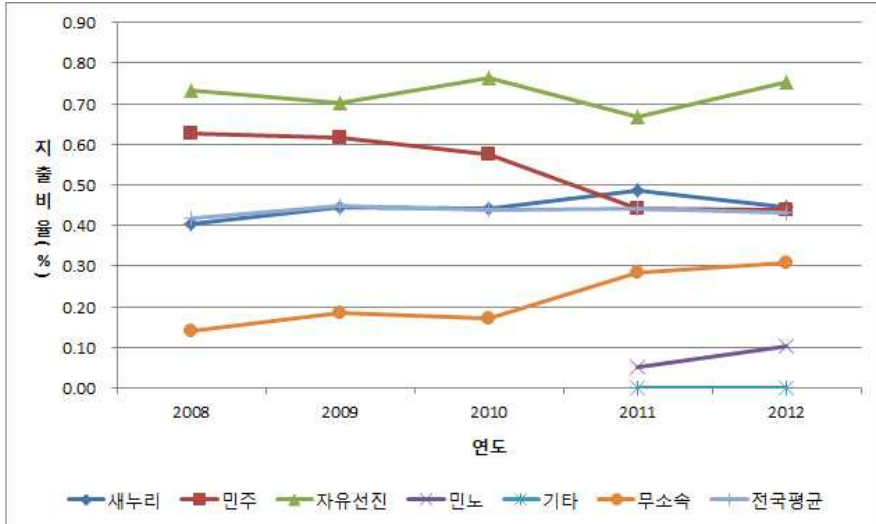
<그림 2-8>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주택지출 비율



- 주택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당별 차이가 크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그림 2-9>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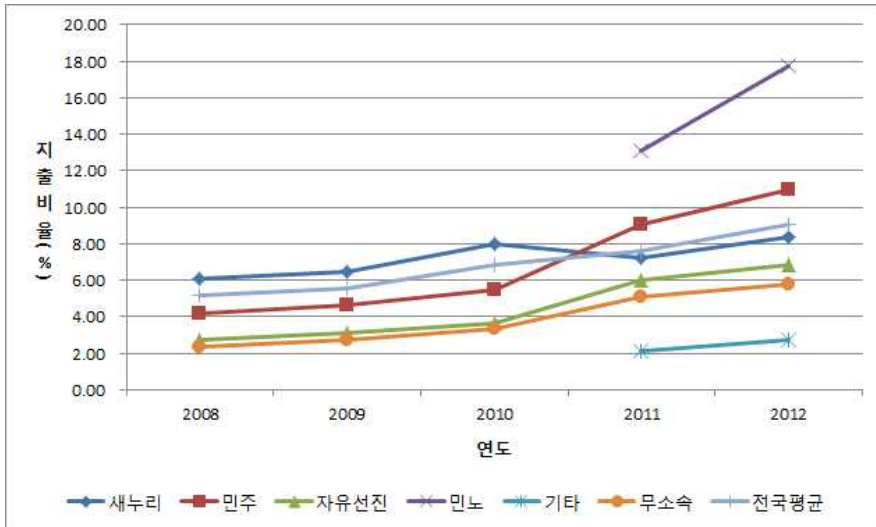


(2)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미친 분야

○ 기초단체장-보육/가족/여성

-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비율은 민주당 집권지역의 지출비율 증가가 가장 명확하게 확인되는 분야로 밝혀짐.
- 다른 항목의 지출비율과 마찬가지로 민선5기 이후 민주당 집권지역의 지출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반면, 새누리당 집권지역은 2010년 이후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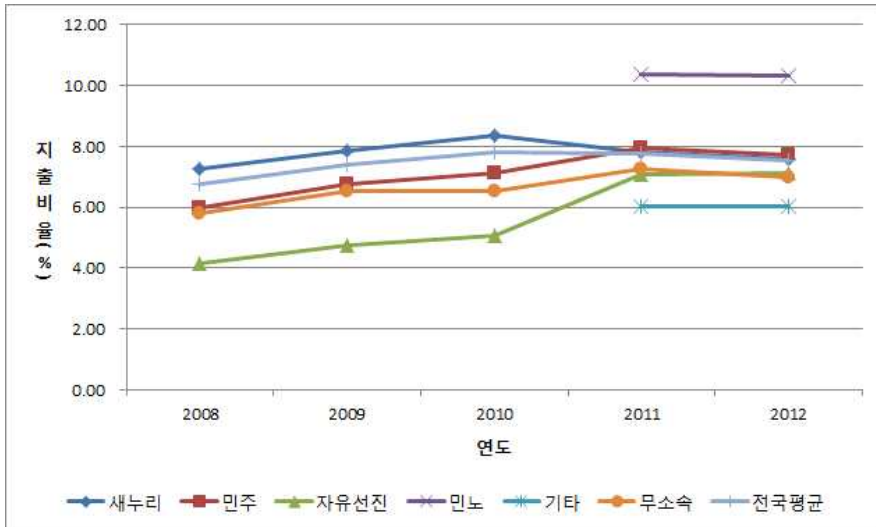
<그림 2-10>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 기초단체장-노인/ 청소년

-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노인·청소년 정책임. 이 분야의 지출 비율은 분명한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다만, 민선5기부터 새누리당 집권지역과 민주당 집권지역의 지출격차가 거의 없어짐. 두 정당이 집권한 지역은 전국평균 지출비율과 유사함.

<그림 2-11>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2. 지방의회와 복지지출 비율의 상관관계

○ 개요

-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의석비율이 기초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음.
- <표 2-2>를 해석하자면, 모델 (1)의 첫 번째 열은 특정 기초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석비율이 10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면 그 기초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약 0.8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모델 (2)~(4)에서는 한나라당 의석비율의 영향력이 약 0.2~0.3 퍼센트 포인트 정도로 추정될 수 있음.

<표 2-2> 한나라당 의석률이 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1) 사회복지비	(2) 사회복지비	(3) 사회복지비	(4) 사회복지비
한나라당 의석율	-0.0795*** (0.0153)	-0.0284** (0.0137)	-0.0264** (0.0132)	-0.0237* (0.0134)
재정자립도		-0.160*** (0.0439)	-0.142*** (0.0477)	-0.139*** (0.0480)
기초수급자비율		0.874** (0.356)	0.808** (0.357)	0.739** (0.349)
장애인비율		-3.585*** (0.635)	-3.550*** (0.633)	-3.542*** (0.633)
15~64세 인구비율			0.230 (0.259)	0.218 (0.256)
65세 이상 인구비율		1.203*** (0.380)	1.401*** (0.416)	1.407*** (0.414)
인구밀도			0.000549 (0.000680)	0.000548 (0.000676)
분점정부				0.416 (0.295)
연도더미: 2007=0, 2011=1	4.820*** (0.279)	7.513*** (0.510)	6.990*** (0.753)	6.930*** (0.747)
사례수	457	457	457	457
R-squared	0.725	0.816	0.819	0.820
기초단체수	230	230	230	230

주: 김범부·노정호(2013: 11)에서 인용

Municipality-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 한나라당 의석률이 60 퍼센트 포인트 정도로 매우 크게 증가해야 기초단체장의 당적이 한나라당 에서 민주당으로 변했을 때 발생하는 복지비 지출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즉, 기초의회의 정당 의석율은 단체장의 정당성(partisanship)에 비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비교적 작은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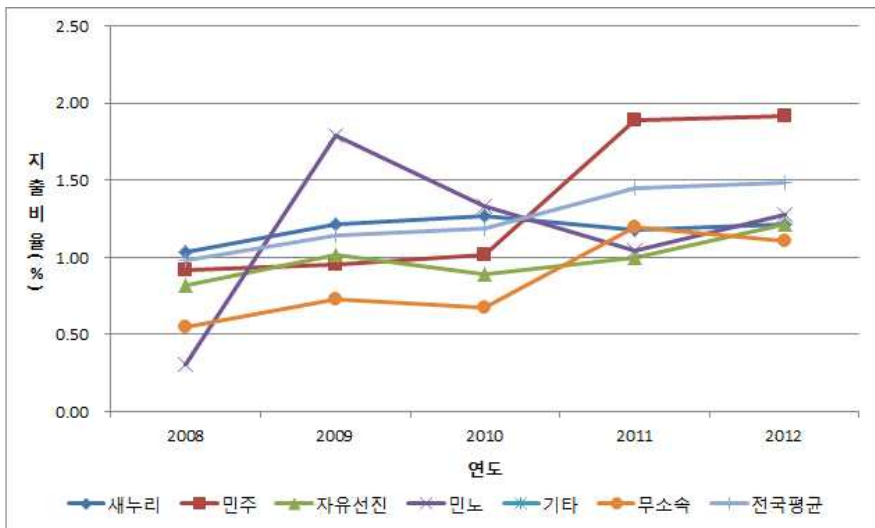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가진 단체장과 예산안 심의 의결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기존 인식에 부합하는 결과임.

-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지방의회에 한나라당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김범수·노정호 (2013)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1) 기초의회와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 의회 다수당과 교육

<그림 2-12> 기초의회 다수당별 교육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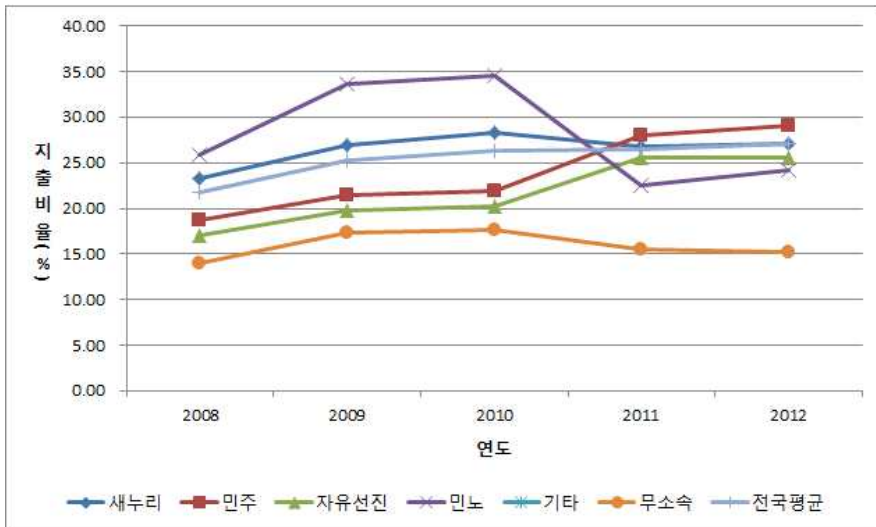
- 민주당이 지방의회 다수당인 지역의 교육지출 비율 역시 기초단체장 소속정당 분석결과와 유사함. 민선5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교육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교육지출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이전의 다른 지표와 달리 교육 지출 비율은 의회 다수당과 상관없이 두 정당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점임. 한 이 다수인 지방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거나(인천동구나 의정부시, 강원도 정선군과 평창군) 반대로 한 단체장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 의원들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경우(과천시, 남양주시, 음성군, 서산시 등)가 여기에 해당됨.

○ 의회 다수당과 사회복지

<그림 2-13> 기초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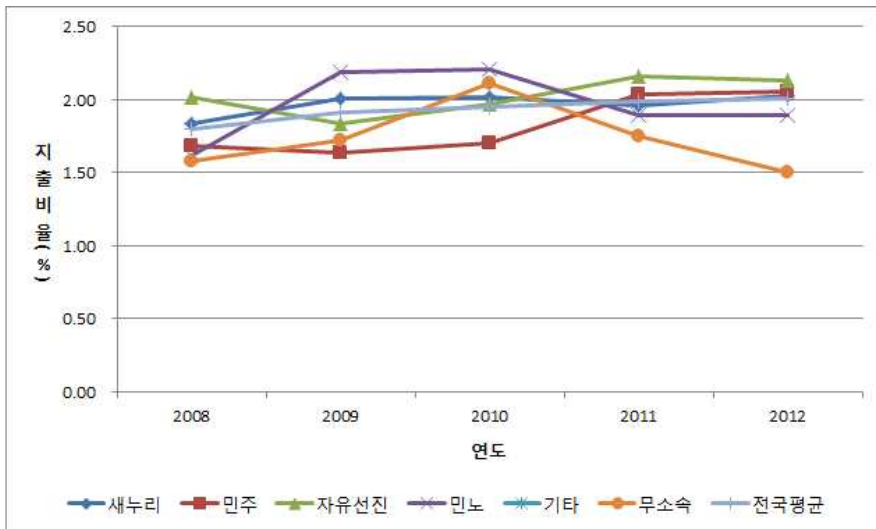


- 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역시 기초단체장 소속정당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민선5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

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초과하고 있음.

○ 의회 다수당과 보건

<그림 2-14> 기초의회 다수당별 보건의출 비율



- 보건의출 비율은 두 정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민선4기에서 민주당 다수당 지역의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민선5기 이후 소폭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표 2-3> 지방예산 현황: 세출 규모(단위: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183,226,045	증가 1.2	증가 7.2	증가 5.0
일반공공행정	21,841,947	증가 3.5	증가 5.2	증가 2.0
공공질서 및 안전	2,864,623	증가 6.8	증가 20.4	증가 4.0
교육	8,423,894	증가 9.6	증가 10.1	증가 1.8
문화 및 관광	9,154,342	감소 7.2	증가 6.7	증가 5.5
환경보호	19,186,781	증가 2.5	증가 3.3	증가 1.6
사회복지	42,053,378	증가 7.4	증가 8.5	증가 14.0
보건	2,917,907	감소 6.0	증가 7.2	증가 13.1
농림해양수산	14,080,904	증가 1.5	증가 5.6	증가 3.4
산업·중소기업	3,750,916	증가 2.0	증가 8.6	감소 5.4
수송 및 교통	20,195,350	감소 9.5	증가 4.6	감소 1.7
국토 및 지역개발	16,833,513	감소 8.7	증가 8.3	감소 1.2
과학기술	456,034	감소 25.7	증가 53.6	증가 21.0
예비비	2,196,404	증가 5.3	증가 32.3	증가 1.5
기타	19,270,052	증가 4.2	증가 6.6	증가 5.5

출처: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

-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차이보다는 사회복지 예산 중 보건 지출 비율의 감소(2011년 6.0% 감소)와 완만한 증가 탓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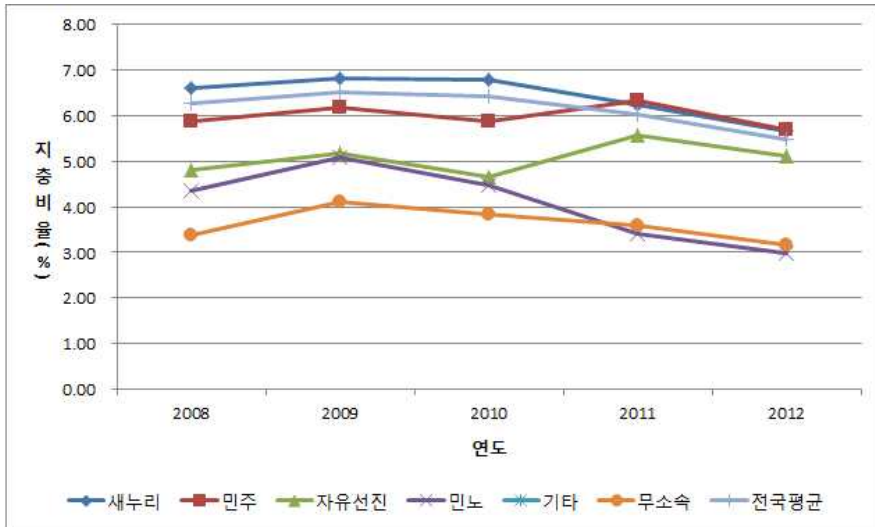
2) 의회 다수당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의 관계

(1)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분야

○ 의회 다수당-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지출비율은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지출되기 때문에 정당별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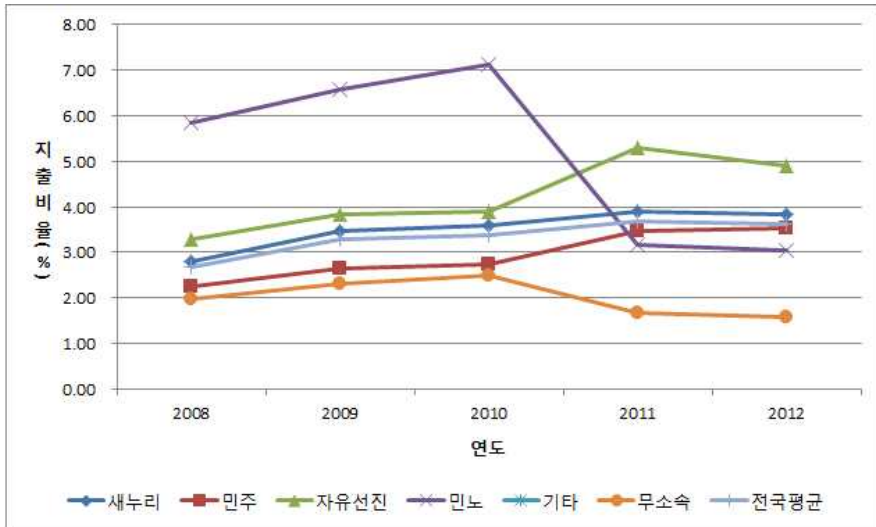
<그림 2-15> 기초의회 다수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 의회 다수당-취약계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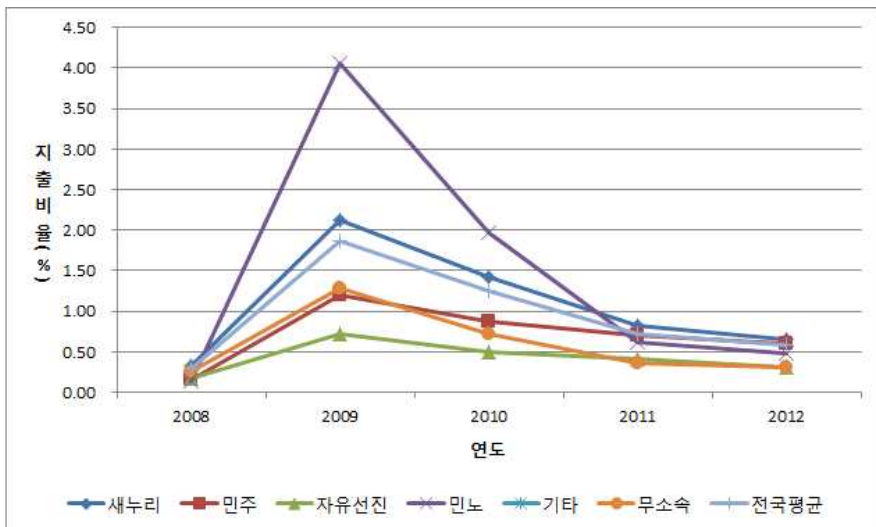
-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지출비율이 높음. 다만, 단체장 분석과 동일하게 민선5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지출비율이 증가하여 격차는 감소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지출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은 약간 증가.

<그림 2-16> 기초의회 다수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 의회 다수당-노동/주택/보훈/사회복지 일반

<그림 2-17> 기초의회 다수당별 노동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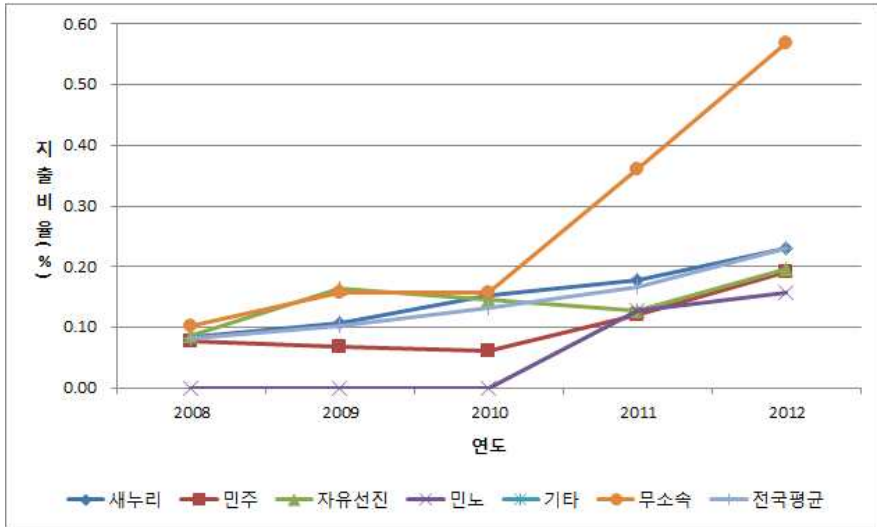
- 흥미로운 점은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의 추세임. 민주노동당은 2006년보다 2010년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음.
- 울산과 인천 등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한 지역의 단체장 3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139명의 지방의원을 확보하였음. 진보신당 출신 25명의 의원까지 포함한다면 진보정당으로서는 친-노동적인 지방정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노동 분야의 예산이 뚜렷이 감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함.

<표 2-4>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결과(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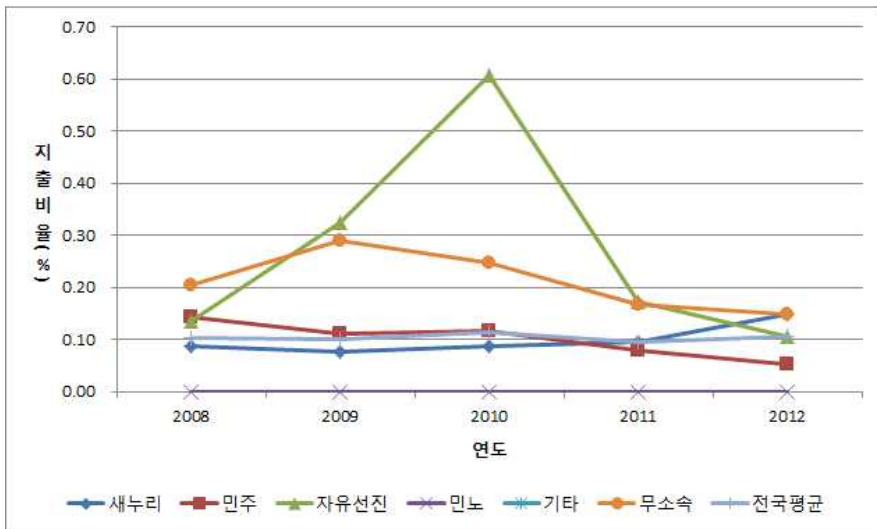
		2006	2010
자치단체장		0	3
광역의회	지역	5	18
	비례	10	6
기초의회	지역	52	90
	비례	14	25
의원 수 합계		81	139

- 나머지 분야는 앞서 설명한 단체장의 결과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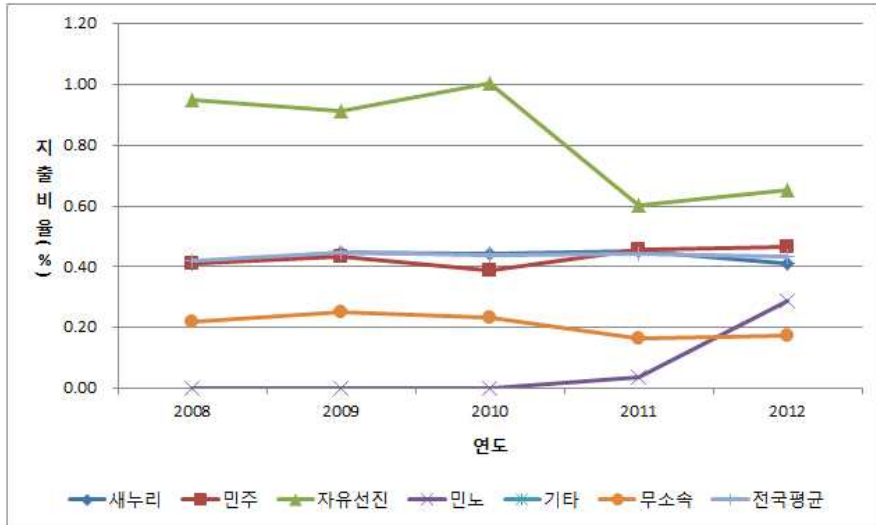
<그림 2-18> 기초의회 다수당별 보훈지출 비율



<그림 2-19> 기초의회 다수당별 주택지출 비율



<그림 2-20> 기초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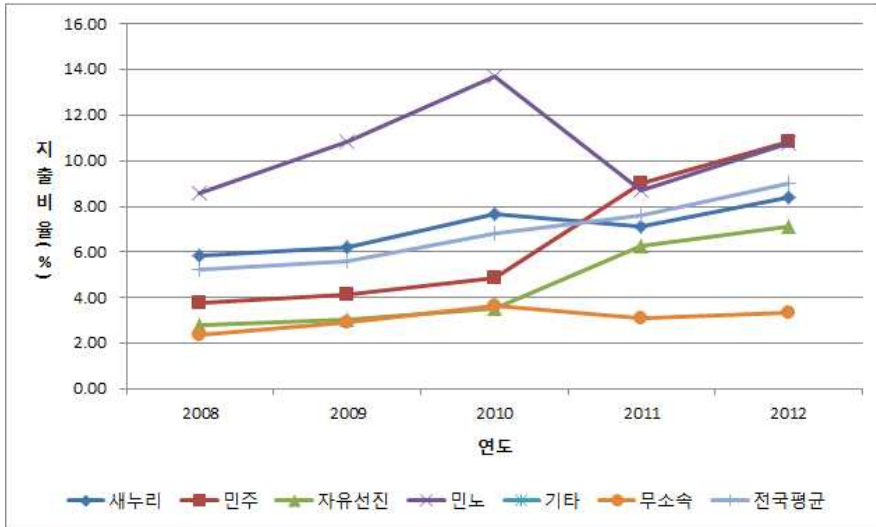


(2)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미친 분야

○ 의회 다수당-보육/가족/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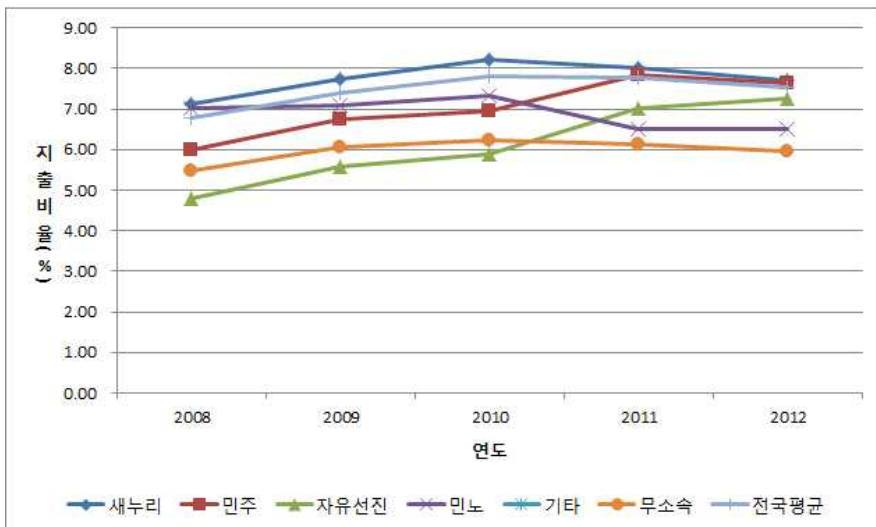
- 정당별 다수당 지역 비교에서도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비율은 민주당의 급증세가 확인됨. 민선5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지출비율 급증한 반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지출비율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비율의 증가가 무상급식이나 영유아 보육과 같은 민주당 차원의 정책 타인지, 아니면 개별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리더십 타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함.

<그림 2-21> 기초의회 다수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 의회 다수당-노인/청소년

<그림 2-22> 기초의회 다수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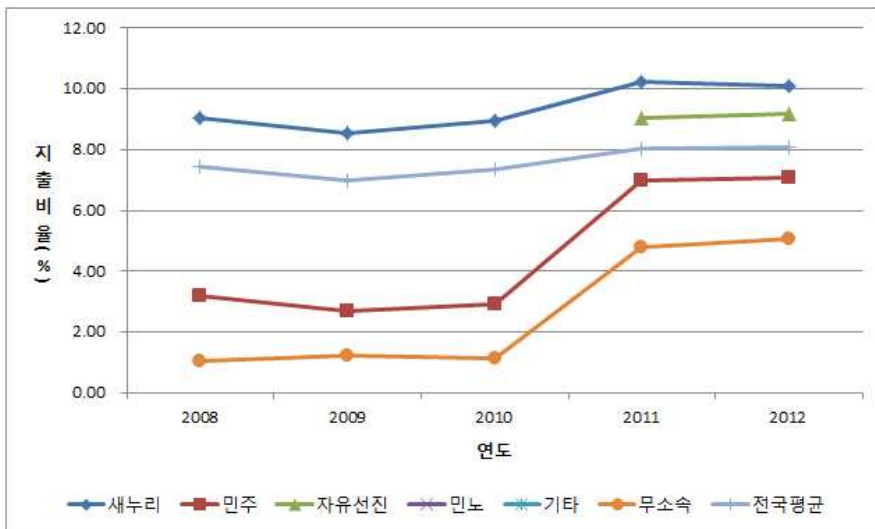
- 노인·청소년 지출비율 역시 민선5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음. 2011년 이후로 두 정당간 격차는 매우 작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새누리당이 여전히 앞선 거의 유일한 정책 영역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Ⅲ. 정당과 사회복지의 관계: 광역자치단체

1. 광역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 광역단체장-교육

<그림 3-1>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지역의 평균 교육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역의 평균 교육지출 비율은 새누리당보다 낮으나 민선5기인 2011년부터 급증하여 격차 감소
- 그러나 여전히 광역 평균 교육지출 비율은 부족한 상황임. 광역 평균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 소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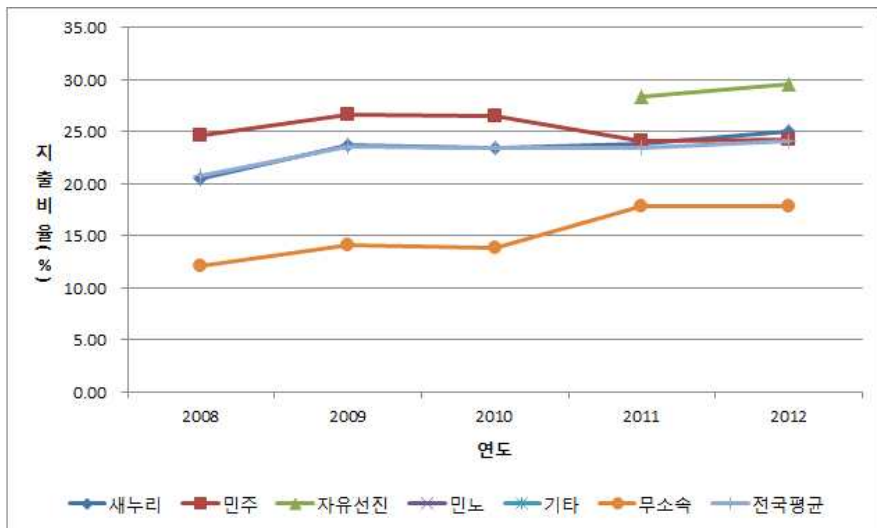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1> 시도지사 선거 결과(단위: 명)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및 기타
2006 (16)	12	3 (열린우리당)	1
2010	6	7	3

○ 광역단체장-사회복지

<그림 3-2>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 지출은 교육지출 분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민주당인 지역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1년부터 격차가 거의 없어졌으며, 2012년에는 오히려 역전됨. 광역 평균지출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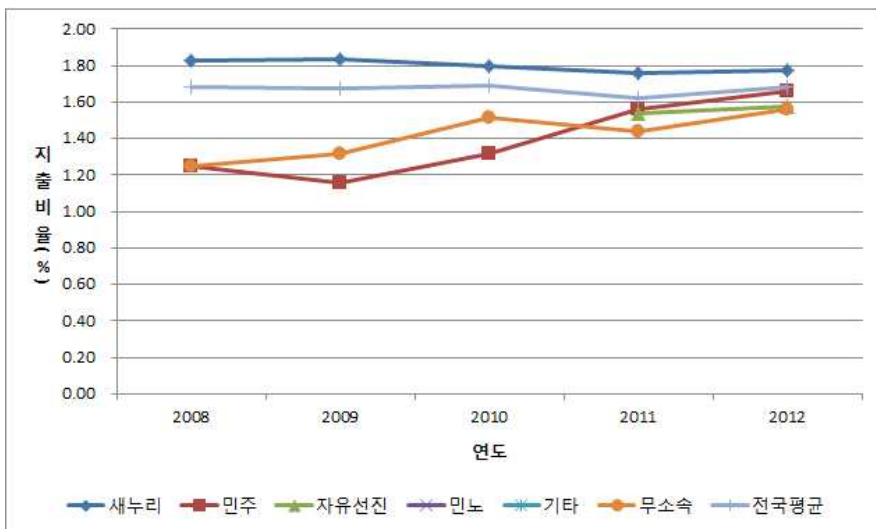
누리당인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

-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분배 및 정책 효과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광역단체장-보건

- 보건지출 비율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지역에서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민주당 지역의 보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역시 2010년부터 가파른 지출비율의 상승이 나타남.

<그림 3-3>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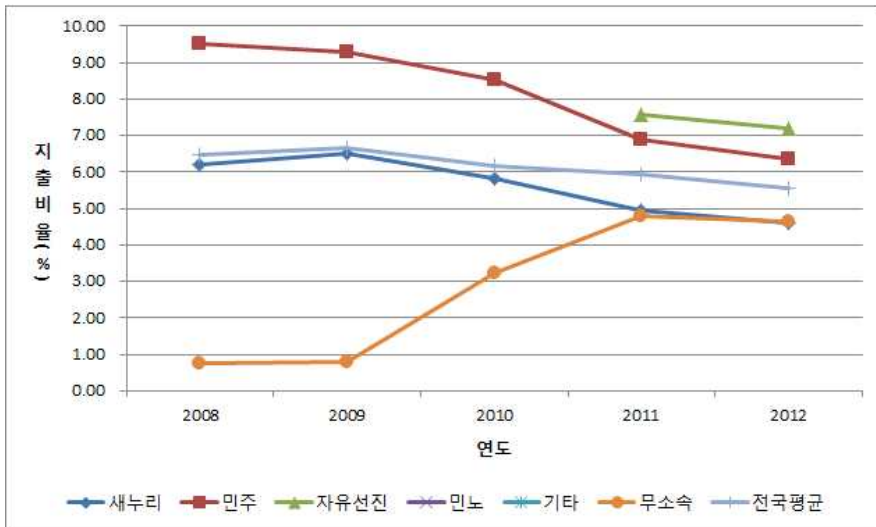


2. 광역단체장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의 관계

1)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분야

○ 광역단체장-기초생활보장

<그림 3-4>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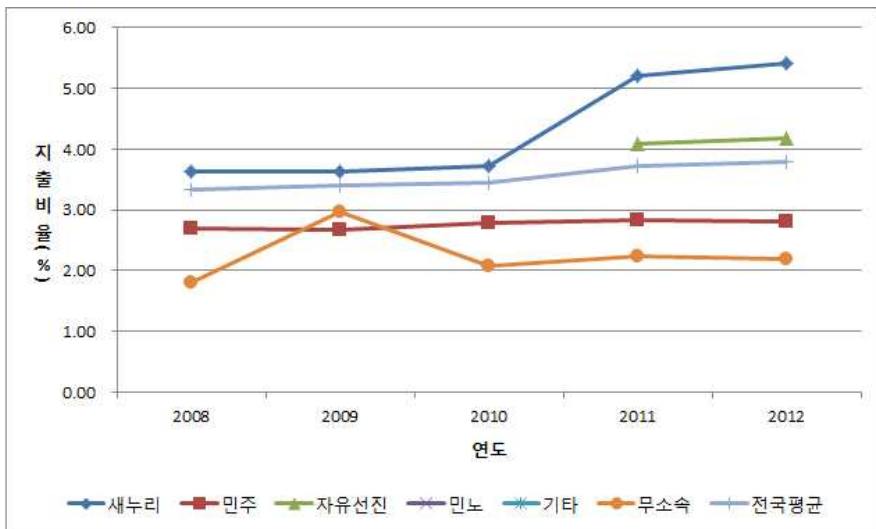


- 사회복지지출 세부항목 중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새누리당 지역은 광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은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정당의 차이보다는 지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
- ※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9만 명(82만1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7%임.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3.3%이며, 시설수급자는 6.7%임.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5.1%, 전남 4.6%, 광주 4.2%, 대구4.0%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4%임

(보건복지부. 2013.6.4.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광역단체장-취약계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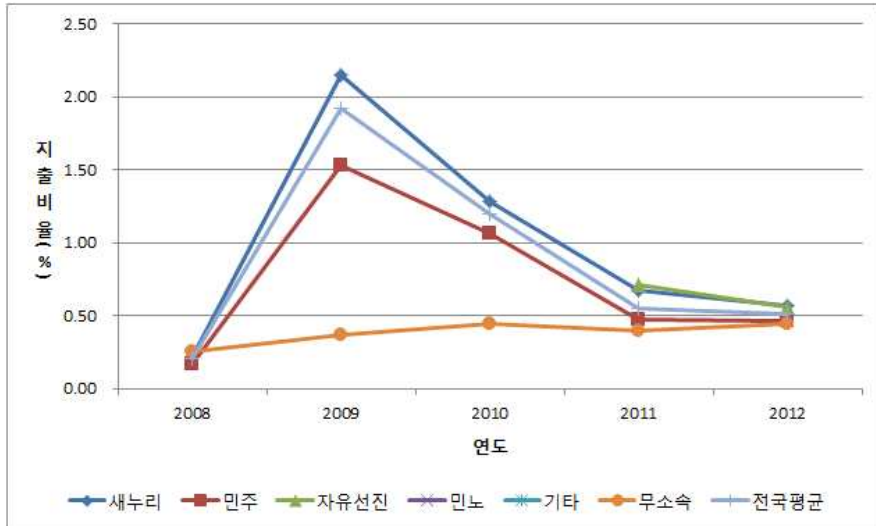
<그림 3-5>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지출 비율은 다시 새누리당 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지출 비율은 거의 일정한 반면, 새누리당 지역의 지출 비율은 2011년 급증하였음. 민주당 지역의 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평균보다 낮으나,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지역이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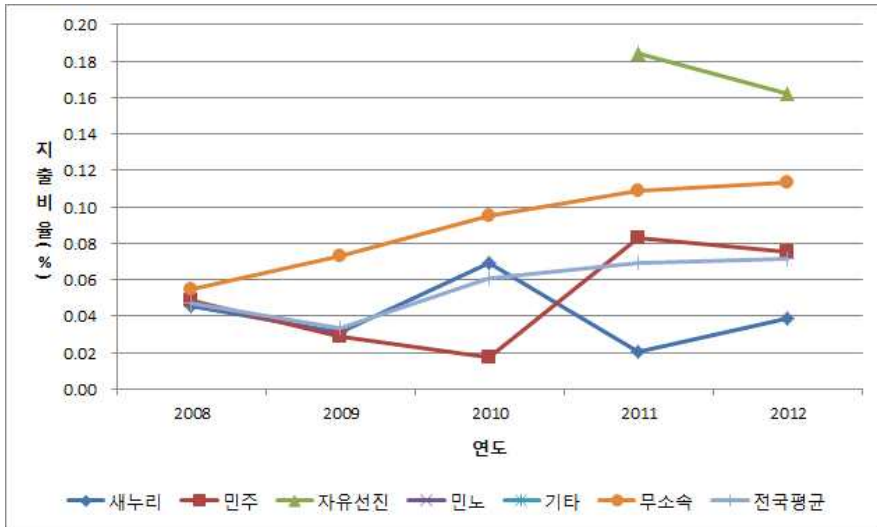
○ 광역단체장-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그림 3-6>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노동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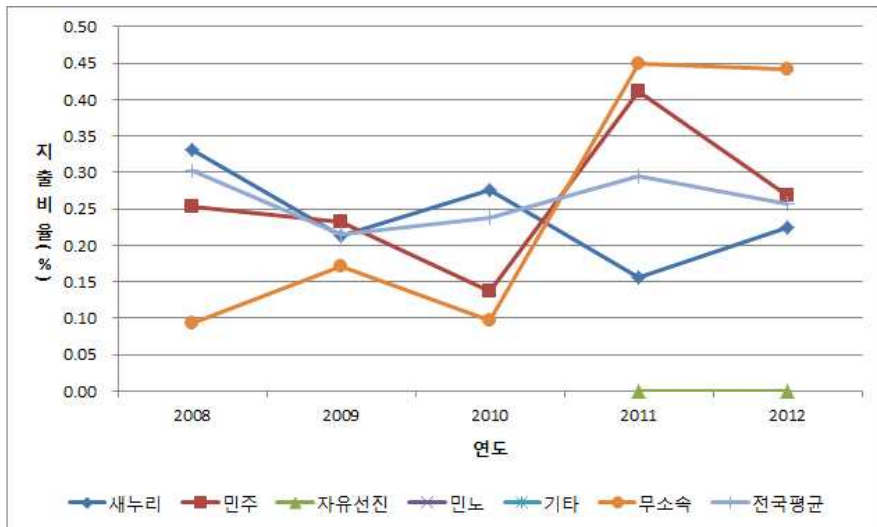


- 대부분 0.5% 이하로 비중이 작고 단체장의 정당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앞서 설명한 패턴과 유사함.

<그림 3-7>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보훈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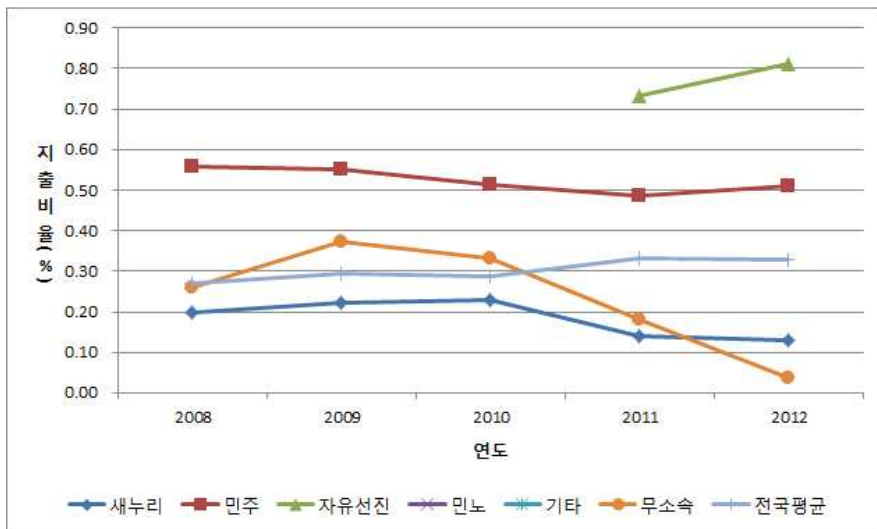
<그림 3-8>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주택지출 비율



- 2010년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 수준에서는 정권교체가 발생하

였음. 주택분야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주택 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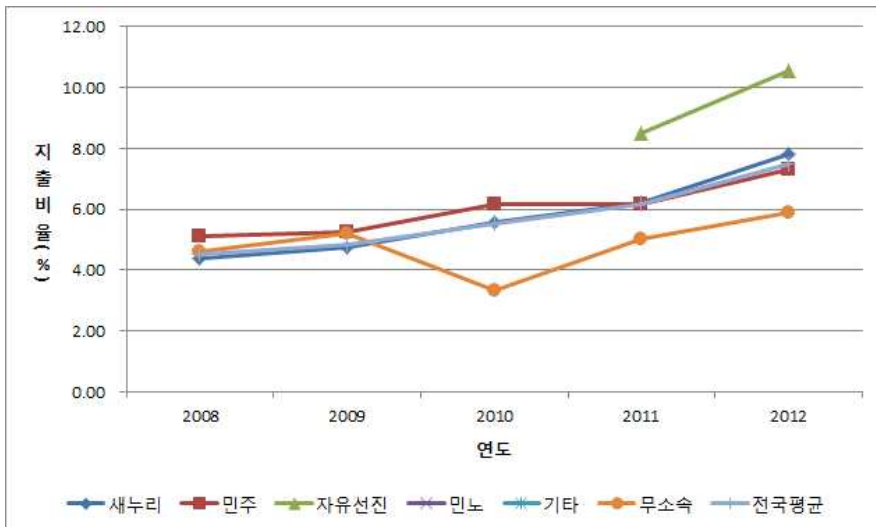
<그림 3-9>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2) 단체장의 당적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 광역단체장-보육/가족/여성

<그림 3-10>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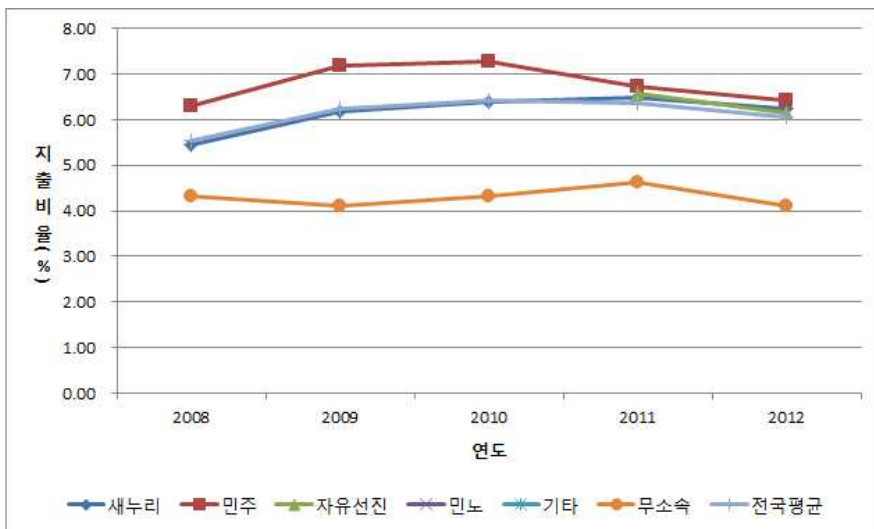


-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 비율은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민주당 지역에서 2010년까지 근소하게 지출 비율이 높았으나 2011년부터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2012년에는 오히려 큰 격차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이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상이한 양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주당이 낮다가 2011년 이후 역전하였지만 광역수준에서는 새누리당이 여전히 앞서고 있음.
- 광역수준에서 전통적으로 지지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역점분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뒤처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향후 집중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함.

○ 광역단체장-노인/청소년

- 다른 분야와 달리 지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특이한 사례임. 또한, 기초분석에서는 새누리당 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광역분석에서는 민주당 지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 지역은 2011년에 가장 높았고 2012년에 다시 감소하였지만 민주당에 비해 지출 감소의 폭이 크지 않음.

<그림 3-11> 광역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3. 광역 지방의회와 복지지출 비율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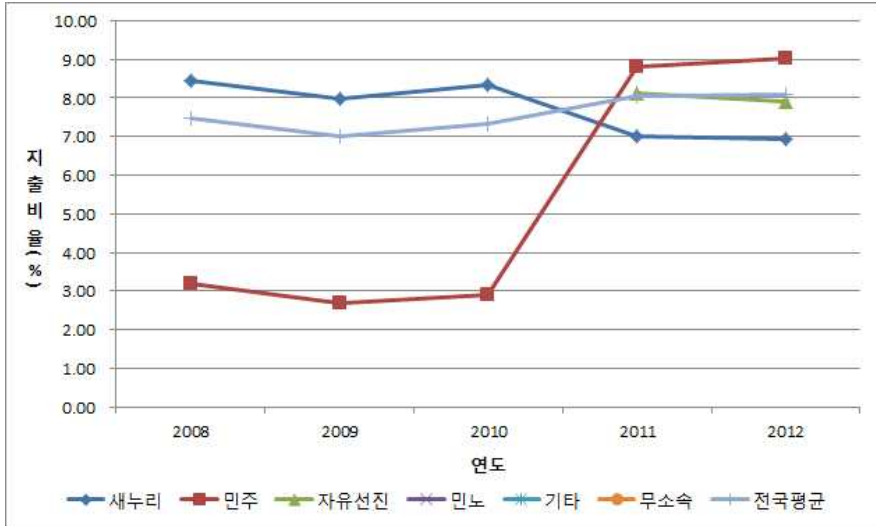
1) 광역의회 다수당과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 광역의회 다수당-교육

- 교육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지역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2011년

급증하여 역전된 상태임.

<그림 3-12> 광역의회 다수당별 교육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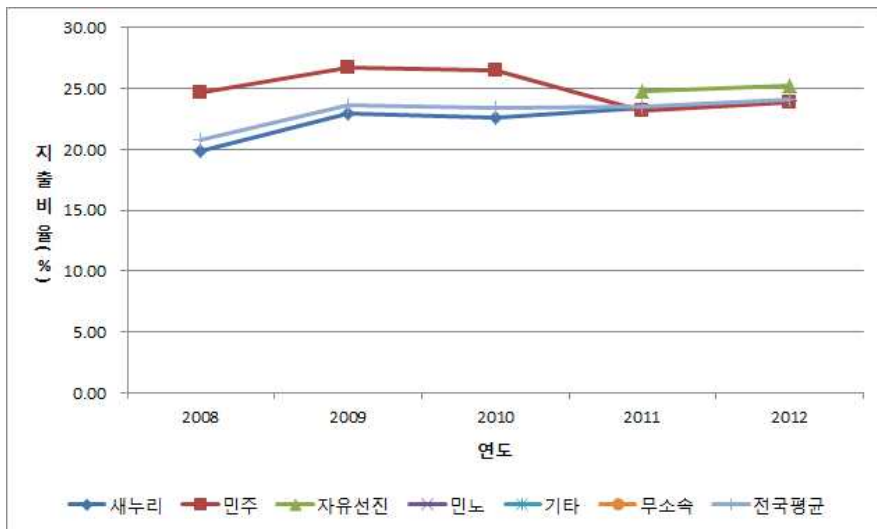


- 그 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무상급식 정책의 추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기타 교육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지역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임.
- 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지역의 교육지출 급증이 단순히 무상급식의 효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광역단체장 비교에서는 교육지출 비율이 급증하였어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역이 높은 반면, 광역의회 다수당 비교에서는 민주당 지역이 역전하였음.
- 예를 들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을 당의 공식 정책으로 선언하고 추진하여왔는데, 한 이 집행부를 맡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정면으로 대립하였음. 당시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시장 고소, 주민투표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반면 경기도는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한 바 있음. 현재 경기도의회

의 의석분포는 전체 130석 가운데 민주당 73석, 새누리당 44석, 통합진보당 4석, 진보신당 및 무소속 각각 1석, 교육의원 7석임.

○ 광역의회 다수당-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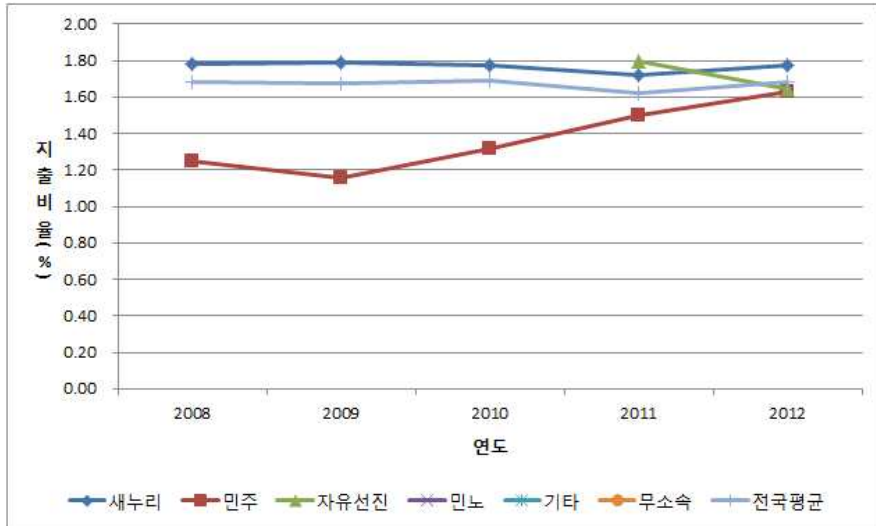
<그림 3-13> 광역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 광역자치단체장 비교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

○ 광역의회 다수당-보건

<그림 3-14> 광역의회 다수당별 보건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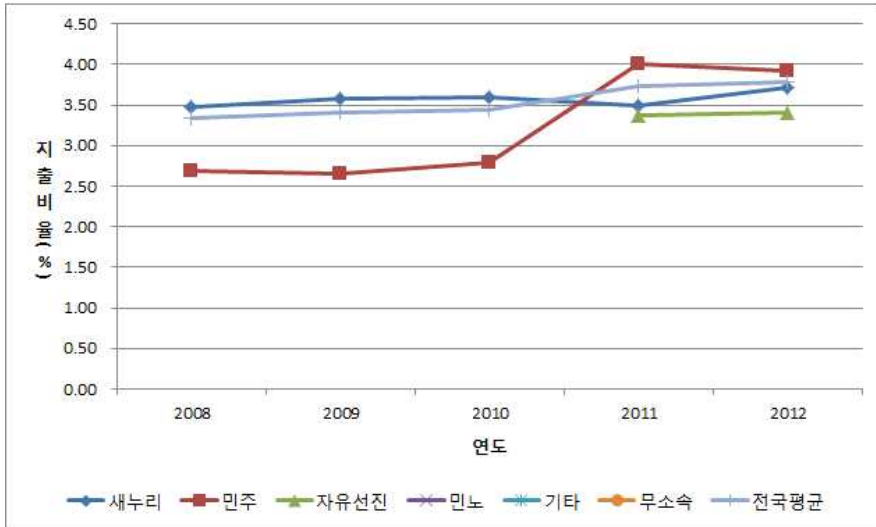
－ 보건지출 비율 역시 광역자치단체장 비교와 거의 일치함

2) 광역단체장과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

○ 광역의회 다수당-취약계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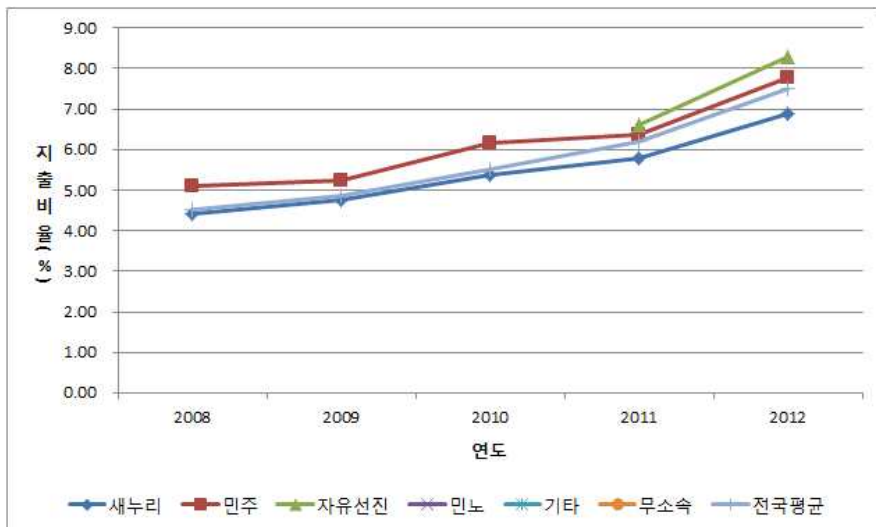
- － 기초단체장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음.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비교와는 차이가 있음
- －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역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이 나타났으나, 광역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지역에서는 2011년 지출 비율이 역전되었음.

<그림 3-15> 광역의회 다수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 광역의회 다수당-보육/가족/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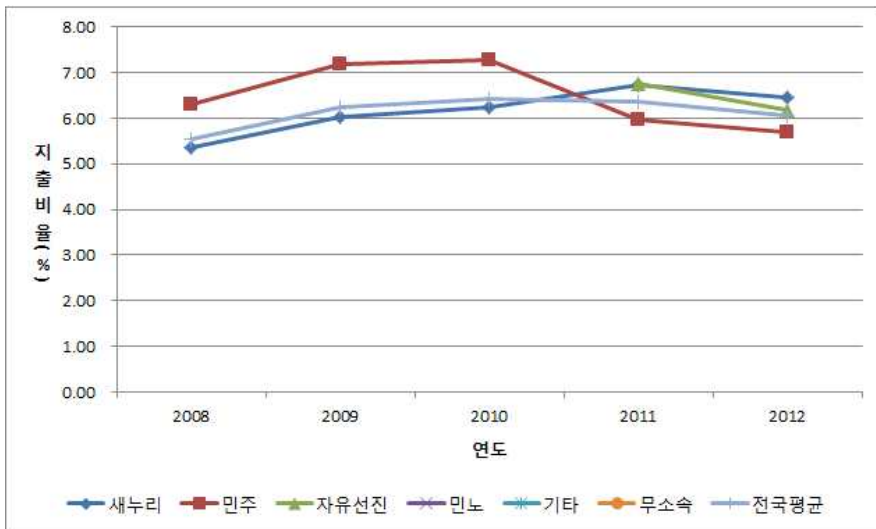
<그림 3-16> 광역의회 다수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 지난 5년간 꾸준히 지출 비율이 상승
- 동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의 지출 비율보다 꾸준히 높음.
- 광역자치단체장 비교 결과와 유사함. 다만, 광역자치단체장 비교에서는 2012년 지출 비율이 역전되었으나 광역의회 비교에서는 역전되지 않음

○ 광역의회 다수당-노인/청소년

<그림 3-17> 광역의회 다수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 노인·청소년 지출의 경우, 2010년까지 민주당 다수당 지역의 지출 비율이 높았으나, 2011년부터 역전됨. 광역자치단체장 비교에서는 격차는 줄었으나 역전되지는 않았음.

IV. 정권교체와 지역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사회복지와 정권교체의 효과

○ 개요: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현상

- <표 4-1>은 지난 민선 4기와 5기 사이에 지방권력의 전면 교체가 발생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6.2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한 의 압승 속에서 광역이든 기초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당적이 같은 단점정부 현상이 지배적이었음.
- 하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한나라당의 기초단체장 비중은 69.1%에서 35.9%로 급감하였음.

<표 4-1> 역대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1995	1998	2002	2006	2010	1995	1998	2002	2006	2010
열린우리당	—	—	—	1		—	—	—	21	
한나라당	5*	6	11	12	6	70*	74	140	159	82
민주당	4	6**	4	2	7	84**	84	44	19	92
자민련	4	4	1	0	1 ¹	23	29	16	6***	13 ¹
민주노동당	—	—	0	0		—	—	2	0	3
무소속	2	0	0	1	2	53	44	30	25	38
합계	15	16	16	16	16	230	231	232	230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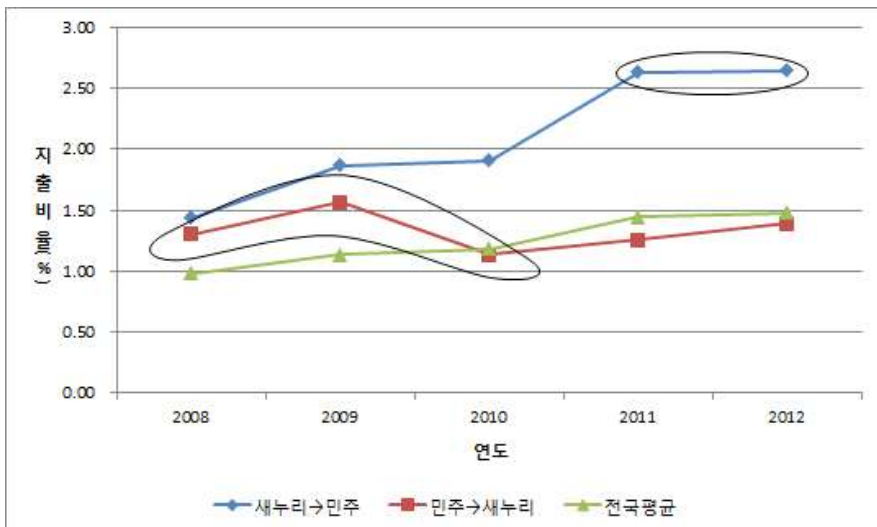
* 민자당 ** 국민회의 *** 국민중심당 ¹자유선진당

- 그동안 학계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책(사회복지)에 미치는 정권교체의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음. 이번 연구는 그런 점에서 선구적인 실험이라 할 수 있음.
- 주의할 것은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교체된 사례가 2개에 불과한 반면 단체장과 다수 의회의 당적이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사례는 51개에 이른다는 점임.
- 따라서 정권교체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사례의 비대칭이라는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 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사례만을 다룰 것임. 또한, 본 연구의 서술을 인과관계가 아닌 추이 및 현황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이 필요함.

1) 기초자치단체의 정권교체와 사회복지(대분류) 지출

○ 정권교체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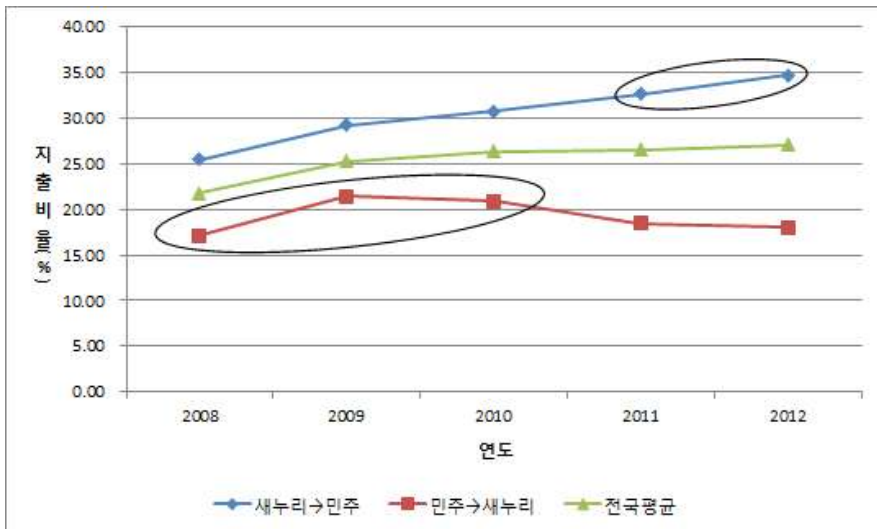
<그림 4-1> 기초단체 정권교체: 교육지출 비율



- 전국적으로 교육지출 비율은 당적을 불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새누리당→민주당 지역은 정권교체 이후(2011) 교육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교육지출 비율 증가가 전국평균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권교체와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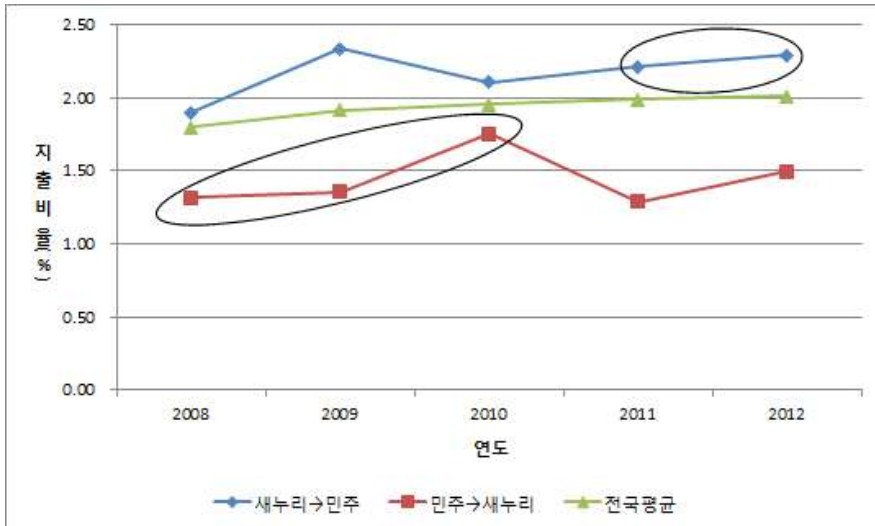
<그림 4-2> 기초단체 정권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 새누리당→민주당 지역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을 앞서고 있음.

○ 정권교체와 보건

<그림 4-3> 기초단체 정권교체: 보건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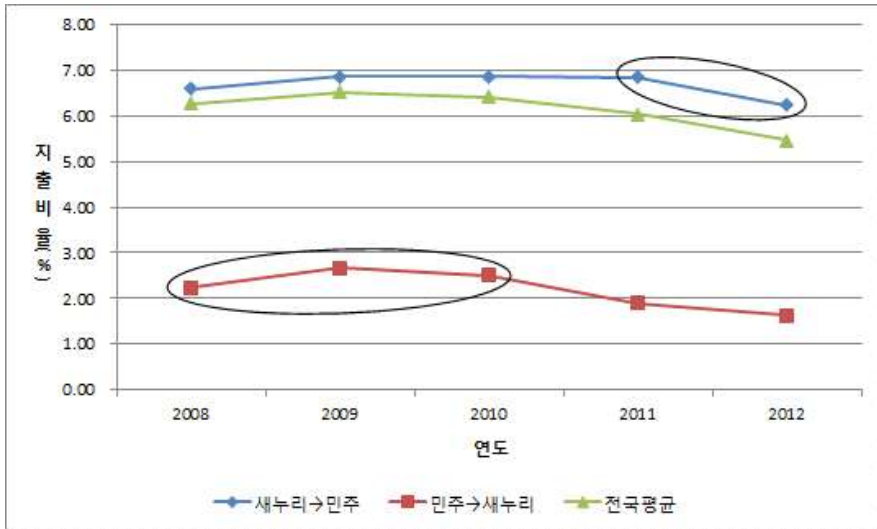
－ 보건은 뚜렷한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2) 정권교체와 사회복지 세부 항목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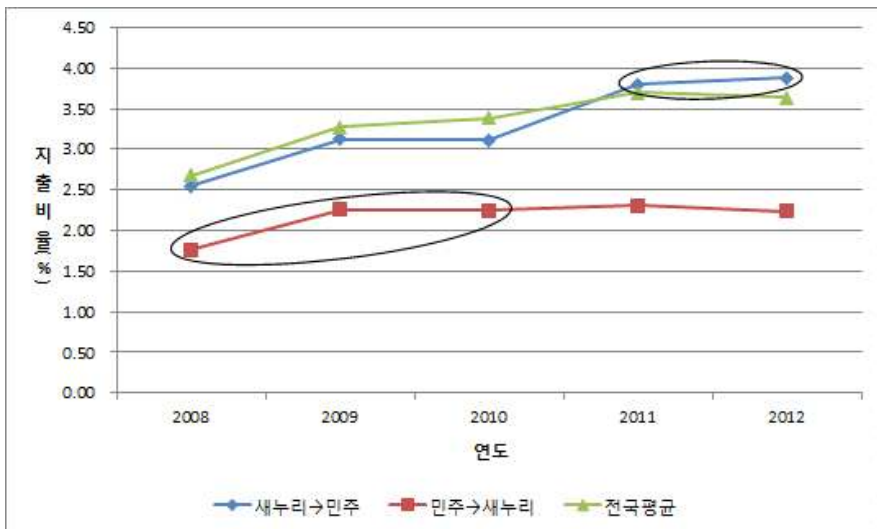
○ 정권교체-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 정권교체 이후 두 지역 모두 지출비율 감소. 수급권자 수가 지출 비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4-4> 기초단체 정권교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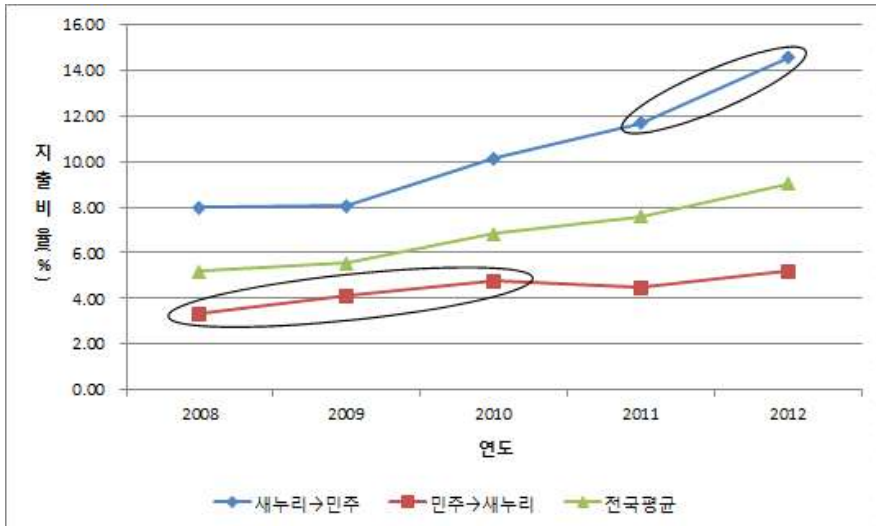
<그림 4-5> 기초단체 정권교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 새누리당→민주당 지역은 정권교체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출 비율 증가폭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음.

○ 정권교체-보육/가족/여성

<그림 4-6> 기초단체 정권교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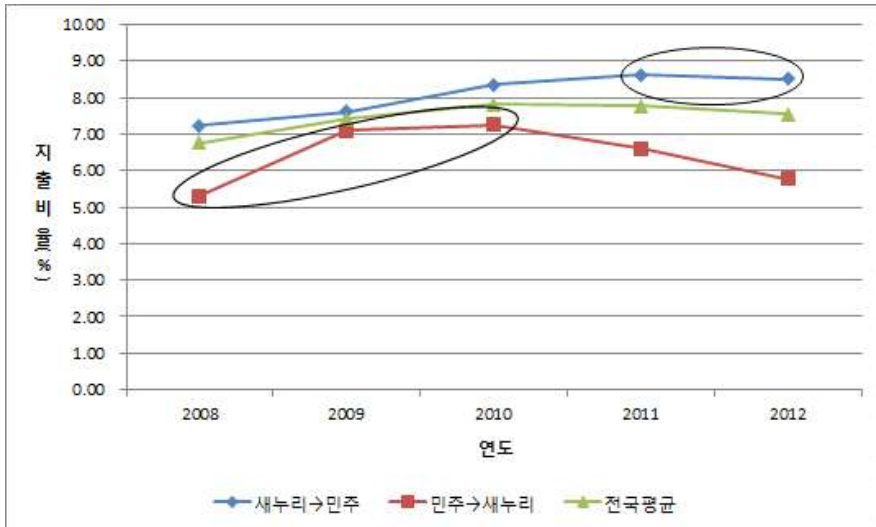


- 정권교체 이후 지출비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분야임. 특히, 2009년~2011년까지의 증가폭보다 2012년의 증가폭이 더 큼.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지원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1.6,7)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정권교체-노인/청년

- 노인·청소년 지출비율은 다른 영역과 달리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 않음. 오히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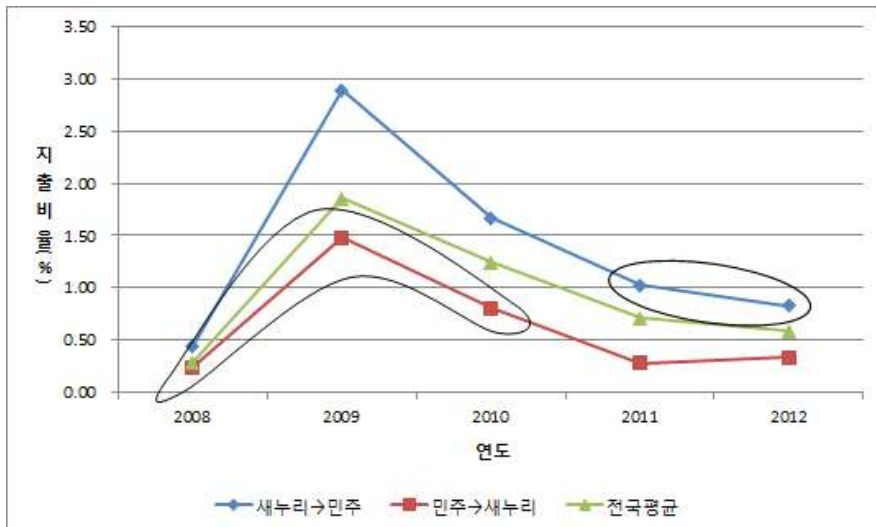
<그림 4-7> 기초단체 정권교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 정권교체-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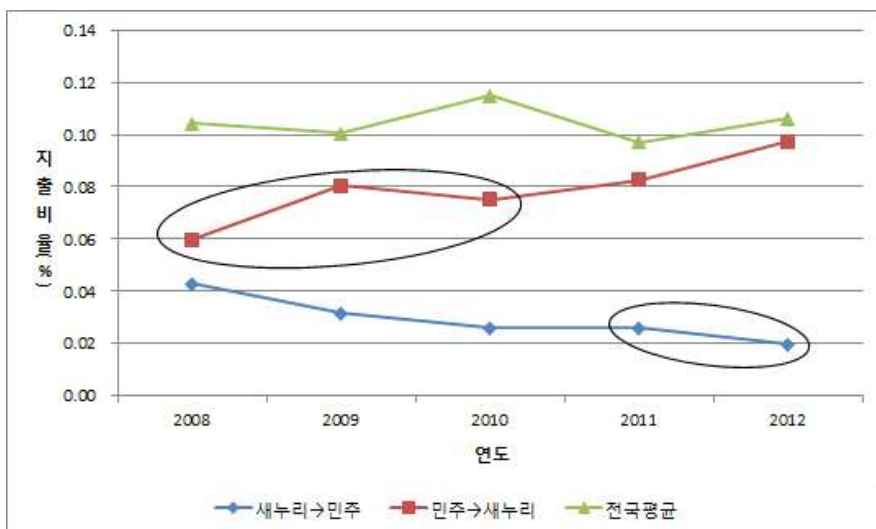
- 정권교체 이후 전체적인 하락율과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는 분야임. 오히려 전국적인 평균 감소율보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한 지역에서 하락 폭이 크다는 사실을 주목.

<그림 4-8> 기초단체 정권교체: 노동지출 비율



○ 정권교체-주택

<그림 4-9> 기초단체 정권교체: 주택지출 비율



- 전국 평균은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면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새로 단체장을 맡게 된 지역에서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원인이 민주당 단체장들의 토목 및 건설에 대한 혐오(이명박 정부의 토건국가에 대한 반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의 결여 때문인지는 보다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과 사회복지

○ 개요

- 지방정부 수준의 사회복지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음.
- 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정치가 독자적 권한과 역할 없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과 인식을 반영한 것임. 실제로 국가전체의 지방분권 수준은 사무배분이 49.4%, 지방재정은 49.7%에 머물고 있음(박용규 2010, 16).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핵심인 자치경찰제의 미 실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 협소한 조례 제정 권한 등의 문제로 지역별 특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왔음.
- 그러나 민선 5기, 지방자치 22년을 맞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호남 그리고 수도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연구임.

1)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 수도권 지역은 2010년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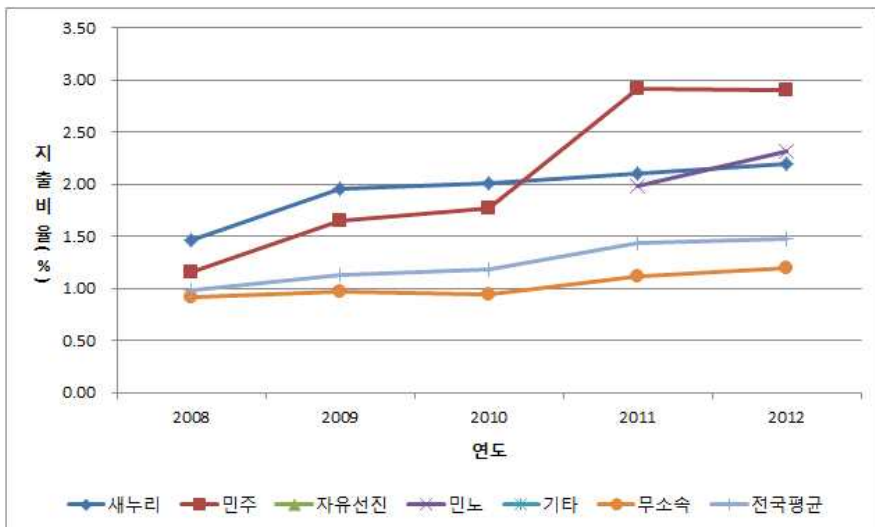
생한 지역임. 민주당의 집권에 따라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서 정책의 역전 현상이 활발하게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 세부항목으로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출 비율과 노인, 청소년 지출 비율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전 현상이 나타남.

○ 수도권 기초단체장-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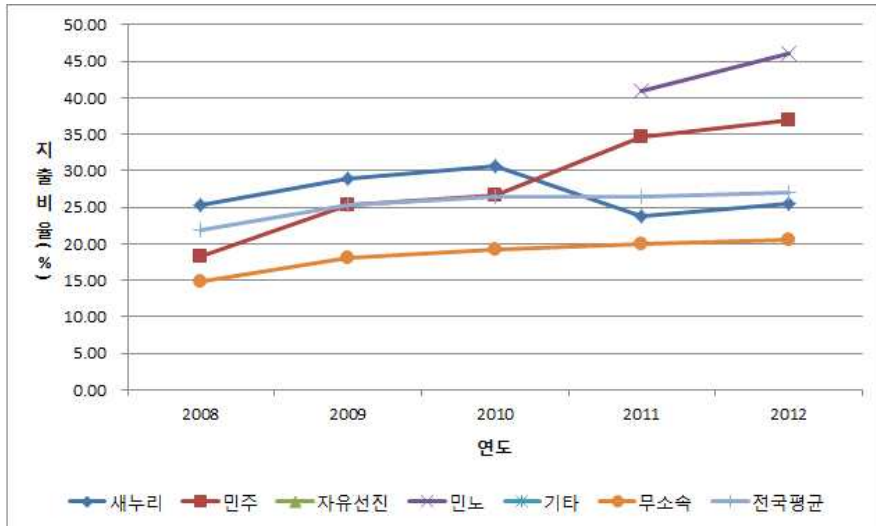
- 경합지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교육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교육지출 비율이 201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에서 나타난 전국 평균을 크게 상승하는 교육 지출 증가를 수도권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4-10>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 수도권 기초단체장-사회복지

<그림 4-11>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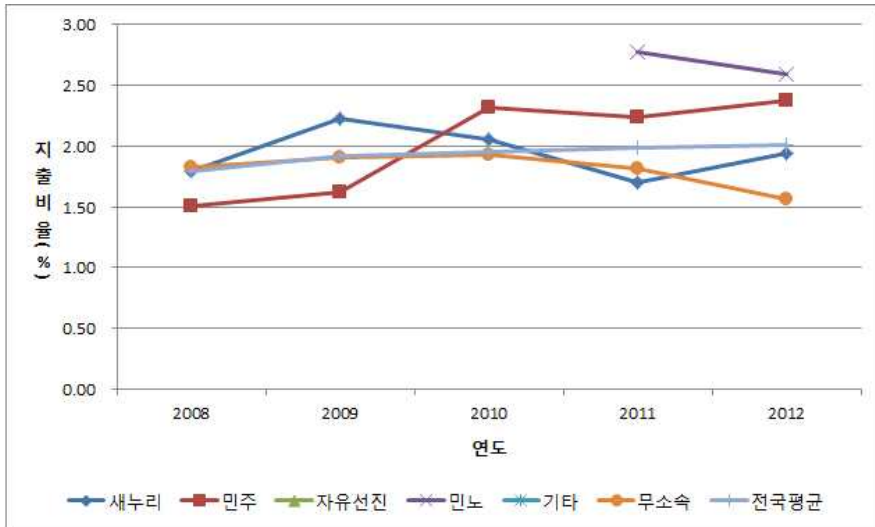


- 사회복지지출 비율 역시 전국 대상 비교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의 사회복지 지출율의 급감과 민주당 단체장의 꾸준한 상승이 대조적임.

○ 수도권 기초단체장-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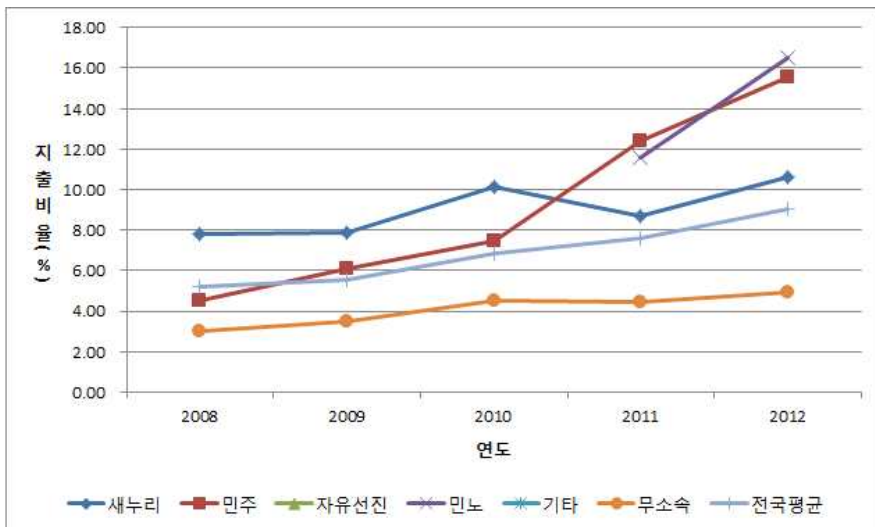
- 보건지출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인 지역인 2010년부터 역전

<그림 4-12>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 수도권 기초단체장-보육, 가족 및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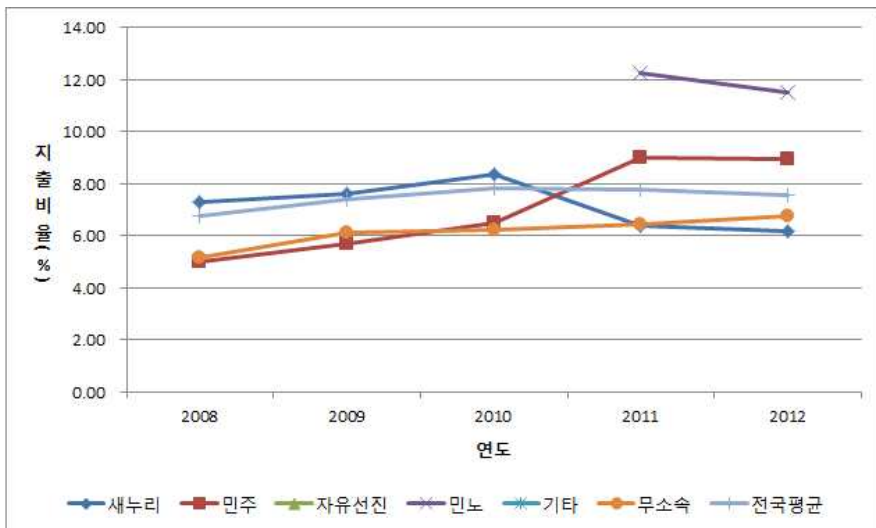
<그림 4-13>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 민선5기부터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출 비율이 급증하여 새누리당 집권 지역의 지출 비율을 역전하였음. 기율기를 비교해도 민주당 집권 지역의 지출 비율 상승이 두드러짐.

○ 수도권 기초단체장-노인, 청소년

<그림 4-14>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 노인, 청소년 지출 비율 역시 민선5기부터 역전되었음.

2)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영호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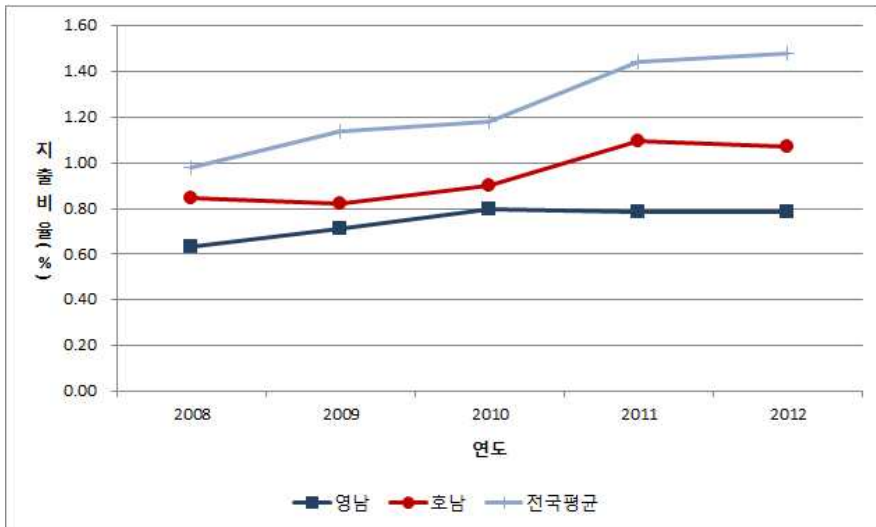
○ 개요

- 영남과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조차도 유권자의 투표 패턴의 변화가 매우 낮은 지역임.

- 전반적으로 영남지역보다 호남지역의 지출비율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 민주당이 대다수 집권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이 대다수 집권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낮음.
- 반면 전국적인 비교에서는 민주당 집권지역이 2011년부터 높아짐.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복지 지출 상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정권교체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

○ 교육 지출-영남과 호남

<그림 4-15> 영호남 교육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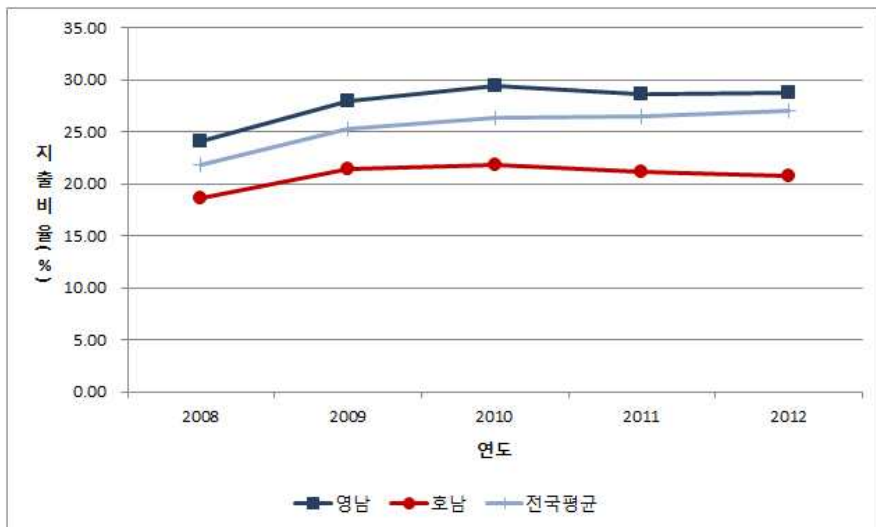
- 영남과 호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이 밝혀짐. 정당의 경쟁적 관여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키이 (Key, 1950)의 명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키이는

1940년대 미국 남부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정당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당이 지배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은 서비스를 축소하고 세금 인하를 바라는 기득권자(haves)의 요구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에 미치는 정당의 경쟁적 효과가 처음으로 밝혀짐.

- 교육 지출 비율에 있어서는 영남지역보다 호남지역이 다소 높음. 2010년부터 영남지역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출 비율을 유지한 반면, 호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사회복지 지출-영남과 호남

<그림 4-16> 영호남 사회복지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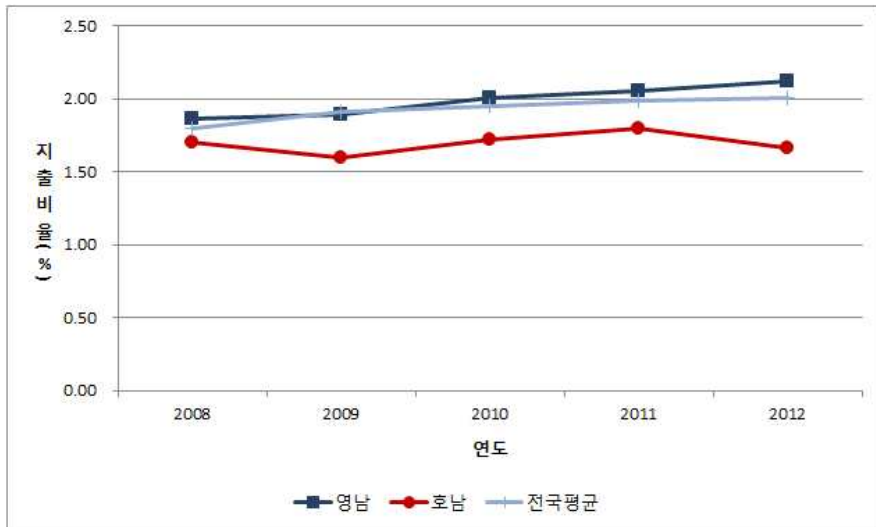
-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임. 영남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호남은 전국과의 격차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
- 권역별로 영남보다 높은 곳은 서울뿐이며, 전국 평균의 추이와

달리 영호남 모두 2010년부터 소폭 감소하였음.

○ 보건 지출-영남과 호남

- 영남은 전국 평균 수준의 지출 보다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호남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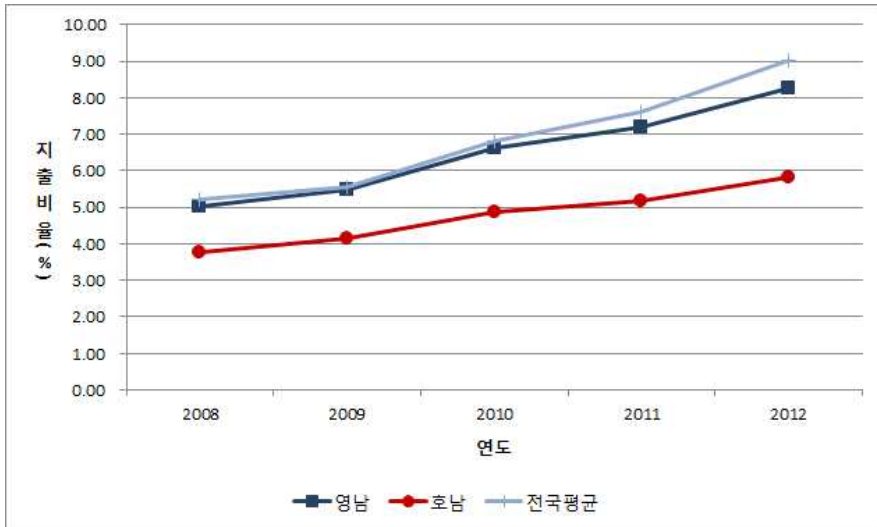
<그림 4-17> 영호남 보건지출 비율



○ 보육, 가족 및 여성지출-영남과 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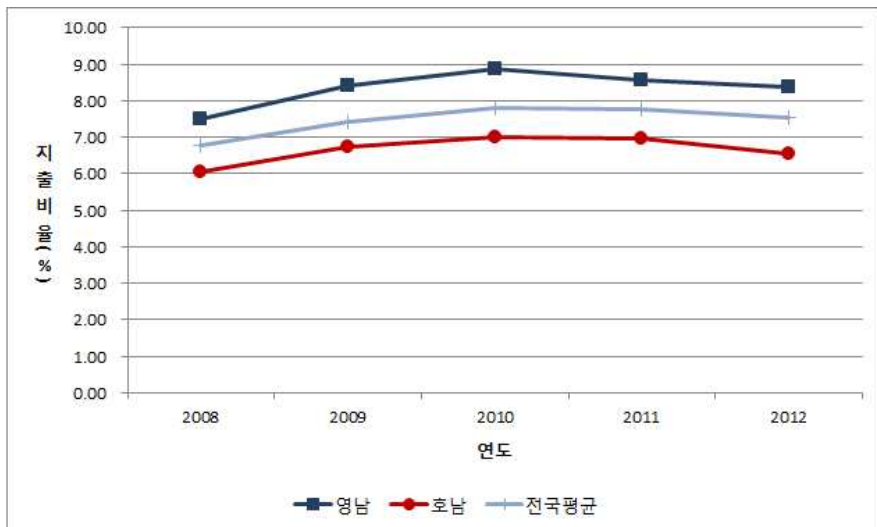
- 지출 비율의 상승폭(기울기)은 두 지역 모두 유사. 그러나 영남의 지출비율이 호남보다 높음.
- 영남보다 지출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뿐임.

<그림 4-18> 영호남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 노인, 청소년 지출-영남과 호남

<그림 4-19> 영호남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 영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청소년 지출 비율을 보임.
- 반면, 호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V. 정당과 사회복지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 본 장은 앞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제시한 분석결과의 인과관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임.
- 앞서 제시한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별, 의회 다수당별 복지지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고자 함.
- 이를 위해 Newey-West 추정법을 사용함.
 - 구체적으로 재정적 요인(1인당 총세입, 재정자주도)과 수요요인(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생산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장애인 인구 비율)을 통제변수로 투입함.
 - 이를 통해, 재정적 요인과 수요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당별 사회복지지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함.
 - 주요 정치변수인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의회 다수당, 그리고 정당별 단점정부 구성의 변수는 더미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준거집단은 새누리당으로 설정하였음.
 - 단점정부: 한 정당이 지방정부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단점정부 형태를 정당별로 비교하였음.

1. 기초자치단체 인과관계 분석

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무소속인 경우 새누리당보다 교육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과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며 0.62%, 민주노동당이면 0.63%, 그리고 무소속이면 0.25% 높은 교육지출 비율이 확인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기타정당인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기타정당이면 새누리당보다 교육지출 비율이 -0.78%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지방의회 다수당별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별 비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새누리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교육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0.59%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교육지출 비율보다 0.5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의 교육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교육지출 비율보다 -0.26%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397	0.0269	0.0370
재정자주도	0.0394***	0.0396***	0.0395***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6216***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0327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6329*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7812***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2498***		
민주 다수당		0.5852***	
자유선진 다수당		0.1181	
민주노동 다수당		-0.3773	
무소속 다수당		0.1014	
민주 단점			0.5754***
자유선진 단점			-0.0026
민주노동 단점			-0.2646*
무소속 단점			-0.0397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446***	0.0338**	0.0433***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43	-0.0047	-0.0051
생산가능인구 비율	0.0850***	0.0663***	0.0793***
여성인구 비율	0.0794**	0.0749**	0.0773**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1161***	-0.1350***	-0.1212***
등록장애인 비율	0.1202***	0.0849*	0.1264***
상수	-12.6764***	-10.5590***	-12.0725***
n	1143	1143	1143
F	112.85***	29.37***	28.99***

주: *, $p < 0.10$; **, $p < 0.05$; ***, $p < 0.01$

2) 기초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면 새누리당보다 교육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와 비교하여, 자유선진당은 0.34%, 민주노동당은 0.48% 높은 보건지출 비율이 확인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기타정당인 경우에는 오히려 보건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기타정당이며 새누리당보다 -0.31%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별 비교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보건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0.0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유선진당이면 보건지출 비율은 0.24%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과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반면,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보다 각각 0.31%, 0.26%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5-2> 기초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049	-0.0055	-0.0048
재정자주도	-0.0136***	-0.0138***	-0.013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0357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3425***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4806***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3142***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0966		
민주 다수당		0.0788*	
자유선진 다수당		0.2441**	
민주노동 다수당		0.0925	
무소속 다수당		-0.0721	
민주 단점			0.0323
자유선진 단점			0.3135***
민주노동 단점			0.2640***
무소속 단점			-0.1685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690***	-0.0717***	-0.0693***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56***	-0.0055***	-0.0058***
생산가능인구 비율	-0.0050	-0.0090	-0.0072
여성인구 비율	0.0203	0.0161	0.0151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428**	-0.0459**	-0.0449**
등록장애인 비율	-0.1445***	-0.1517***	-0.1432***
상수	4.7215	5.3497	5.1856
n	1143	1143	1143
F	27.04***	20.04***	29.48***

주: *, $p < 0.10$; **, $p < 0.05$; ***, $p < 0.01$

3)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거나 민주노동당인 경우 새누리당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와 비교하여, 민주당은 1.34%, 민주노동당은 5.71% 높은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확인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기타 정당인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기타 정당인 경우,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3.60%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별 비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새누리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1.15%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와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민주당 단점정부는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단점정부는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80% 높은 것으로 나타

남.

<표 5-3>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1.1388***	-1.1799***	-1.1484***
재정자주도	-0.5580***	-0.5600***	-0.5576***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1.3443***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2991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5.7108***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3.6046***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0665		
민주 다수당		1.1451***	
자유선진 다수당		-0.3517	
민주노동 다수당		-1.4923	
무소속 다수당		0.4005	
민주 단점			1.3164***
자유선진 단점			-0.0628
민주노동 단점			2.7988***
무소속 단점			-1.0915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2276***	-0.2391***	-0.2284***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265	-0.0289	-0.0288
생산가능인구 비율	1.3582***	1.3256***	1.3567***
여성인구 비율	2.1589***	2.1423***	2.1489***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3469*	0.2809	0.3322*
등록장애인 비율	-0.0654	-0.0960	-0.0462
상수	-132.8648***	-128.6978***	-132.1526***
n	1143	1143	1143
F	430.29***	434.19***	456.76***

주: *, $p < 0.10$; **, $p < 0.05$; ***, $p < 0.01$

4) 기초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민주당, 기타정당, 무소속이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기타정당, 무소속은 새누리당보다 각각 -0.37%, -0.67%, -0.51%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지출은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당 간 지출의지의 차이로 보기는 어려움.

- 지방의회 다수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별 지출 비율 차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일 때,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은 새누리당보다 -1.6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수당별 비교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단점정부별 분석에서는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와 무소속 단점정부에서만 새누리당 단점정부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와 무소속 단점정부는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각각 -3.66%, -1.02% 낮은 지출 비율이 확인됨.
 - 민주당 단점정부와 새누리당 단점정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5-4> 기초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3583***	-0.3607***	-0.3609***
재정자주도	-0.1955***	-0.1955***	-0.1957***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3692**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4186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9913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6732**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5147***		
민주 다수당		-0.1595	
자유선진 다수당		-0.3657	
민주노동 다수당		-1.5967***	
무소속 다수당		0.0421	
민주 단점			-0.2807
자유선진 단점			-0.4990
민주노동 단점			-3.6623***
무소속 단점			-1.0154***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1098***	-0.1048***	-0.1067***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105	-0.0096	-0.0100
생산가능인구 비율	0.4668***	0.4757***	0.4721***
여성인구 비율	0.5186***	0.4956***	0.5021***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8374***	0.8329***	0.8339***
등록장애인 비율	-0.1434	-0.1401	-0.1483
상수	-38.0287***	-37.7309***	-37.6754***
n	1143	1143	1143
F	136.36***	140.62***	140.43***

주: *, $p < 0.10$; **, $p < 0.05$; ***, $p < 0.01$

5) 기초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0.99%, 0.95%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비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경우와 자유선진당인 경우, 새누리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경우와 비교하여,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지출 비율이 -0.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1.21%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와 민주노동당 단점정부가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는 1.49%, 민주노동당 단점정부는 1.16%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5> 기초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1589***	-0.1417***	-0.1509***
재정자주도	-0.1172***	-0.1179***	-0.1177***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1339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9904*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9485***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1423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0708		
민주 다수당		-0.2982**	
자유선진 다수당		1.2105***	
민주노동 다수당		0.0316	
무소속 다수당		-0.2457	
민주 단점			-0.2307
자유선진 단점			1.4880**
민주노동 단점			1.1602***
무소속 단점			-0.3428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263	0.0372	0.0301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57*	0.0049	0.0054
생산가능인구 비율	0.1314***	0.1388***	0.1305***
여성인구 비율	0.2852***	0.3005***	0.2910***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1046*	0.1133**	0.1040*
등록장애인 비율	-0.0944	-0.0780	-0.0995
상수	-12.4112**	-13.9958**	-12.6546**
n	1143	1143	1143
F	110.14***	44.48***	240.05***

주: *, $p < 0.10$; **, $p < 0.05$; ***, $p < 0.01$

6) 기초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이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면 2.20%, 민주노동당이면 4.92%, 그리고 무소속이면 0.96%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기타 정당이면 지출 비율은 -0.88%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에서도 지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남. 민주당과 무소속이 지방의회의 다수당을 구성하는 경우,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경우보다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2.00%, 무소속이 다수당이면 0.54%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정당별 단점정부에서도 지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남. 민주당 단점정부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각각 2.07%, 6.46%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6> 기초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1899***	-0.2496***	-0.2029***
재정자주도	-0.1504***	-0.1516***	-0.1495***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2.1968***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2751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4.9214***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8791***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9569***		
민주 다수당		2.0020***	
자유선진 다수당		-0.2285	
민주노동 다수당		-0.1296	
무소속 다수당		0.5366*	
민주 단점			2.0749***
자유선진 단점			0.1073
민주노동 단점			6.4576***
무소속 단점			0.0185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774*	0.0374	0.0660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177**	-0.0202***	-0.0208***
생산가능인구 비율	0.4706***	0.4007***	0.4515***
여성인구 비율	0.7586***	0.7421***	0.7577***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5623***	-0.6471***	-0.5795***
등록장애인 비율	-0.0833	-0.1711	-0.0570
상수	-52.7993***	-44.8862***	-50.9490***
n	1143	1143	1143
F	165.89***	163.82***	176.29***

주: *, $p < 0.10$; **, $p < 0.05$; ***, $p < 0.01$

7) 기초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거나 기타정당이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면 -1.15%, 기타정당이면 -1.24%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새누리당보다 지출 비율이 -1.06%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수당별 비교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단점정부 분석에서도 다수당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1.19%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단점정부와 새누리당 단점정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표 5-7> 기초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3696***	-0.3709***	-0.3703***
재정자주도	-0.1051***	-0.1054***	-0.104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1349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1.147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1.3536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1.2441***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0103		
민주 다수당		-0.1258	
자유선진 다수당		-1.0637***	
민주노동 다수당		0.0173	
무소속 다수당		-0.0199	
민주 단점			-0.0935
자유선진 단점			-1.1885**
민주노동 단점			-0.368
무소속 단점			-0.0779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2197***	-0.2170***	-0.2194***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55	-0.0056	-0.0055
생산가능인구 비율	0.1549***	0.1627***	0.1635***
여성인구 비율	0.5677***	0.5596***	0.5608***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184	-0.0098	-0.0076
등록장애인 비율	-0.0001	0.0197	0.0082
상수	-18.6219***	-18.9375***	-19.0006***
n	1143	1143	1143
F	124.27***	119.39***	116.73***

주: *, $p < 0.10$; **, $p < 0.05$; ***, $p < 0.01$

8) 기초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 기타정당, 무소속이면 노동지출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의 노동지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인 경우와 비교하여, 민주당은 -0.28% , 자유선진당은 -0.40% , 기타정당은 -0.29% , 무소속은 -0.24% 낮은 것으로 확인됨 .

○ 지방의회 다수당별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거나 무소속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0.23% ,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0.34%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 자유선진당 단점정부,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각각 -0.21% , -0.42% , -0.23%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8> 기초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298**	-0.0257*	-0.0301**
재정자주도	-0.0021	-0.0017	-0.001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2751***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3973***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3100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2883***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2366***		
민주 다수당		-0.2322***	
자유선진 다수당		-0.3368***	
민주노동 다수당		0.4301	
무소속 다수당		0.0445	
민주 단점			-0.2059***
자유선진 단점			-0.4138***
민주노동 단점			-0.2280*
무소속 단점			0.0283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002	0.0047	0.0007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67	0.0072*	0.0073*
생산가능인구 비율	0.1009***	0.1124***	0.1063***
여성인구 비율	0.0939***	0.1006***	0.0939***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311	-0.0198	-0.0272
등록장애인 비율	0.0883**	0.1019***	0.0850**
상수	-10.9482***	-12.4033***	-11.4204***
n	1143	1143	1143
F	21.38***	21.42***	23.50***

주: *, $p < 0.10$; **, $p < 0.05$; ***, $p < 0.01$

9) 기초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기타정당이면 보훈지출 비율이 -0.17%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정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노동당 단점정부 지역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 지역의 지출 비율보다 -0.15%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새누리당 단점정부와 민주당 단점정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표 5-9> 기초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050	-0.0055	-0.0042
재정자주도	0.0018**	0.0017**	0.0016**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0035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0224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2420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1721***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0792		
민주 다수당		-0.0151	
자유선진 다수당		0.0066	
민주노동 다수당		-0.1157	
무소속 다수당		0.1647	
민주 단점			-0.0168
자유선진 단점			0.0199
민주노동 단점			-0.1491***
무소속 단점			0.5453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015	-0.0003	-0.0003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03	-0.0005	-0.0003
생산가능인구 비율	-0.0086*	-0.0068	-0.0084*
여성인구 비율	-0.0059	-0.0078	0.0008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211***	-0.0205***	-0.0210***
등록장애인 비율	0.0018	0.0086	0.0049
상수	1.0345	0.9605	0.6680
n	1143	1143	1143
F	29.20***	5.71***	35.52***

주: *, $p < 0.10$; **, $p < 0.05$; ***, $p < 0.01$

10) 기초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기타정당이면 지출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의 지출 비율보다 -0.13%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경우보다 지출 비율이 0.14%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다수당 비교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0.16%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무소속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0.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 단점정부와 민주당 단점정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표 5-10> 기초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069	-0.0064	-0.0065
재정자주도	0.0028***	0.0030***	0.002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0161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0991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0509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1341***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0559		
민주 다수당		-0.0070	
자유선진 다수당		0.1394*	
민주노동 다수당		-0.0569	
무소속 다수당		0.0684	
민주 단점			0.0051
자유선진 단점			0.1562*
민주노동 단점			0.0163
무소속 단점			-0.0779**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078	-0.0068	-0.0077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12	0.0013	0.0014
생산가능인구 비율	0.0008	0.0025	0.0011
여성인구 비율	-0.0229*	-0.0212	-0.0232*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195	0.0193	0.0190
등록장애인 비율	0.0118	0.0115	0.0090
상수	1.0386	0.7860	1.0205
n	1143	1143	1143
F	6.92***	4.53***	7.70***

주: *, $p < 0.10$; **, $p < 0.05$; ***, $p < 0.01$

11)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새누리당인 경우보다 지출 비율이 0.2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노동당, 기타정당, 무소속이면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보다 각각 -0.40%, -0.36%, -0.22%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0.29%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소속이 다수당이면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보다 -0.19%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0.27% 높은 반면, 민주노동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0.43%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1>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203	-0.0194	-0.0225*
재정자주도	0.0077**	0.0075**	0.0076**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0732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2778**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노동	-0.4027***		
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0.3560***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2229***		
민주 다수당		-0.0191	
자유선진 다수당		0.2866***	
민주노동 다수당		-0.0724	
무소속 다수당		-0.1902***	
민주 단점			0.0640
자유선진 단점			0.2673**
민주노동 단점			-0.4278***
무소속 단점			-0.1698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073	0.0105	0.0089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61***	-0.0064***	-0.0061***
생산가능인구 비율	0.0414***	0.0396***	0.0400***
여성인구 비율	-0.0363	-0.0269	-0.0341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182	0.0128	0.0106
등록장애인 비율	0.1538***	0.1516***	0.1515***
상수	-2.1299	-2.4917	-2.1421
n	1143	1143	1143
F	25.49***	6.55***	27.32***

주: *, $p < 0.10$; **, $p < 0.05$; ***, $p < 0.01$

2. 광역자치단체 인과관계 분석

1) 광역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2.22%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와 민주당인 경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다수당 모형에서는 정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교육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2.19%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 단점정부와 민주당 단점정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비율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표 5-12> 광역자치단체 교육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1.9685***	-2.1422***	-2.0294***
재정자주도	0.0622	0.0685	0.0652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8542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2.2240***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2169		
민주 다수당		0.7740	
자유선진 다수당		-1.0452	
민주 단점			0.9522
자유선진 단점			-2.1876***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3475	0.3098	0.3038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566	-0.0641	-0.0703
생산가능인구 비율	0.2835	0.2221	0.2446
여성인구 비율	4.3271***	4.0194***	4.2162***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3.8389***	-3.7727***	-3.8722***
등록장애인 비율	1.5177	1.5864	1.5465
상수	-230.9326***	-210.8449***	-221.5154***
n	80	80	80
F	239.14***	123.97***	247.22***

주: *, $p < 0.10$; **, $p < 0.05$; ***, $p < 0.01$

2) 광역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인 경우의 지출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의 지출 비율보다 -0.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무소속인 경우에는 새누리당보

다 0.49%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보건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보다 -0.38%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보건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와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보건지출 비율보다 각각 -0.64%, -0.40%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5-13> 광역자치단체 보건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4382***	-0.2393**	-0.3150***
재정자주도	0.0358**	0.0282**	0.0305**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3364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2442*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4925*		
민주 다수당		-0.3814**	
자유선진 다수당		-0.0351	
민주 단점			-0.6392**
자유선진 단점			-0.3977***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334	-0.0269	0.0230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32	0.0053	-0.0079
생산가능인구 비율	-0.0774	-0.0708	-0.0291
여성인구 비율	-0.1647	0.0009	0.0924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1619	0.0999	0.1303
등록장애인 비율	0.2592	0.1363	0.3945
상수	13.0760	5.1497	-4.8315
n	80	80	80
F	3.04***	2.11**	3.68***

주: *, $p < 0.10$; **, $p < 0.05$; ***, $p < 0.01$

3)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거나 자유선진당이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1.52% 높으며,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4.86%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거나 자유선진당이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1.56%,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4.1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와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단점정부는 1.77%, 자유선진당 단점정부는 4.95%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4>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2.1481***	-2.3410***	-2.2374***
재정자주도	-0.1818***	-0.1860***	-0.1775***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1.5210*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4.8578***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3636		
민주 다수당		1.5557**	
자유선진 다수당		4.1254***	
민주 단점			1.7676**
자유선진 단점			4.9527***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4107*	0.4788**	0.3230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1515	-0.1562	-0.1725
생산가능인구 비율	1.6397***	1.8124***	1.5651***
여성인구 비율	4.0735***	3.8345***	3.8372***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1.1969**	1.5134***	1.1417**
등록장애인 비율	1.2128	1.4946	1.1998
상수	-301.7686***	-305.9250***	-282.1602***
n	80	80	80
F	80.77***	34.05***	85.69***

주: *, $p < 0.10$; **, $p < 0.05$; ***, $p < 0.01$

4) 광역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1.42%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 비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1.4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1.27%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5> 광역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1.0920***	-1.0186***	-1.0792***
재정자주도	-0.1189***	-0.1243***	-0.118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0832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1.4170***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1790		
민주 다수당		-0.0359	
자유선진 다수당		1.4812***	
민주 단점			-0.2273
자유선진 단점			1.2695***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3441**	0.3834***	0.3856***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2700***	-0.2695***	-0.2893***
생산가능인구 비율	0.7090***	0.7740***	0.7371***
여성인구 비율	-0.426	-0.2844	-0.2209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2.3449***	2.3831***	2.3050***
등록장애인 비율	0.3897	0.4378	0.6231
상수	-29.2639	-42.1193	-43.2738
n	80	80	80
F	21.60***	30.69***	23.36***

주: *, $p < 0.10$; **, $p < 0.05$; ***, $p < 0.01$

5) 광역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에 따른 취약계층지출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의회 다수당별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정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결정요인
 - 단점정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표 5-16> 광역자치단체 취약계층지원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2486	-0.4597**	-0.4253*
재정자주도	0.0679	0.0750**	0.0750**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1447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0540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7434		
민주 다수당		0.4069	
자유선진 다수당		-0.1259	
민주 단점			0.3644
자유선진 단점			0.3229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4819***	-0.5432***	-0.5524***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772	0.1110*	0.1122*
생산가능인구 비율	-0.2966*	-0.3386**	-0.3549**
여성인구 비율	1.4968**	1.0185	1.0954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6222**	-0.4864*	-0.5294**
등록장애인 비율	-0.5442	-0.8108	-0.8462
상수	-37.7891	-9.1915	-11.3624
n	80	80	80
F	15.66***	11.28***	13.92***

주: *, $p < 0.10$; **, $p < 0.05$; ***, $p < 0.01$

6) 광역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거나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면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보다 1.75% 높으며,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보다 3.3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나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새누리당보다 지출 비율이 1.37% 높으며, 자유선진당이 다수당이면 새누리당보다 2.4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와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1.81% 높으며,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은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3.31%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7> 광역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1156	0.1370	0.2689
재정자주도	-0.1215**	-0.1332***	-0.1280***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1.7474***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3.3529***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4237		
민주 다수당		1.6726***	
자유선진 다수당		2.4716***	
민주 단점			1.8068***
자유선진 단점			3.3143***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3312**	0.3849***	0.2668*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386	-0.0691	-0.0801
생산가능인구 비율	0.7484***	0.8873***	0.7044***
여성인구 비율	1.9182**	1.7737**	1.8998**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6848	-0.4940	-0.8158**
등록장애인 비율	-0.0282	0.2418	-0.0086
상수	-142.2143***	-147.3459***	-135.5806***
n	80	80	80
F	17.62***	12.28***	17.67***

주: *, $p < 0.10$; **, $p < 0.05$; ***, $p < 0.01$

7) 광역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새누리당 보다 지출 비율이 0.7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새누리당보다 0.5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0.82%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8> 광역자치단체 노인·청소년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6873***	-0.6629***	-0.6276***
재정자주도	-0.0317*	-0.0329**	-0.0347**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1147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7654***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1109		
민주 다수당		-0.0774	
자유선진 다수당		0.5526***	
민주 단점			0.2508
자유선진 단점			0.8154***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1167	-0.0831	-0.1388*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626	0.0503	0.0661
생산가능인구 비율	0.1931**	0.2295***	0.1816*
여성인구 비율	-0.0200	0.1507	-0.0863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4275***	0.4071***	0.4242***
등록장애인 비율	0.1782	0.3356	0.0542
상수	-4.0785	-16.5207	1.2359
n	80	80	80
F	12.77***	15.06***	13.67***

주: *, $p < 0.10$; **, $p < 0.05$; ***, $p < 0.01$

8) 광역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이면 새누리당보다 지출 비율이 각각 -0.86%, -0.97%, -0.77%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0.63%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노동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와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각각 -0.96%, -0.95%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9> 광역자치단체 노동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198	-0.1565	-0.2606**
재정자주도	0.0092	0.0201	0.0221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8612***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9743***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7674**		
민주 다수당		-0.6279***	
자유선진 다수당		-0.4166	
민주 단점			-0.9632***
자유선진 단점			-0.9537***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2184***	0.1808**	0.2568***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139	0.0214	0.0066
생산가능인구 비율	0.3273***	0.2650***	0.3396***
여성인구 비율	0.4324	0.2935	0.4029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1504	0.1694	0.2427
등록장애인 비율	1.0356***	0.8415**	1.1877***
상수	-55.4128**	-43.0092*	-57.3877**
n	80	80	80
F	5.74***	5.69***	7.34***

주: *, $p < 0.10$; **, $p < 0.05$; ***, $p < 0.01$

9) 광역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거나 무소속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보다 각각 0.11%, 0.11%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0.0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보훈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자유선진당 단점정부가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지출 비율이 0.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0> 광역자치단체 보훈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173	0.0151	0.0183
재정자주도	0.0030	0.0013	0.0013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0414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1107***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1060**		
민주 다수당		0.0169	
자유선진 다수당		0.0706***	
민주 단점			0.0351
자유선진 단점			0.1007***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070	0.0117*	0.0071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18	-0.0010	-0.0003
생산가능인구 비율	0.0118	0.0193**	0.0140*
여성인구 비율	-0.0560	-0.0266	-0.0379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0149	0.0089	0.0054
등록장애인 비율	0.0420	0.0496	0.0316
상수	1.3765	-0.6768	0.4639
n	80	80	80
F	36.04***	5.59***	38.09***

주: *, $p < 0.10$; **, $p < 0.05$; ***, $p < 0.01$

10) 광역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거나 무소속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각각 0.31%, 0.5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0.22%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다수당 모형은 모형적합도가 $F=1.24$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주택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는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지출 비율이 0.26%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유선진당 단점정부는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지출 비율이 -0.28%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1> 광역자치단체 주택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1982*	-0.0763	-0.0352
재정자주도	0.0091	0.0041	0.0018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3145***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2190**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4956**		
민주 다수당		0.0272	
자유선진 다수당		-0.1260	
민주 단점			0.2636**
자유선진 단점			-0.2777***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0282	-0.0014	-0.0287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296	0.0065	0.0161
생산가능인구 비율	-0.0754	-0.0563	-0.0666
여성인구 비율	0.2445	0.4450**	0.3380*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2145**	-0.2787***	-0.2679***
등록장애인 비율	-0.1274	0.0204	-0.1485
상수	-5.0802	-17.1701	-9.7126
n	80	80	80
F	7.30***	1.24	4.00***

주: *, $p < 0.10$; **, $p < 0.05$; ***, $p < 0.01$

다수당 모형은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1.24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모형임

11)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재정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통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이거나 자유선진당이면 사회복지일반 지출 비율이 각각 0.23%, 0.3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다수당별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거나 자유선진당이면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각각 0.17%, 0.22%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 단점정부 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결정요인

- 민주당 단점정부와 자유선진당 단점정부의 지출 비율이 새누리당 단점정부보다 각각 0.24%, 0.36%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2>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지출 비율 영향요인 분석결과

	단체장 모형	다수당 모형	단점 모형
1인당 총세입	-0.0401	-0.1191***	-0.0967**
재정자주도	0.0012	0.0039	0.0039
단체장 소속정당 민주	0.2256**		
단체장 소속정당 자유선진	0.3512***		
단체장 소속정당 무소속	-0.1680		
민주 다수당		0.1733**	
자유선진 다수당		0.2179**	
민주 단점			0.2375**
자유선진 단점			0.3613***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0.1369***	0.1456***	0.1266***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0.0003	-0.0060	-0.0039
생산가능인구 비율	0.0221	0.0322	0.0099
여성인구 비율	0.4835***	0.4641***	0.4463***
기초생보수급자 비율	-0.2193***	-0.1959***	-0.2225***
등록장애인 비율	0.2672**	0.3786***	0.3064**
상수	-29.3065***	-29.8919***	-26.5431***
n	80	80	80
F	31.41***	18.11***	32.45***

주: *, $p < 0.10$; **, $p < 0.05$; ***, $p < 0.01$

VI. 결론: 시사점 및 함의

1. 정당의 정책 분화를 확인

- 향후 한국정치와 선거에서 복지가 최대 의제가 될 전망의 근거를 제시.
-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 의식율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복지 균열’이 존재하며, 그렇게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당적 변화와 기초의회의 정당분포변화는 기초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끼침.
- 이러한 발견은 한국 정당간 이념적·정책적 차이가 없다는 기존 시각과 차이가 있으며, 정책 경쟁이 복지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
-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복지 친화적이며, 새누리당이 성장 중심적인 정당임을 증명.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 지방의회인 지역에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의 지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남.

2. 정권교체의 효과를 지방차원에서 확인

- 한국에서 사회복지비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됨.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2010년을 전후한 시기임.
- 친환경 무상급식, 만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의 정책 파급 효과일

것으로 추정.

- 민주당→새누리당보다는 새누리당→민주당으로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복지지출 비율의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음.

3. 노인 및 장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

- 역대 총선 및 대선에서 민주당은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서 매우 빈약한 지지를 얻음으로써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 이전까지는 그 이유를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성장 지향성이나 반공냉전 등 이념적 요인에서만 규명하였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 밝혀진 중요한 점은 적어도 지방정부의 노인 정책 수준에서는 새누리당의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임. 따라서, 노인층의 보수 정당 지지의 근거를 이해관계나 물질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번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 대표의 직속기구로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TFT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함.

4.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호남

- 전반적으로 영남지역보다 호남지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 민주당이 대다수 집권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새누리당이 대다수 집권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낮음.
- 반면 전국적인 비교에서는 민주당 집권지역이 2011년부터 높아

짐.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복지 지출 상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정권교체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

- 호남의 낮은 복지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재정 여건 탓일 수도 있지만 영남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낫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인식과 무능력이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됨.
- 호남 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천 등 평가 요소로서 복지정책 지수(welfare policy index)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5. 대표 정책의 발굴이 필요

- 지방정부 수준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교육과 보육임.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3無1半(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음.
-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개혁 성향의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주도함으로써 교육정책에서는 민주당이 비교 우위를 지닐 수 있었음.
- 평균 지출비율은 앞서지만 경제특구, 교육특구처럼 복지정책의 창의적, 균형적 발전시킨 선구적 모델이 아직은 없음. 특히 뒤쳐진 분야(노인과 청소년) 및 당의 성격상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표 정책을 발굴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홍보하고 공론화시키는 것이 요구됨.

6. 복지정당으로서의 위상 정립

- 이번 연구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10년(민선 4기와 5기)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복지 정책을 꾸준히 선도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적어도 지출만을 놓고 보면 교육, 사회복지, 보육 및 육아 분야에서 복지정책을 주도하여 왔음. 이러한 사실을 당원 및 대의원,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 나아가 지지자 그룹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정체된 당 분위기의 일신)

7. 소속 단체장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

-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분야별 상위 10% 우수 단체장 명단)를 보면 2011년 이후 11개 정책 영역 중 사회복지와 밀접한 영역(교육/복지/보건/취약계층/여성보육)에서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정당공천제가 합의되어 특정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보고서를 당 차원의 공식 자료로 발간함으로써 향후 공직자 선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컨텐츠로 활용 가능.

8. 통합 신당의 복지정책의 지침

- 6.4 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의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 및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통합 정당의 지도부가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제언은 당의 복지정책 수립 및 새정치 비전 확립에 적극 활용 가능함.

VI. 토론: 우수 복지 지방정부

1. 개요

○ 사회복지지출 상위 10% 기초자치단체 분석

- 분석 세출항목: 사회복지 관련 3개 대분류(교육/ 보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내부 8개 중분류(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항목
- 위 항목의 지출비율에 따른 상위 10% 기초자치단체 분석
- 연도별 상위 10%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별 점유율 분석

○ 주요 내용

- 민선5기에서 다수의 기초단체 집권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었음. 그 결과 2011년 이후 상위 10% 기초단체 중 민주당 집권지역의 수가 증가함.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민선5기 이후 민주당의 지출비율 역전효과와도 관련이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경우 민선5기에서도 새누리당 집권지역이 상위 10% 기초자치단체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민선5기(2011년) 이후 민주당 집권지역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나, 상위 10% 기초자치단체의 다수는 여전히 새누리당 집권지역임.
- 상위 10%에 민주당 기초단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민선5기 이후 역전되었음. 이는 민주

당 집권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 증가가 정당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사회복지 하위항목 중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비율은 민선5기 이후 역전함.
- 민주당 집권지역은 보육·가족 및 여성 복지에 적극적이며,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집권지역은 노인·청소년 복지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5대 주요 항목의 특징

지출 유형	연도	상위10 % 단체 수	새누리	민주	자유 선진	민노	기타	무 소 속
교육	2008	23	21	2	0	0	0	0
	2009	23	21	1	0	0	0	1
	2010	23	19	3	0	0	0	1
	2011	23	4	18	0	0	0	1
	2012	23	4	19	0	0	0	0
보건	2008	23	14	1	3	0	0	5
	2009	23	19	1	1	0	0	2
	2010	23	18	1	1	0	0	3
	2011	23	8	10	2	1	0	2
	2012	23	9	10	1	0	0	3
사회 복지	2008	23	19	4	0	0	0	0
	2009	23	19	4	0	0	0	0
	2010	23	19	4	0	0	0	0
	2011	23	11	7	2	0	0	3
	2012	23	11	7	2	1	0	2
보육· 가족 및 여성	2008	23	20	3	0	0	0	0
	2009	23	19	4	0	0	0	0
	2010	23	19	3	0	0	0	1
	2011	23	5	14	1	2	0	1
	2012	23	5	14	1	2	0	1
노인 ·청소년	2008	23	22	1	0	0	0	0
	2009	23	23	0	0	0	0	0
	2010	23	23	0	0	0	0	0
	2011	23	14	4	1	1	0	3
	2012	23	14	4	2	1	0	2

2. 영역별 지출 비율 상위 10% 자치단체 리스트

1) 교육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노원구	새	서울 중구	새	서울 중구	새	서울 종로구	민	서울 종로구	민
서울 구로구	새	서울 중랑구	새	서울 성동구	새	서울 성동구	민	서울 성동구	민
서울 송파구	새	서울 노원구	새	서울 중랑구	새	서울 동대문구	새	서울 관악구	새
인천 서구	새	서울 마포구	새	서울 노원구	새	서울 서초구	새	서울 서초구	새
경기 수원시	새	서울 서초구	새	서울 서초구	새	서울 강남구	새	서울 강남구	새
경기 성남시	새	서울 강남구	새	서울 강남구	새	인천 계양구	새	인천 계양구	새
경기 안양시	새	인천 서구	새	서울 송파구	새	인천 서구	새	인천 서구	새
경기 광명시	새	울산 동구	무	대구 달성군	새	경기 수원시	새	경기 수원시	새
경기 과천시	새	경기 수원시	새	울산 동구	무	경기 성남시	새	경기 성남시	새
경기 오산시	새	경기 성남시	새	경기 수원시	새	경기 안양시	새	경기 의정부시	새
경기 시흥시	새	경기 안양시	새	경기 성남시	새	경기 부천시	새	경기 안양시	새
경기 군포시	새	경기 광명시	새	경기 광명시	새	경기 광명시	새	경기 부천시	새
경기 파주시	새	경기 오산시	새	경기 과천시	새	경기 안산시	새	경기 광명시	새
경기 화성시	새	경기 시흥시	새	경기 오산시	새	경기 과천시	새	경기 안산시	새
경기 광주시	새	경기 군포시	새	경기 군포시	새	경기 오산시	새	경기 고양시	새

강원 화천군	새	경기 이천시	새	경기 의왕시	새	경기 시흥시	새	경기 과천시	새
강원 양구군	새	경기 화성시	새	경기 화성시	새	경기 군포시	새	경기 오산시	새
전남 순천시	민	경기 광주시	새	강원 횡성군	새	경기 의왕시	새	경기 시흥시	새
전남 광양시	민	강원 양구군	새	전북 순창군	열	경기 이천시	새	경기 군포시	새
경북 칠곡군	새	전남 순천시	새	전남 목포시	새	경기 화성시	새	경기 의왕시	새
경남 창원시	새	경남 창원시	새	전남 순천시	새	전북 순창군	새	경기 안성시	새
경남 김해시	새	경남 김해시	새	경북 칠곡군	새	전남 목포시	새	강원 횡성군	새
경남 거창군	새	경남 거창군	새	경남 거창군	새	전남 순천시	무	전남 목포시	새

2) 보건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광진구	새	서울 광진구	새	서울 광진구	새	서울 광진구	민	서울 강북구	민
서울 도봉구	새	서울 성북구	새	서울 강북구	새	서울 성북구	민	서울 도봉구	민
부산 서구	새	서울 강북구	새	서울 은평구	새	서울 구로구	민	서울 은평구	민
부산 부산진구	새	서울 은평구	새	서울 구로구	새	서울 송파구	새	서울 서대문구	민
부산 동래구	새	서울 서대문구	새	서울 송파구	새	부산 서구	새	서울 마포구	민
대구 남구	새	서울 구로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강서구	새	서울 구로구	민
대전 서구	새	서울 영등포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대구 남구	새	서울 동작구	민
대전 유성구	새	서울 동작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서울 서초구	새
경기 성남시	새	서울 관악구	새	부산 수영구	새	인천 남구	민	서울 송파구	새

경기 군포시	새	서울 강동구	새	대구 남구	새	인천 연수구	민	서울 강동구	민
경기 의왕시	새	부산 서구	새	인천 남구	새	인천 남동구	민노	부산 서구	새
경기 가평군	무	부산 동래구	새	대전 서구	새	인천 계양구	민	부산 강서구	새
충남 논산시	자유	부산 강서구	새	대전 유성구	새	대전 서구	자유	부산 수영구	새
충남 연기군	자유	대구 남구	새	울산 남구	새	대전 유성구	민	대구 중구	새
충남 청양군	자유	대전 서구	새	경기 광명시	새	경기 오산시	민	대구 북구	새
충남 홍성군	새	대전 유성구	새	경기 오산시	새	경기 군포시	민	대구 달서구	새
전북 장수군	무	경기 오산시	새	경기 군포시	새	강원 영월군	새	대전 서구	자유
전남 목포시	민	경기 군포시	새	경기 가평군	무	충남 연기군	자유	대전 유성구	민
경북 군위군	무	경기 가평군	무	충북 음성군	무	전북 진안군	민	울산 중구	무
경북 칠곡군	새	강원 화천군	새	충남 논산시	자유	전남 곡성군	무	경기 성남시	민
경북 울릉군	무	충남 논산시	자유	전북 진안군	민	경북 울진군	무	충남 태안군	무
경남 진주시	새	전남 목포시	민	경북 군위군	무	경북 울릉군	새	전남 화순군	무
경남 의령군	무	경북 군위군	무	경북 영양군	새	경남 창녕군	새	경북 청송군	새

3) 사회복지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강서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서구	새	서울 노원구	민	서울 노원구	민
부산 서구	새	부산 동구	새	부산 영도구	새	서울 강서구	민	서울 강서구	민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연제구	무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서구	무
대구 동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무	대구 남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수성구	새
인천 남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부평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남구	민
인천 계양구	새	인천 남구	새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남구	민	인천 남동구	민노
광주 서구	민	인천 부평구	새	광주 서구	민	인천 부평구	민	인천 부평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서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서구	무	인천 계양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서구	무
광주 광산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광산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북구	민
대전 동구	새	광주 광산구	민	대전 동구	새	광주 광산구	민	광주 광산구	민
대전 중구	새	대전 동구	새	대전 중구	새	대전 중구	자유	대전 동구	자유
대전 서구	새	대전 서구	새	대전 서구	새	대전 서구	자유	대전 서구	자유

4-1) 기초생활보장지원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노원구	새	서울 중랑구	새	서울 노원구	새	서울 강북구	민	서울 강북구	민
서울 강서구	새	서울 노원구	새	서울 강서구	새	서울 노원구	민	서울 노원구	민
부산 동구	새	서울 강서구	새	부산 동구	새	서울 강서구	민	서울 강서구	민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동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동구	무	부산 동구	무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연제구	무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연제구	무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무	대구 동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서구	무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부평구	민	대구 달서구	새
인천 부평구	새	광주 동구	민	광주 동구	민	광주 동구	민	인천 부평구	민

광주 서구	민	광주 서구	민	광주 서구	민	광주 서구	무	광주 동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서구	무
광주 북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북구	민	광주 북구	민
대전 동구	새	대전 동구	새	대전 동구	새	대전 동구	자유	대전 동구	자유
대전 중구	새	대전 중구	새	대전 중구	새	대전 중구	자유	대전 중구	자유

4-2) 취약계층지원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부산 서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서구	새	서울 강서구	민	서울 강서구	민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동구	새	부산 동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강서	새	부산 연제구	무	부산 연제구	무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수성구	새
인천 남구	새	인천 남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연수구	새	인천 남동구	새	인천 연수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남구	민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남구	민	인천 연수구	민
광주 동구	민	광주 동구	민	광주 동구	민	인천 연수구	민	인천 부평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남구	민	광주 남구	민	인천 부평구	민	광주 동구	민
대전 동구	새	광주 북구	민	대전 동구	새	광주 동구	민	광주 남구	민
대전 서구	새	대전 동구	새	대전 중구	새	광주 남구	민	광주 북구	민
대전 대덕구	새	대전 중구	새	대전 서구	새	광주 광산구	민	대전 동구	자유
울산 북구	새	대전 서구	새	대전 대덕구	새	대전 동구	자유	대전 중구	자유
충남 공주시	자유	대전 대덕구	새	울산 북구	새	대전 중구	자유	대전 서구	자유
전북 정읍시	무	경기 구리시	민	충남 공주시	자유	대전 서구	자유	대전 대덕구	새
전남 목포시	민	충남 공주시	자유	전북 정읍시	무	대전 대덕구	새	충남 공주시	자유
경북 울진군	새	전북 정읍시	무	전남 목포시	민	충남 공주시	자유	전북 정읍시	민

4-3) 보육·가족 및 여성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광진구	한	서울 광진구	한	서울 중랑구	한	서울 중랑구	한	서울 중랑구	한
서울 동대문구	한	서울 중랑구	한	서울 강북구	한	서울 도봉구	민	서울 도봉구	민
서울 중랑구	한	서울 도봉구	한	서울 도봉구	한	서울 은평구	민	서울 은평구	민
서울 도봉구	한	서울 은평구	한	서울 은평구	한	서울 양천구	민	서울 양천구	민
서울 노원구	한	서울 양천구	한	서울 양천구	한	서울 강서구	민	서울 구로구	민
서울 양천구	한	서울 구로구	한	서울 구로구	한	서울 구로구	민	서울 금천구	민

서울 강서구	한	서울 관악구	한	서울 송파구	한	서울 관악구	민	서울 동작구	민
서울 구로구	한	부산 동래구	한	서울 강동구	한	서울 송파구	한	서울 송파구	한
서울 관악구	한	부산 사하구	한	부산 동래구	한	서울 강동구	민	서울 강동구	민
부산 동래구	한	대구 서구	한	대구 서구	한	대구 북구	한	대구 북구	한
부산 사하구	한	대구 북구	한	대구 북구	한	대구 수성구	한	대구 달서구	한
부산 금정구	한	대구 달서구	한	대구 달서구	한	대구 달서구	한	인천 남구	민
대구 서구	한	인천 부평구	한	인천 부평구	한	인천 남구	민	인천 남동구	민노
대구 북구	한	인천 계양구	한	인천 계양구	한	인천 남동구	민노	인천 부평구	민
대구 달서구	한	광주 서구	민	인천 서구	한	인천 부평구	민	인천 계양구	민
인천 남구	한	광주 남구	민	광주 서구	민	인천 계양구	민	인천 서구	민
인천 부평구	한	광주 북구	민	광주 북구	민	인천 서구	민	광주 서구	무
인천 계양구	한	광주 광산구	민	광주 광산구	민	광주 서구	무	광주 북구	민
광주 서구	민	대전 서구	한	대전 서구	한	광주 북구	민	광주 광산구	민
광주 북구	민	대전 유성구	한	대전 유성구	한	광주 광산구	민	대전 서구	자유
광주 광산구	민	대전 대덕구	한	울산 동구	무	대전 서구	자유	대전 유성구	민
대전 서구	한	경기 안산시	한	울산 북구	한	대전 유성구	민	울산 동구	한
대전 유성구	한	충북 청주시	한	경기 안산시	한	울산 북구	민노	울산 북구	민노

4-4) 노인·청소년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도봉구	새	서울 강북구	새	서울 은평구	새	서울 강북구	민	서울 은평구	민
서울 양천구	새	서울 은평구	새	부산 서구	새	서울 노원구	민	부산 서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동구	새	서울 은평구	민	부산 동구	무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동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동구	무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영도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북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부산 사상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금정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부산 연제구	무	대구 서구	무
대구 서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서구	무	대구 수성구	새
인천 남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남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계양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달서구	새	대구 북구	새	인천 동구	민노
인천 서구	새	인천 동구	새	인천 동구	새	대구 수성구	새	인천 남구	민
광주 남구	민	인천 남구	새	인천 남구	새	대구 달서구	새	인천 부평구	민
대전 중구	새	인천 계양구	새	인천 부평구	새	인천 동구	민노	인천 계양구	민
대전 서구	새	대전 중구	새	인천 서구	새	인천 남구	민	대전 동구	자유
울산 중구	새	울산 중구	새	대전 중구	새	대전 중구	자유	대전 중구	자유

4-5) 노동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성북구	새	서울 강북구	새	서울 동대문구	새	서울 종로구	민	서울 종로구	민
서울 강북구	새	서울 은평구	새	서울 은평구	새	서울 동대문구	민	서울 중구	민
서울 은평구	새	서울 마포구	새	서울 마포구	새	서울 성북구	민	서울 성북구	민
서울 마포구	새	서울 동작구	새	서울 동작구	새	서울 강북구	민	서울 강북구	민
서울 동작구	새	서울 관악구	새	부산 서구	새	서울 은평구	민	서울 은평구	민
서울 관악구	새	서울 송파구	새	부산 영도구	새	서울 마포구	민	서울 마포구	민
부산 수영구	새	서울 강동구	새	부산 동래구	새	서울 구로구	민	서울 구로구	민
부산 기장군	새	부산 서구	새	부산 남구	새	서울 금천구	민	서울 금천구	민
대구 서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부산 해운대구	새	서울 동작구	민	서울 영등포구	민
울산 동구	무	부산 해운대구	새	부산 금정구	새	서울 관악구	민	서울 동작구	민
경기 성남시	새	부산 금정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부산진구	새	서울 관악구	민
경기 의정부시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부산 금정구	새	서울 강남구	새
경기 안양시	새	부산 수영구	새	대구 중구	새	부산 연제구	무	부산 연제구	무
경기 광명시	새	부산 사상구	새	대구 서구	새	부산 수영구	새	부산 수영구	새
경기 안산시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북구	새	부산 기장군	무	대구 중구	새
경기 과천시	새	대구 북구	새	대구 수성구	새	대구 중구	새	대구 서구	무
경기 군포시	새	대구 수성구	새	광주 서구	민	대구 서구	무	대구 남구	새
강원 태백시	새	인천 남구	새	광주 남구	민	대구 북구	새	대구 북구	새

강원 삼척시	새	인천 계양구	새	광주 북구	민	대구 수성구	새	대구 수성구	새
충남 태안군	자유	광주 남구	민	광주 광산구	민	광주 남구	민	인천 동구	민노
경북 경주시	새	광주 북구	민	대전 동구	새	경기 평택시	민	인천 남구	민
경북 김천시	새	울산 중구	새	울산 중구	새	경기 안산시	민	광주 동구	민
경북 구미시	새	울산 동구	무	경북 구미시	새	경북 구미시	새	경북 구미시	새

4-6) 보훈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중구	새	서울 중구	새	부산 남구	새	부산 기장군	무	부산 기장군	무
서울 중랑구	새	인천 강화군	무	인천 강화군	무	인천 중구	민	인천 동구	민노
서울 은평구	새	대전 중구	새	대전 동구	새	인천 연수구	민	인천 남구	민
인천 남구	새	경기 평택시	새	경기 부천시	새	인천 계양구	민	인천 연수구	민
인천 강화군	무	경기 고양시	새	경기 과천시	새	인천 강화군	무	인천 남동구	민노
울산 중구	새	경기 구리시	민	경기 구리시	민	대전 동구	자유	인천 부평구	민
경기 광주시	새	경기 하남시	새	경기 이천시	새	대전 서구	자유	인천 계양구	민
강원 태백시	새	경기 광주시	새	경기 김포시	새	경기 과천시	새	인천 서구	민
충북 청원군	새	강원 횡성군	새	강원 횡성군	새	경기 구리시	민	인천 강화군	무
충북 옥천군	민	강원 인제군	새	충북 보은군	민	경기 용인시	민	경기 수원시	민
충남 서산시	민	충북 옥천군	민	충남 아산시	새	경기 이천시	새	경기 군포시	민
전북 진안군	민	충남 아산시	새	전남 보성군	민	경기 김포시	민	경기 이천시	새

전북 무주군	무	충남 연기군	자유	경북 영양군	새	충북 괴산군	무	경기 김포시	민
전북 임실군	무	전북 진안군	민	경북 영덕군	새	충남 서산시	새	경기 양평군	새
전남 담양군	민	전남 무안군	민	경북 청도군	새	경북 영양군	무	충남 계룡시	새
전남 함평군	무	전남 함평군	무	경북 울진군	새	경북 영덕군	새	전남 담양군	민
전남 장성군	무	경북 김천시	새	경남 밀양시	민	경북 칠곡군	무	전남 보성군	민
경북 안동시	새	경북 안동시	새	경남 양산시	무	경남 양산시	새	경북 경주시	새
경북 영덕군	새	경북 문경시	새	경남 의령군	무	경남 함안군	무	경북 영덕군	새
경남 사천시	새	경북 영양군	새	경남 창녕군	무	경남 창녕군	새	경북 청도군	새
경남 밀양시	민	경남 통영시	새	경남 남해군	새	경남 고성군	새	경북 칠곡군	무
경남 양산시	무	경남 사천시	새	경남 산청군	새	경남 산청군	새	경남 창녕군	새
경남 산청군	새	경남 양산시	무	경남 합천군	새	경남 합천군	무	경남 산청군	새

4-7) 주택 지출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강원 동해시	새	서울 강북구	새	부산 중구	무	서울 강북구	민	부산 중구	새
강원 영월군	새	부산 중구	무	강원 영월군	새	부산 중구	새	부산 강서	새
강원 평창군	새	강원 동해시	새	강원 평창군	새	강원 영월군	새	강원 영월군	새
강원 정선군	새	강원 영월군	새	강원 정선군	새	강원 평창군	민	강원 평창군	민
강원 화천군	새	강원 정선군	새	강원 양구군	새	강원 정선군	민	강원 정선군	민
충남 공주시	자유	강원 양구군	새	충남 공주시	자유	강원 양구군	새	강원 양구군	새

충남 부여군	새	충남 천안시	새	충남 금산군	자유	충남 천안시	새	충남 천안시	새
충남 예산군	새	충남 공주시	자유	충남 서천군	민	충남 공주시	자유	충남 금산군	자유
충남 태안군	자유	충남 금산군	자유	충남 예산군	새	충남 서천군	민	충남 서천군	민
전북 남원시	민	충남 서천군	민	충남 태안군	자유	충남 예산군	자유	충남 예산군	자유
전북 진안군	민	충남 예산군	새	전북 진안군	민	충남 태안군	무	충남 태안군	무
전북 순창군	민	충남 태안군	자유	전북 장수군	무	전북 진안군	민	전북 완주군	민
전남 광양시	민	전북 진안군	민	전남 광양시	민	전북 장수군	민	전북 진안군	민
전남 해남군	민	전북 장수군	무	전남 고흥군	민	전남 광양시	무	전북 장수군	민
전남 영암군	민	전남 광양시	민	전남 해남군	민	전남 고흥군	민	전북 순창군	민
경북 포항시	새	전남 영암군	민	전남 영암군	민	전남 해남군	민	전남 여주시	무
경북 김천시	새	전남 진도군	민	경북 포항시	새	전남 영암군	민	전남 광양시	무
경북 영주시	새	경북 김천시	새	경북 김천시	새	경북 김천시	새	전남 고흥군	민
경북 칠곡군	새	경북 영주시	새	경북 영주시	새	경북 영주시	무	전남 영암군	민
경북 예천군	새	경북 경산시	새	경북 경산시	새	경북 경산시	무	전남 진도군	민
경남 창원시	새	경북 칠곡군	새	경북 칠곡군	새	경북 칠곡군	무	경북 김천시	새
경남 사천시	새	경남 창원시	새	경남 의령군	무	경북 예천군	새	경북 영주시	무
경남 산청군	새	경남 사천시	새	경남 산청군	새	경남 산청군	새	경남 산청군	새

4-8) 사회복지 일반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지역	당적

서울 동대문구	새	서울 성동구	새	서울 성동구	새	서울 성동구	민	서울 광진구	민
서울 관악구	새	서울 광진구	새	서울 광진구	새	서울 동대문구	민	서울 중랑구	새
서울 강남구	새	서울 동대문구	새	서울 동대문구	새	서울 중랑구	새	서울 관악구	민
부산 사하구	새	서울 관악구	새	서울 관악구	새	서울 관악구	민	서울 강남구	새
부산 기장군	새	서울 강남구	새	서울 강남구	새	서울 강남구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사하구	새	부산 동래구	새	대구 서구	무
대구 서구	새	대구 동구	새	부산 강서	새	부산 사하구	새	인천 계양구	민
인천 중구	새	대구 서구	새	부산 연제구	새	부산 연제구	무	대전 대덕구	새
인천 계양구	새	울산 울주군	새	대구 동구	새	대구 동구	새	울산 울주군	새
울산 동구	무	경기 성남시	새	대구 서구	새	대구 서구	무	경기 광명시	민
경기 성남시	새	경기 광명시	새	대전 대덕구	새	대전 대덕구	새	경기 안산시	민
경기 광명시	새	경기 남양주시	새	울산 울주군	새	울산 울주군	새	강원 삼척시	무
경기 평택시	새	경기 가평군	무	경기 성남시	새	경기 성남시	민	강원 양구군	새
경기 안산시	새	강원 영월군	새	경기 광명시	새	경기 광명시	민	충북 청원군	민
강원 화천군	새	강원 평창군	새	강원 영월군	새	경기 안산시	민	충남 공주시	자유
강원 양구군	새	강원 화천군	새	강원 양구군	새	강원 양구군	새	충남 논산시	민
충북 청원군	새	강원 양구군	새	충남 금산군	자유	충남 논산시	민	충남 부여군	자유
충남 논산시	자유	충남 금산군	자유	충남 부여군	새	충남 부여군	자유	충남 당진군	자유
충남 금산군	자유	충남 부여군	새	충남 당진군	민	충남 당진군	자유	전북 남원시	민
전북 남원시	민	전북 남원시	민	전북 남원시	민	전북 남원시	민	전북 완주군	민
전북 완주군	민	전북 완주군	민	전북 완주군	민	전북 완주군	민	전북 부안군	민
경남 밀양시	민	경북 고령군	무	경북 성주군	새	경북 성주군	새	경북 성주군	새
경남 하동군	새	경남 밀양시	민	경남 밀양시	민	경남 밀양시	새	경남 밀양시	새

3. 민선5기 정권교체 기초자치단체 목록

1) 한나라당→민주당 정권교체 기초자치단체

연번	광역명	기초명	연번	광역명	기초명
1	서울	종로구	29	경기	수원시
2	서울	중구	30	경기	성남시
3	서울	용산구	31	경기	의정부시
4	서울	성동구	32	경기	안양시
5	서울	광진구	33	경기	부천시
6	서울	동대문구	34	경기	광명시
7	서울	성북구	35	경기	평택시
8	서울	강북구	36	경기	안산시
9	서울	도봉구	37	경기	고양시
10	서울	노원구	38	경기	오산시
11	서울	은평구	39	경기	시흥시
12	서울	서대문구	40	경기	군포시
13	서울	마포구	41	경기	의왕시
14	서울	양천구	42	경기	하남시
15	서울	강서구	43	경기	용인시
16	서울	구로구	44	경기	파주시
17	서울	금천구	45	경기	김포시
18	서울	영등포구	46	경기	화성시
19	서울	동작구	47	강원	원주시
20	서울	관악구	48	강원	횡성군
21	서울	강동구	49	강원	평창군
22	인천	중구	50	강원	정선군
23	인천	남구	51	충북	청주시
24	인천	연수구	52	충북	충주시
25	인천	부평구	53	충북	청원군
26	인천	계양구	54	충남	아산시
27	인천	서구	55	경남	김해시
28	대전	유성구			

2) 민주당→한나라당 정권교체 기초자치단체

연번	광역명	기초명	연번	광역명	기초명
1	충남	서산시	2	경남	밀양시

VII. 참고문헌

- 김경준·함영진·이기동. (2013).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지능정보연구』. 19(2): 141-156.
- 김미숙·정익중·김정숙. (2012). 아동의 발달단계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회 복지재정DB 학술대회 자료집.
- 김미혜·박은주·김민경. (2009).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189-213.
- 김범수·노정호. (2013).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2013년 한국정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병곤·이곤수·조덕호. (2009).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재정논집』. 21(1): 129-146.
- 김순은. (1995).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정립. 『지역사회』. 20: 22-29.
- 김승연·홍경준. (2011).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207-231.
- 김윤수·류호영.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7(2): 1-29.
- 김지윤·이병하. (2013).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38: 39-71.
- 박미옥. (2006).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광주

- 시 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5(2): 131-167.
- 박용규. (2010).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편).
- 변미희. (2002).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 7(2): 75~89
- 서상범·홍석자. (2010).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37(2): 151-177.
- 오수현·강인성. (2013). 지방자치단체 정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지출 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 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 27(2): 215-240.
- 이기우. (2005).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17(4): 5-25.
- 이승용. (2008).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 해결 방안』 . KASPA.
- 장동호. (2007).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 59(1): 239-351.
- 장동호. (20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결정요인 탐색: 일반행정부의 경직성을 고려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 35(1): 127-155.
- 제임스 번즈. (2001). 김진호·강영훈·이현출·한석지·고경민 공역. 『미국지방정치론』 . 대왕사.
- 조수현. (2009).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행정연구』 . 23(2): 101-131.
- 주상현·조현호. (2012).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영향 요인. 2012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95-119.
- 지병문·김용철. (2002).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논문집: 259-278.
- 진재문. (2006).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 5-30.
- 함영진.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 군, 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25-50.
- Key, V. O. (1950).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2nd ed.). New York: Crowell Company.
- Kleinman, M., Eastall, R., & Roberts, E. (1990). What Determines Local Authorities' Capital Expenditure on Housing? An Evaluation of Various Models. *Urban Studies*. 27(3): 401-419.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ose, R. (1984). *Understanding Big Government*. London: Sage.
- Roubini, N., & Sachs, J. D. (1989).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budget deficits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European Economic Review*. 33(5): 903-933.
- 보건복지부 (2013.6.4.).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